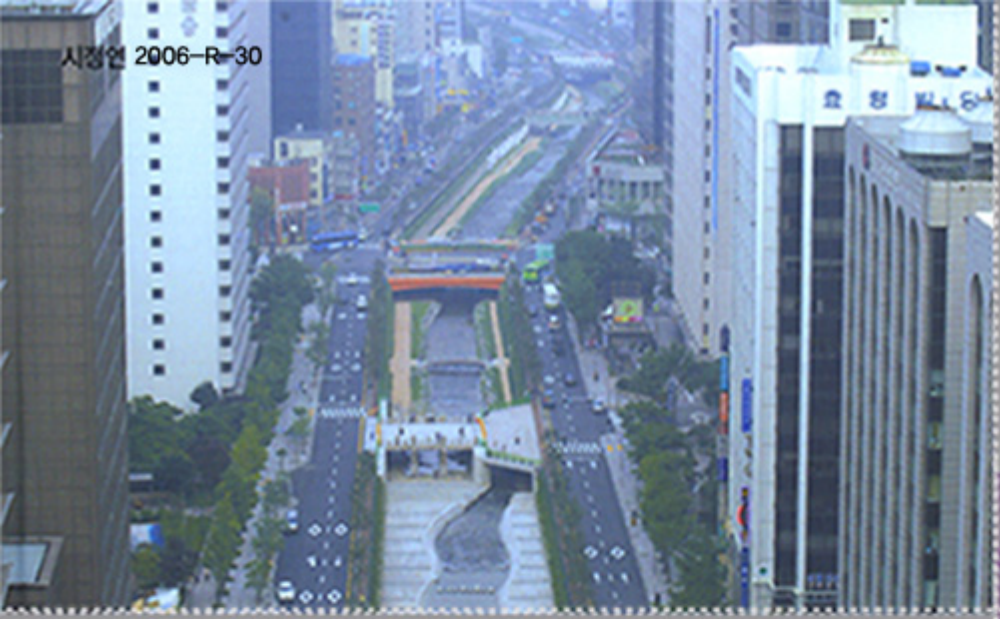
시정연 2006-R-30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방향

최경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시정연
2006-R-30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방향

The Policy Direc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eoul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연 구 진

연구책임	최 경 규	• 도시경영부 연구위원
	이 세 구	• 도시경영부 연구위원
연 구 원	진 성	• 도시경영부 연구원
자문위원	김 광 희	• KOTRA 서비스산업유치팀 팀장
	이 상 학	• 국민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이 성 봉	• 대외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 병 섭	• 순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 영 희	• 서울특별시 투자총괄 팀장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

○ 글로벌 경제의 진전과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서울시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

○ 장기적인 비전하에 서울시의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업종을 선정하여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동기

○ 한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동기를 보면 시장성장 잠재력이 가장 중요한 동기이며, 다음으로 내수시장 진출이나 기술인력 확보와 R&D 환경은 그 중요성이 다소 높아지고 있어, 투자동기가 내수시장 진출에서 기술 및 연구개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

○ 서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동기로서 시장 성장 잠재력과 내수 시장 진출이 가장 우선하며 전국에 비해 R&D 환경에 대한 평가는 높으나 생산효율성의 면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으며, 서울지역의 생산효율성을 보고 투자하는 제조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우 적음.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투자동기 및 서울시의 투자여건〉

구분		시장 성장 잠재력	내수 시장 진출	인근시 장진출 교두보	기술인 력확보	산업 인프라	생산 효율성	R&D 환경
전체	2004년	60.5	45.3	12.1	7.6	8.5	6.3	5.4
	2005년	50.4	44.0	10.4	8.88	8.88	8.0	7.2
	2006년(전국)	60.7	35.4	12.5	10.7	6.8	7.5	7.5
	2006년(서울)	64.4	34.7	8.5	11.9	4.2	1.7	11.9
제조	2004년	54.9	48.0	11.8	10.8	10.8	10.8	6.9
	2005년	44.4	52.1	10.3	10.3	10.3	9.4	7.7
	2006년(전국)	54.3	43.0	11.9	12.6	8.6	11.3	6.6
	2006년(서울)	48.5	42.4	9.1	18.2	12.1	0.0	12.1
비제조	2004년	65.0	43.3	11.7	5.0	6.7	2.5	4.2
	2005년	66.3	39.1	9.8	6.5	5.4	3.3	5.4
	2006년(전국)	69.0	27.0	12.7	8.7	4.0	3.2	8.7
	2006년(서울)	70.2	32.1	8.3	7.1	1.2	2.4	11.9

□ 서울시의 서비스업 산업에 대한 투자여건의 상대적 우위

○ 외국인투자기업의 서울시의 IT와 R&D 환경에 대한 평가가 높으며, 서울지역의 생산효율성이나 산업인프라를 보고 투자하는 제조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우 적으므로, 전략적으로 비제조업 혹은 서비스 산업을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토지제공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입장인 반면, 외국과의 접근성, 사회인프라, 기술인력, 지식자산 등은 우위에 있으므로, 우위에 있는 자체역량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미래 서울시의 산업구조에 걸맞은 업종을 선정하여 투자 유치해야 함.

□ 서울의 경영환경에 대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 서울지역의 외투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7개 항목의 만족도와 중

요도를 분석한 IPA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노무와 세무는 중점개선영역(고중요도-저만족도)에 속하고, 인력채용은 서울소재 제조업 외투기업의 경우 중점개선영역(고중요도-저만족도)에, 비제조업 기업은 노력전환영역(저중요도-고만족도)에 속한 것으로 평가함.

○ 물류와 R&D는 노력전환영역(저중요도-고만족도)에, 입지선정과 금융은 개선유보영역(저중요도-저만족도)에 포함되어 있음.

〈서울의 경영환경에 대한 IPA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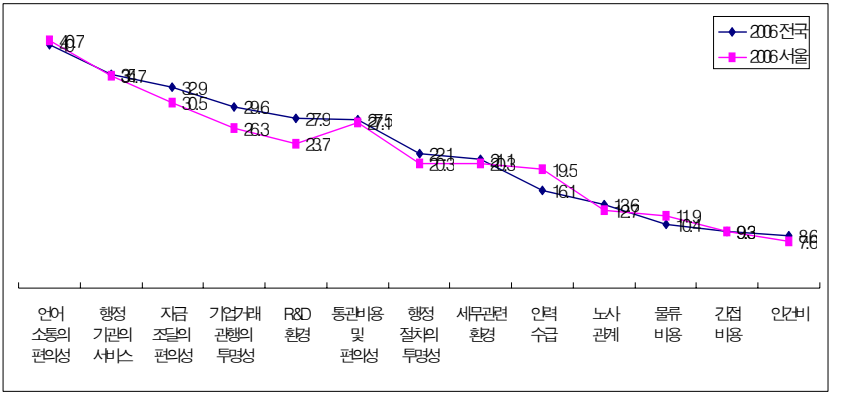
□ 경영환경의 개선도: 전국과 서울지역 비교

○ 2006년 전국 대비 서울의 경영환경 항목별 개선도 평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국의 결과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인력수급' 과 '물류비용' 에 있어서 서울이 높게 나타났고, '언어소통의 편의성' 과 '간접비용' 에 있어서 약간 높게 나타났음.

○ 반면, 'R&D 환경' 과 '기업 거래관행의 투명성' 및 '자금조달의 편의성' 은 서울이 개선도가 전국에 대한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사관계'는 약간 낮은 것으로 평가됨.

〈2006년 경영환경의 개선도: 전국과 서울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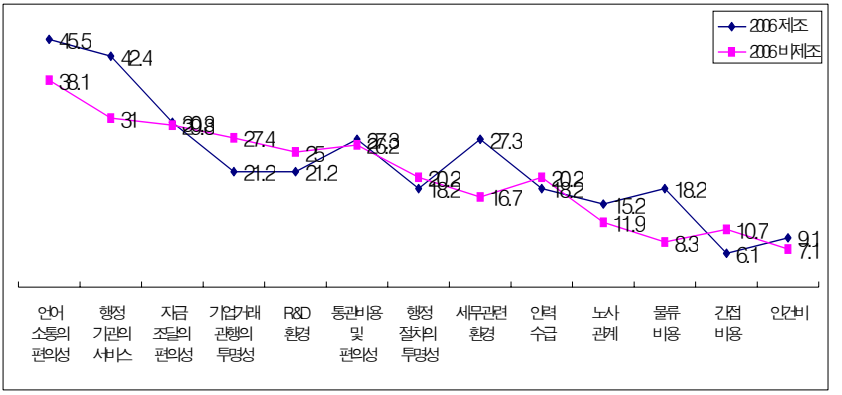


□ 경영환경의 개선도: 서울지역 제조업과 비제조업 비교

○ 서울지역의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비교하면, 비제조업이 '기업거래 관행의 투명성', 'R&D 환경', '간접비용'에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언어소통의 편의성', '행정기관의 서비스', '세무관련 환경'과 '노사관계' 및 '물류비용'에 있어서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개선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2006년 경영환경 개선도: 서울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비교〉



□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의 상존

○ 아직까지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기업 친화적 시장제도 정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과다한 공장입지 관련 규제와 물류사업 관련 규제의 완화, 행정조사 절차의 투명화 및 명료화 등의 노력을 통해 규제정도를 선진국의 경쟁도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완화할 필요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본부 설치

○ 2005년 말 현재 총 21개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가 한국에 진출하였으며, 이 중 11개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음.

– 한국에 소재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본부는 기업은 14개가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3개가 프랑스국적이며,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스웨덴 국적기업이 한국에 각 1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있음.

– 서울 소재 지역본부는 볼보건설기계코리아(기계), 클레스트라하우저만(건축자재), 한국하니웰(전기전자), 모토로라코리아(통신),

한국유리공업(요업), 텍사스인스트루먼트(전기전자), 르노삼성(자동차), 푸르덴셜자산운용(투자신탁), 켈로그아시아(식품), 유한킴벌리클라크(제지), eBay(전자상거래)의 11개 기업임.

○ 지역거점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총 21개는 거점형을 포함한 Invest Korea의 잠정추정으로서 향후 명확한 정의를 정하고 그에 따라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한국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회사명	투자가명	국적	업종	서울소재
1	볼보건설기계코리아	Volvo Korea Holding	스웨덴	기계	서울
2	클라크머티리얼핸들링아시아	Clark Material Handling	미국	운송기기	
3	클레스트라하우저만	Clestra	프랑스	건축자재	서울
4	한국하니웰	Honeywell	미국	전기전자	서울
5	보워터한라제지펄프	Bowater Nuway	미국	제지목재	
6	모토로라코리아	Motorola, Inc	미국	통신	서울
7	한국유리공업	Societe Financiere D'Administration Et De Gestion	프랑스	요업	서울
8	셀트리온	Vaxgen	미국	의약	
9	디브이에스코리아	Digital Video Systems	미국	전기전자	
10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Texas Instruments	미국	전기전자	서울
11	신광마이크로에랙트로닉스	Shinko Electric Industries	일본	전기전자	
12	대한중석초경	Iscar Int'L B.V.	화란	기계	
13	한라공조	Ford Motor Company	미국	기계	
14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Fairchild Semiconductor Corp. of California	미국	전기전자	
15	오드펠코리아	Odfjell ASA	노르웨이	물류	
16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General Motors Asia Pacific Holdings LLC.	미국	자동차	
17	르노삼성	Renault Group	프랑스	자동차	서울
18	푸르덴셜자산운용	Prudential Financial	미국	투자신탁	서울

19	켈로그아시아	Kelloggs	미국	식품	서울
20	유한킴벌리클라크	Kimberly Clark	미국	제지	서울
21	eBay	eBay	미국	전자 상거래	서울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본부에 대한 전망으로는 한국은 전반적으로 지역본부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비제조업 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서비스 시장 개방문제와 연계되어 있음.

○ 서울의 경우에도 전국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에 위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인근 시장 접근성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비제조업에서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숙련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고려사항임.

○ 한국이 지역본부 설치 국가로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항목들로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숙련된 노동력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 항목이 선정되었으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역본부 설치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인 시장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 한국이 지역본부 설치 국가로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숙련된 숙련 노동자 육성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이 지역본부를 설치하기에 부족한 사항〉 (단위: %)

구분		외국어구사 가능한 숙련된 노동력	정부 정책의 일관성	본사직원 파견에 걸맞는 생활의 질	적정한 임금수준	인근시장 접근성	선진화된 법률회계 서비스
전체	2004년	19.3	–	17.9	–	13.9	14.3
	2005년	24.4	12.8	9.6	10.4	5.2	5.2
	2006년(전국)	22.5	20.7	8.2	14.3	4.3	6.1
	2006년(서울)	25.4	23.7	11.0	10.2	6.8	5.9
제조	2004년	19.6	–	17.6	–	16.7	9.8
	2005년	24.8	10.3	12.0	12.8	–	–
	2006년(전국)	21.2	22.5	3.3	19.2	2.0	4.6
	2006년(서울)	27.3	27.3	6.1	12.1	3.0	3.0
비제조	2004년	18.3	–	18.3	–	11.7	18.3
	2005년	22.8	13.0	7.6	9.8	–	–
	2006년(전국)	24.6	19.0	13.5	7.9	7.1	7.9
	2006년(서울)	25.0	22.6	13.1	8.3	8.3	7.1

□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 전체적으로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 국민의식 국제화 > 시장 개방 확대 등이 언급되었으며,

○ 서울의 외투기업들은 국민의식 국제화 > 시장개방 확대 >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언급하여 그 순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서울의 경우, 비제조업에서의 국민의식 국제화는 42.9%로, 제조업의 30.3%에 비해 매우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 비제조업에서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대한 요구는 19%로 제조업의 33.3%에 비해 매우 낮으나, '외국어 사용 보편화' 항목에서는 비제조업이 17.9%로 제조업의 3.0%에 비해 매우 높음.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단위 : %)

구분		국민의식 국제화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시장개방 확대	투명한 기업 거래관행 확보	조세부담 완화	외국어 사용 보편화
전체	2004년	32.3	58.3	24.2	16.6	11.7	11.2
	2005년	41.6	28.4	11.6	24.4	13.6	13.6
	2006년(전국)	31.1	34.6	22.5	12.9	13.2	13.9
	2006년(서울)	39.0	23.7	34.7	11.0	10.2	13.6
제조	2004년	28.4	65.7	16.7	17.6	13.6	13.6
	2005년	39.3	38.5	–	23.9	16.2	12.8
	2006년(전국)	26.5	48.3	18.5	13.9	13.9	10.6
	2006년(서울)	30.3	33.3	33.3	12.1	12.1	3.0
비제조	2004년	35.8	52.5	30.8	15.8	–	–
	2005년	47.8	21.7	–	27.2	9.8	9.8
	2006년(전국)	37.3	18.3	27.0	11.1	12.7	17.5
	2006년(서울)	42.9	19.0	34.5	10.7	9.5	17.9

□ 외투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기반 구축이 미비함.

○ 통계는 정책수립과 결정 및 집행에서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기본 자료이나, 현재 외국인 투자 기업과 관련하여 정례적인 통계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보다 정치하고 현실 밀착형 정책수립을 위해 통계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가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Ⅱ. 정책건의

1. 투자유치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전략적 접근에 의한 유치

○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동기와 결정 요인

을 분석하고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투자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산업 자체의 성장성,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서울시의 내부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서비스업종을 전략적으로 선정

– 이러한 맥락에서 도소매(유통), 금융·보험,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 의료·관광, 문화·관광, 컨벤션 분야를 향후 7대 핵심서비스산업으로 선정하고 해외 직접투자 유치 노력을 경주

〈핵심서비스산업 선정〉

	성장성	타산업에의 파급효과	국내 내부역량	최종선정
도소매(유통)	×	○	△	√
음식·운수	×	×	△	
교통·운수	△	△	△	
금융·보험	○	○	×	√
부동산	△	△	△	√
비즈니스서비스	○	○	△	√
통신·방송	○	○	○	
교육	△	○	×	
의료·관광	○	△	○	√
문화·관광	○	○	△	√

주: 평가가 높은 순서대로 ○ 〉 △ 〉 ×

○ 외국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되, 제한된 자원 역량을 감안하여 지역거점기업과 투자지역을 다각화하여 전략적으로 투자 유치

– 기존의 양적 성장 추구에서 벗어나 기술주도 성장에 필요한 투자유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역거점기업 유치와 R&D 및 비즈니스 거점의 형성으로 동북아 중심국 지향이 필요

– 투자유치 지역을 다각화하여 기존의 미국, 일본 구도의 투자유치

지역에서 벗어나 높은 투자여력을 보유한 유럽지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 유치

2. 서비스 산업에 대한 거시 경제적 환경조성

○ 비제조업 특히 서비스 산업의 경우 거시 경제적 환경 및 인적 자원의 수준, 생활환경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제반 환경 조성에 주력하여야 함.

○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정부의 진입규제와 이익집단의 진입규제 해소와 연계하여 상호정책 간에 순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

〈서비스 부문 직접투자 유치의 결정 요인〉

구분	효과	중요성
시장규모	+	◎
경제의 개방성	+	△
경제성장률	+	◎
세율	−	△
투자국과 현지국 거리	−	△
국가투명성	+	○
국가위험도	−	○
노사분규	−	○
정주환경	+	○
인적자원 수준	+	◎
투자인센티브	+	△

3. 규제완화

○ 규제완화를 통하여 국내자본의 서비스부문 유입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되, 공장입지 및 물류사업 관련 규제의 완화, 행정조사 절차의 투

명화 및 명료화 등을 통해 규제정도를 선진국의 경쟁도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규제정책과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이 상충할 경우 정책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조정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정

○ 서비스산업에 대한 직접투자 유치방안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산업정책 범주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연계로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 자유무역협정(FTA)의 순차적인 체결에 의해 전체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되 국내 산업에의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4.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정책협력

○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에 직접투자에 대한 경쟁은 투자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지나친 인센티브 제공 및 중복된 투자 유치 노력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공식적·비공식적 협의체의 운용을 통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

○ 또한 타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경쟁지역과도 정책협의 등을 통해 상호보완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

– 동북아의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지와도 경쟁적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 관련 업종을 투자하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

□ 기술이전을 위한 국내기업의 학습역량 제고

○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하여 기술이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흡수능력이 있어야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못지않게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학습능력 제고와 관련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통계 및 성과관리 시스템의 정비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 투자 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련기관(국세청, 관세청, 외투주무부처, 투자진흥기관 등)의 활동정보를 공유하고,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포지션 변화를 업데이트 하여야 할 것

○ 외국인투자의 성과지표관리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해선 보다 좋은 체계적인 성과관리 모니터링 체계의 개발이 필요

□ 적극적인 유치 광고

○ 세계 기업인이 많이 구독하는 유명한 경제저널(Economist, Fortune, Business Week 등)에 서울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게제하며 서울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과 관련되어 세계적인 산업전문지에 투자지로서의 매력, 유망 산업소개, 투자관련 연락 등을 게재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1. 연구범위 ····· 3

2. 연구목차 ····· 5

3. 진행상황 ····· 6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 7

제1절 국내외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7

1. 개요 ····· 7

2. 해외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10

3.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17

제2절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29

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29

2.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 33

제3절 국내외 외국인직접투자 우수사례 ····· 39

1. 해외 외국인직접투자 사례 ····· 39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사례 ····· 62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제도 ····· 73

제1절 개요 ····· 73

제2절 국내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제도 ·····74
1.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방향 ·····74
2. 외국인투자의 자유화와 그 제한 ·····75
3.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78
4.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90
제3절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제도 ·····93
1.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93
2. 수도권 정비 계획법 ·····97
3. 서울시 외국인투자 관계 회의 운영 ·····100
4. 투자 허브의 구축 ·····102
5. 외국인 생활환경 여건 ·····104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의 실태조사 ·····109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09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 경영성과 ·····110
1. 경영성과 조사기업의 현황 ·····110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116
3.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 ·····124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 경영환경 ·····127
1. 경영환경 만족도 ·····128
2. 지역본부(regional hub) 설치 ·····151
3. 한국 시장의 전망과 외국인투자 유치확대 ·····155

제5장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 ·····163
제1절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163
제2절 서비스시장 직접투자 유치의 장애요인 ·····165

1. 일반적 장애요인 ·····165
2.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167
제3절 서비스업종의 전략적 유치 ·····172
1. 서비스업종의 전략적 선정 ·····172
2. 투자유치의 전략적 접근 ·····175
3. 투자지원체제 개선 ·····178

제6장 결론 ·····181
제1절 요약 ·····181
제2절 정책건의 ·····185

참고문헌 ·····189

영문요약 ·····193

표 목 차

<표 2-1> 주요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투자 (유량) ·····11
<표 2-2> 주요국 GFCF 및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유입과 투자 ·11
<표 2-3>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성과지수와 잠재성 지수 ···14
<표 2-4>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성과지수와 잠재성지수 ·····14
<표 2-5>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유량) ·····16
<표 2-6>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저량) ·····17
<표 2-7> 외국인 직접투자 연도별 투자실적 ·····18
<표 2-8>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19
<표 2-9>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별 투자실적 ·····21
<표 2-10>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22
<표 2-11> 외국인 직접투자 업종별 투자실적 ·····23
<표 2-12> 투자유형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26
<표 2-13> 외국인 직접투자 투자방식별 투자실적 ·····27
<표 2-14>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별 투자실적 ·····28
<표 2-15>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29
<표 2-16> 서울시 외국인투자현황 ·····30
<표 2-17> 서울시 투자업종별현황 ·····31
<표 2-18> 외국인투자 현황 ·····33
<표 2-19> 특허 등 출원 현황 ·····36
<표 2-20> 고용창출 ·····55
<표 2-21> 분야별 고용창출 수 ·····55
<표 2-22> IDA지원기업(아일랜드투자기업)의 국가별 분류 ·····56
<표 2-23> 신규투자건수 (2002년) ·····56

<표 2-24> 4개국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비교 ·····61
<표 2-25> 2대 R&D 중심 및 7대 핵심 연구시설 ·····66
<표 3-1>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76
<표 3-2>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77
<표 3-3> 조세감면대상기업 ·····79
<표 3-4> 조세감면 내용 ·····81
<표 3-5>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현황 ·····82
<표 3-6> 현금지원 내역 ·····84
<표 3-7> 입지지원 내용 ·····86
<표 3-8>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주요 산업입지제도 ·····88
<표 3-9> 재정지원 내용 ·····90
<표 3-10>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내용 ·····93
<표 3-11> 면세 내용 ·····94
<표 3-12> 재정지원 내용 ·····95
<표 3-13> 현금지원 내용 ·····96
<표 3-14> 서울시 외국인투자 관계 회의 ·····101
<표 4-1> 외국인의 최초 투자방식 ·····110
<표 4-2> 외국인 투자형태 ·····111
<표 4-3> 제조업에서의 제1대 외국인 투자자와의 관계 ·····111
<표 4-4> 제1대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 ·····112
<표 4-5> 외국인투자 기업의 연구소 보유 여부 및 형태 ·····113
<표 4-6>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소(부서)의 기능 ·····114
<표 4-7>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협력형태 ·····115
<표 4-8> 외국인투자 기업의 연구 성과 ·····115
<표 4-9>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수익성 비교 ·····117
<표 4-10> 국내기업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률 ·····118

<표 4-11> 국내기업대비 부가가치율 ·····120
<표 4-12> 국내기업대비 노동생산성 ·····122
<표 4-13> 국내기업대비 설비투자효율 ·····124
<표 4-14>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 ·····126
<표 4-15>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투자동기 ·····130
<표 4-16>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만족도 ·····131
<표 4-17> 전국의 경영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132
<표 4-18> 서울의 경영환경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135
<표 4-19> 인력수급 개선도 평가 ·····136
<표 4-20> 지가, 사무실 임차료 등 간접비용 개선도 평가 ·····137
<표 4-21> 인건비 개선도 평가 ·····137
<표 4-22> 노사관계 개선도 평가 ·····138
<표 4-23> 세무 관련 환경 개선도 평가 ·····139
<표 4-24> 물류 비용 개선도 평가 ·····140
<표 4-25> 통관 비용 및 편의성 개선도 평가 ·····140
<표 4-26> 자금조달 편의성 개선도 평가 ·····141
<표 4-27> 기업 거래관행의 투명성 개선도 평가 ·····142
<표 4-28> 행정절차의 투명성 개선도 평가 ·····142
<표 4-29> 행정기관의 서비스 개선도 평가 ·····143
<표 4-30> 언어소통의 편의성 개선도 평가 ·····144
<표 4-31> R&D 환경 개선도 평가 ·····145
<표 4-32> 외국인투자 경영환경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비교분석 ·····147
<표 4-33> 한국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151
<표 4-34> 지역본부 설치를 위한 국가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153
<표 4-35> 외국인투자기업 지역본부 설치 적합성 평가 ·····154
<표 4-36> 한국이 지역본부 설치 국가로 부족한 사항 ·····155

<표 4-37> 향후 3년간 한국시장의 영업 전망 ·····156
<표 4-38> 향후 3년간 한국시장의 외국인투자 확대 가능성 ·····157
<표 4-39> 한국시장의 전망과 외국인투자 (2004~2006) ·····158
<표 4-40>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159
<표 5-1> 2006년도 글로벌화 지수(Index of Globalization) 순위 ···166
<표 5-2> 서비스 업종별 FDI 제한지수 ·····168
<표 5-3> 서비스 부문 직접투자 유치의 결정 요인 ·····174
<표 5-4> 핵심서비스산업 선정 ·····174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4
<그림 2-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투자 ·····12
<그림 2-2>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투자 ·····13
<그림 2-3>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백만 달러) ·····20
<그림 2-4> 외국인 직접투자 M&A 금액 ·····21
<그림 2-5> 외국인 직접투자 Greenfield 금액 ·····22
<그림 2-6> 외국인 직접투자 업종별 투자실적 금액별 대비 ·····25
<그림 2-7> 외국인 직접투자 업종별 투자실적 건수별 대비 ·····25
<그림 2-8> 외국인 직접투자 시점별 투자실적 ·····27
<그림 2-9>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별 투자실적 ·····28
<그림 2-10> 외국인 투자현황(전국/서울대비) ·····30
<그림 2-11> 서울시 투자업종별현황 ·····31
<그림 2-12> GDP대비 R&D 투자(%) ·····37
<그림 2-13> 투자유치경쟁력 4대 요소 ·····64
<그림 4-1> 국내 기업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률 비교 ·····119
<그림 4-2 > 국내기업대비 부가치율 비교 ·····121
<그림 4-3> 국내기업대비 노동생산성 ·····122
<그림 4-4> 국내기업대비 설비투자효율 비교 ·····124
<그림 4-5> 전국의 경영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IPA 결과 ·····133
<그림 4-6> 서울의 경영환경에 대한 IPA 결과 ·····135
<그림 4-7>연도별 최초 투자시점 대비 경영환경 개선도 평가 – 긍정률 145
<그림 4-8> 2006년 전국과 서울의 비교 ·····146
<그림 4-9> 2006년 서울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비교 ·····147

제 Ⅰ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경제의 진전과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가 및 지역의 산업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에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적극지원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에 의한 직접투자는 글로벌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투자의 주체인 다국적기업과 우리 경제의 이해관계가 양자 간 상생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함.

○ WTO의 보고서에 따르면 FDI 유입은 자본 형성효과, 기술과 경영 노하우 전파효과, 수출시장 접근 효과, 기업가 양성 및 전후방 연계 효과, 경쟁효과, 고용효과, 국제수지와 거시경제안정 효과의 7가지 주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Moosa(2002)에 따르면 자본확충 효과, 생산과 성장효과, 고용과 임금효과, 국제수지 효과, 무역 효과, 생산성 효과, 기술 효과, 훈련 효과, 산업간 연계 효과, 시장구조 효과, 환경 효과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함.

○ Dunning(1994)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환유입, 지역개발, 고용창출, 기술이전 등과 같은 외부경제효과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시장 내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투자유치국의 경쟁력(competitiveness) 및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다음과 같이 향상시킨다고 함.

– 첫째, 외국인투자기업과 네트워킹을 통해 생산요소비용을 절감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킴.

– 둘째, 연관사업 조성 및 계열화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생산공정과 조직구조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셋째, 경쟁을 통해 국가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이룰 수 있음.

– 넷째, 해외시장(해외고객)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

– 다섯째, 노동시장의 유연화, 직업재훈련, 관료주의의 비효율성 제거 등을 통해서 저비용 인프라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위와 같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경제현안에 활용하고자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서울산업경제의 경쟁력제고와 현재의 산업기반의 보완 및 견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국기업의 서울투자증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인 정책방향의 정립과 시책의 개발이 필요

2. 연구목적

○ 투자자유화의 진전,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는 직접투자 유입 등 우리나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서울시에 적합한 외국인투자유치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장기적 정책비전과 유치 전략의 개발이 필요함.

○ 직접투자는 국내산업과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

한 면에서 직접투자는 실물경제 혹은 산업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서울시의 산업경쟁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투자국과 투자유치업종을 파악하고자 함.

○ 이에 서울시의 외국인투자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장기적인 비전하에 서울시의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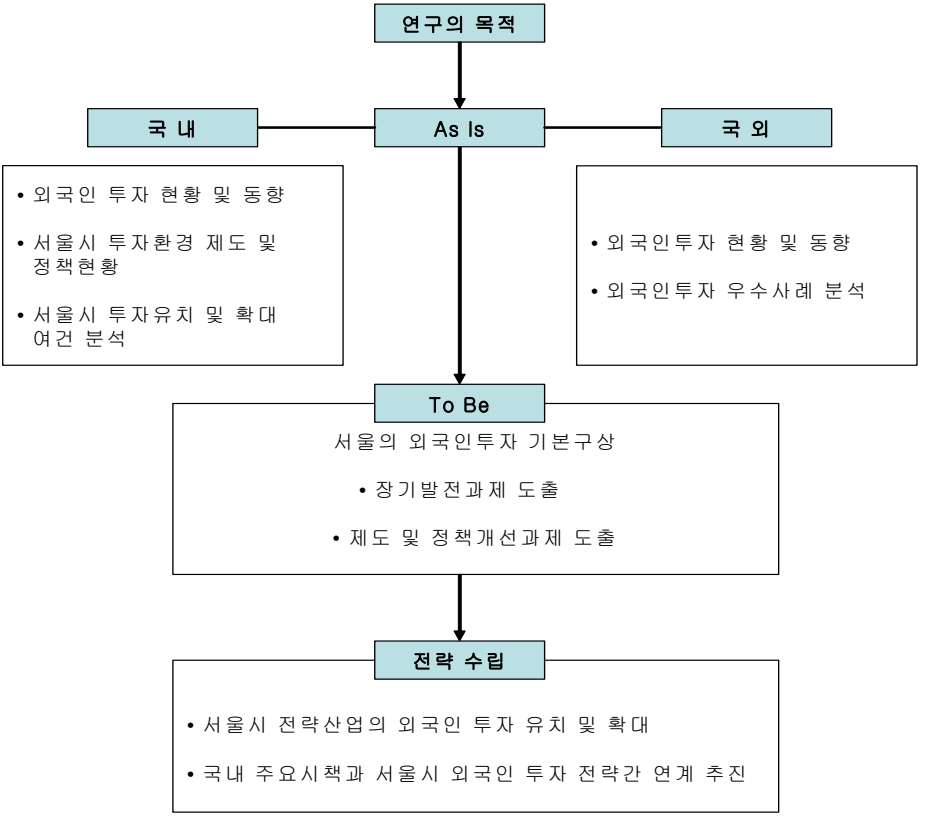
1. 연구범위

○ 국내외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사례로서 3대 경제자유구역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해외사례로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및 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

○ 국내의 현행 외국인직접투자 제도 및 정책 등의 투자환경을 조사하고, 서울시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을 분석

○ 추가적인 서비스시장 개방정책의 틀에서 서울시의 유망한 외국인투자 타깃팅 업종의 발굴

○ 서울시의 특성 및 산업정책(서비스산업 중점)에 맞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투자확대를 위한 장·단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반확보 및 제도정비 방안제시


연구의 목적
국 내
As Is
국 외
• 외국인 투자 현황 및 동향
• 서울시 투자환경 제도 및 정책현황
• 서울시 투자유치 및 확대 여건 분석
• 외국인투자 현황 및 동향
• 외국인투자 우수사례 분석
To Be
서울의 외국인투자 기본구상
• 장기발전과제 도출
• 제도 및 정책개선과제 도출
전략 수립
• 서울시 전략산업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확대
• 국내 주요시책과 서울시 외국인 투자 전략간 연계 추진

〈그림 1-1〉 연구흐름도

2. 연구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제1절 국내외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제2절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제3절 국내외 외국인직접투자 우수사례 분석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국내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제도

제3절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제도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의 실태조사

제1절 실태조사 개요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 경영성과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 경영환경

제5장 서울시 직접투자 유치방안

제1절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제2절 서비스산업 투자유치의 장애요인

제3절 서비스업종의 전략적 유치

제6장 서울시 직접투자 유치방안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3. 진행상황

월별	연구진행상황
2월 ~ 4월	○ 외국인투자에 대한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조사 ○ 전문가초빙 착수자문회의 (2006. 2. 27) ○ 국내외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파악 ○ 국내 및 서울시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제도와 정책 고찰
5월 ~ 7월	○ 서울시 외국인투자의 특징 및 분류, 현황 검토 ○ 서비스업과 관련한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조사 ○ 설문지 작성 및 파일럿 서베이 ○ 전문가초빙 중간자문회의 (2006. 7. 18) ○ 설문조사 및 대표적 외국인직접투자 기업 심층인터뷰
8월 ~ 11월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제안의 도출 ○ 전문가초빙 최종자문회의 (2006. 12. 4) ○ 최종보고서 완성 (2006년 12월초)

제 II 장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

제1절 국내외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제2절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제3절 국내외 외국인직접투자 우수사례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제1절 국내외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개요

□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국내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일컬음.

○ 한편 합작투자계약서, 기타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10%미만이라 할지라도 외국인 직접투자에 해당

○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까지 외국인직접투자의 범주에 포함

□ 최근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세 가지 형태[1](Shatz and Venables, 2000)

○ 수직적 투자(vertical FDI)

---

1) Shatz, H. J. and A. J. Venables, 2000, "The Geography of International Investment," In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ed. G. L. Clark, M. P. Feldman, and M. S. Gertl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125-145.

– 마케팅, 경영 그리고 R&D와 같은 기업 고유의 자산은 이러한 자산이 사용되는 국가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며, 외국인직접투자 대상국의 선택은 생산비용의 격차에 따라 생산공장을 선진국에서 임금비용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

– 저개발국에 투자하여 저렴한 생산비용으로 생산하고 선진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로 주로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부합

○ 수평적 투자(horizontal FDI)

– 현지수요에 따라 투자하며, 대부분의 서비스업의 경우 비교역재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소비가 있는 시장이나 지역에 투자

– 생산비용보다는 주로 투자 대상국의 수요에 의존하여 고부가가치나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 집적효과(agglomeration)에 기인한 투자

– 산업의 지역적 집적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에 기인하며, 이러한 외부효과는 생산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집적을 더욱 강화

– 자본과 사회간접자본이 충분하지 못한 저개발국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유인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형태의 경제특구지역이 여기에 해당

□ 서비스산업에 있어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효과

○ 투자자금 유입에 의한 자본형성과 외환 확보효과

–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에 따른 자본형성효과는 저개발국가를 제외하고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직접 조달되어 그리 크지 않음.

○ 생산 및 고용효과

- 생산효과는 가장 중요한 효과의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 자체를 유치하거나 직접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설립된 기업의 경우, 국내기업보다 우수한 경영기법, 마케팅 기법 등을 보유한 외국인에 의해 경영됨으로써 기업자체의 생산성 상승효과가 발생
- 고용효과는 기대한 것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으며, 특히 M&A를 통한 FDI의 경우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고용이 감소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 고용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전후방 연관효과(forward-backward linkages)를 통해 타산업의 고용도 증대시킬 수 있음.

○ 기술 및 지식파급효과(technology & knowledge spillover effect)

- 선진국의 신기술과 신경영기법이 전파(spillover)되어 경쟁력 향상과 경제성장에 기여
- 다국적기업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배우는 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와 다국적기업에서 기술을 체화한 고용자들이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생기는 교육훈련효과(training effect)에 의해 이루어짐.

○ 경쟁효과 혹은 구조조정효과

- 신자본이나 시업의 유입은 기존 국내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기존기업이 기술파급효과로 인한 경쟁력강화로 시장경쟁의 정도가 강화되는 경쟁효과(competition effect)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내기업의 투자나 시장점유율을 구축하는 반경쟁효과(anti-competition effect)가 나타날 수도 있음.

○ 교역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

- 제조업 중심의 저개발국의 가장 중요한 외자유치 요인으로서, 서

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외자유치에 의한 수출증대효과는 상대적으로 감소

- 서비스업의 경우 시장추구적이고 비교역재적이므로 수출에 의한 외환획득은 고사하고 현지에서 얻는 이익의 모국에 대한 송금(repatriated profit) 등으로 인해 국제수지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보험·은행 등의 중간재적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간접적으로 산업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호텔 등에 대한 투자는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짐.

2. 해외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해외 외국인직접투자의 전반적인 동향

□ 2004년 이후 FDI 유입의 증가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1조 4천억 달러로 2000년에 최고치를 이룬 이후 3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04년 개도국으로의 FDI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UNCTAD, 2006).

○ 또한 TNC(Trade Negotiation Committee)와 IPA(Investment Promotion Agency), 그리고 정부 기관들 간에 2006~2007년 기간 동안의 FDI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UNCTAD, 2004).

〈표 2-1〉 주요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투자 (유량) (단위: 10억 달러)

지역/국가	FDI 유입 (inflows)			FDI 투자 (outflows)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전세계	716.1	632.6	648.1	652.2	616.9	730.3
선진국	547.8	442.2	380.0	599.9	577.3	637.4
네덜란드	25.0	19.3	- 4.6	33.9	37.8	1.5
영국	24.0	20.3	78.4	50.3	66.5	65.4
아일랜드	29.0	26.9	9.1	10.3	3.5	- 7.4
일본	9.2	6.3	7.8	32.3	28.8	31.0
개도국	155.5	166.3	233.2	47.8	29.0	83.2
아시아	92.0	101.4	147.6	36.0	17.2	69.4
한국	3.0	3.8	7.7	2.6	3.4	4.8
중국	52.7	53.5	60.6	2.5	- 152	1.8
홍콩	9.7	13.6	34.0	17.5	5.5	39.8
싱가포르	5.8	9.3	16.1	4.1	3.7	10.7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GDP 대비 FDI의 유량과 저량에서 투자가 유입보다 많으며, 개도국의 경우 유입이 투자를 2배 이상 상회하고 있음.

- 다만, 선진국 중 아일랜드의 경우, 유입이 투자의 수배에 달하고,
- 개도국 중에는 싱가포르가 유입이 투자를 수배 상회하고 있으며, 홍콩의 경우는 2004년 현재 유입, 투자 모두 GDP의 2.5배 가량 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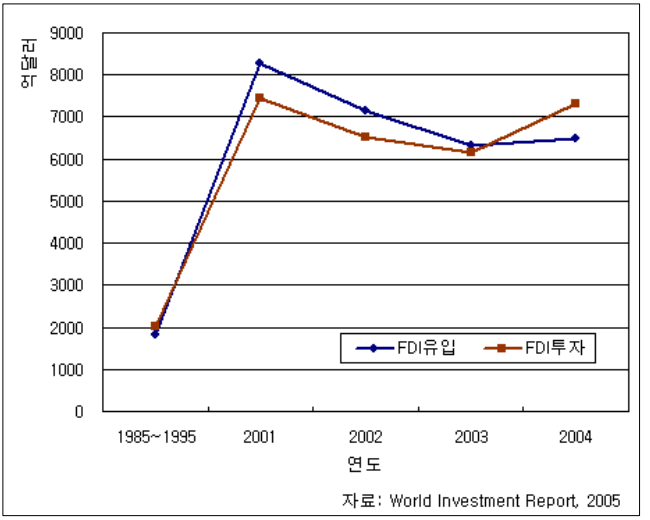
〈표 2-2〉 주요국 GFCF 및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유입과 투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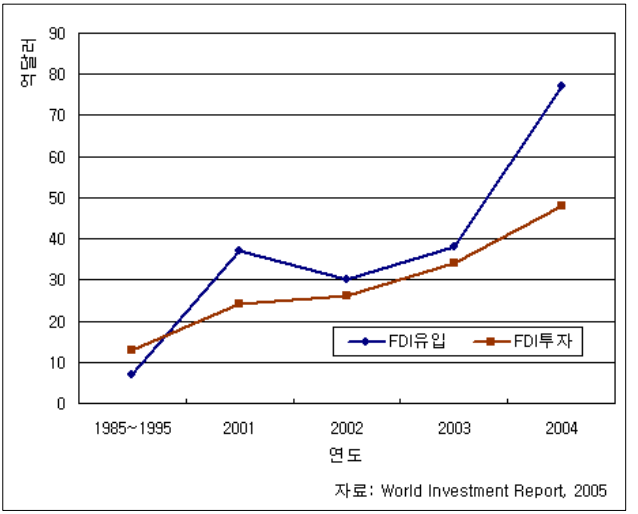
지역/국가		GFCF 대비 FDI 유량의 비율			GDP 대비 FDI 저량의 비율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전세계	유입	10.6	8.3	7.5	8.4	18.3	21.7
	투자	*9.7*	*8.2*	*8.7*	*8.7*	*19.7*	*24.0*
선진국	유입	10.9	7.9	6.1	8.2	16.3	20.5
	투자	*12.0*	*10.3*	*10.3*	*9.6*	*21.5*	*27.3*

네덜란드	유입	28.7	18.7	- 3.9	23.3	65.8	74.2
	투자	38.9	36.5	1.2	36.3	82.4	94.4
영국	유입	9.3	6.9	21.9	20.6	30.5	36.3
	투자	*19.5*	*22.7*	*18.2*	*23.2*	*62.4*	*64.8*
아일랜드	유입	106.2	74.9	20.1	88.9	134.1	126.3
	투자	*37.9*	*9.9*	*- 16.3*	*27.0*	*29.5*	*52.9*
일본	유입	1.0	0.6	0.7	0.3	1.1	2.1
	투자	*3.4*	*2.8*	*2.8*	*6.6*	*5.8*	*7.9*
개도국	유입	9.5	8.8	10.5	9.8	26.2	26.4
	투자	*2.8*	*1.6*	*4.2*	*4.3*	*13.6*	*12.7*
아시아	유입	7.7	7.3	9.1	8.7	26.9	23.2
	투자	*3.1*	*1.3*	*4.4*	*3.6*	*16.1*	*13.4*
한국	유입	1.9	2.1	3.8	2.1	8.1	8.1
	투자	*1.6*	*1.9*	*2.4*	*0.9*	*5.8*	*5.8*
중국	유입	10.4	8.6	8.2	5.8	17.9	14.9
	투자	*0.5*	-	*0.2*	*1.3*	*2.6*	*2.4*
홍콩	유입	26.4	39.4	92.1	60.3	275.4	277.6
	투자	*47.6*	*15.9*	*107.6*	*15.9*	*234.9*	*246.5*
싱가포르	유입	25.6	41.7	62.7	83.1	123.1	150.2
	투자	*18.0*	*16.5*	*41.6*	*21.3*	*62.1*	*94.5*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그림 2-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투자



〈그림 2-2〉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투자

□ 주요국의 FDI 성과지수와 잠재성 지수

○ UNCTAD가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성과지수와 잠재성지수에서 한국은 대만, 러시아,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H-L(높은 잠재성과 낮은 성과) 그룹에 들어감.

– 아랍 에미리트는 현재 H-L 그룹에 속하고 있으나, 두바이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유인정책 마련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현재 높은 성장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BRICs 국가 중 브라질과 중국은 H-H(높은 잠재성과 높은 성과) 그룹에 포함된 반면, 러시아는 H-L 그룹에 속하며, 인도는 L-L(낮은 잠재성과 낮은 성과) 그룹에 속함.

○ 본 보고서에서 성공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사례국으로 소개한 네덜

란드, 싱가포르, 아일랜드는 H-H 그룹에 속함

〈표 2-3〉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성과지수와 잠재성 지수

	High FDI Performance	Low FDI Performance
High FDI Potential	네덜란드, 베트남, 브라질, 싱가포르, 아일랜드, 중국, 홍콩	대만, 러시아, 미국, 아랍에미리트, 영국, 일본, 한국
Low FBI Potential	몽골, 루마니아, 수단,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이집트, 인도, 터키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성과지수 추이는 1990년 81에서 2000년 93, 2003년 116로 증가하다가 2004년에는 109로 감소하였으며, 잠재성지수는 1990년 21, 2000년 19, 2003년 20로 변화가 없음.

○ BRICs 국가 중 브라질과 중국은 지속적으로 H-H에 속하는 국가이지만 러시아와 인도는 성과지수가 지속적으로 향상됨.

〈표 2-4〉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성과지수와 잠재성지수

	FDI 유입의 성과 지수				FDI 유입의 잠재성 지수			
	1990	2000	2003	2004	1990	2000	2003	2004
남아프리카	107	114	78	126	54	74	73	–
네덜란드	13	9	18	68	8	7	11	–
대만	50	111	117	125	22	21	21	–
러시아	–	104	97	88	–	39	27	–
루마니아	–	64	57	35	–	94	81	–
몽골	–	63	17	9	42	88	90	–
미국	41	74	111	114	1	1	1	–
베트남	47	38	47	50	78	72	68	–

브라질	78	46	52	62	52	66	70	–
수단	108	62	24	18	116	125	116	–
싱가포르	1	6	6	8	15	2	5	–
아랍 에미리트	92	136	95	104	26	23	22	–
아일랜드	52	4	5	5	27	15	10	–
영국	11	28	85	78	3	3	3	–
이집트	14	106	124	108	70	70	75	–
인도	98	120	118	112	76	91	85	–
일본	104	128	136	134	13	11	16	–
중국	46	52	42	45	41	44	38	–
콜롬비아	42	81	69	69	58	86	103	–
터키	69	124	106	111	63	73	72	–
한국	81	93	116	109	21	19	20	–
홍콩	3	2	8	7	20	12	15	–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1) 세계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비교해보면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에 대한 유입액이 많으며 선진국은 개도국에 비해 서비스업에 대한 유입액이 상대적으로 많음.

– 1989~1991년 동안 선진국과 개도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각각 55%와 29%이었으나, 2001~2003년 동안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여 각각 71%와 49%로,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유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서비스업 유입의 동향을 비교하면 제조업 분야의 투자나 무역거래를 보조하기 위한 투자형태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월한 무형의 자산(ownership advantage)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찾는 형태로 비중이 증가

– 1989~1991년 동안의 금융 및 보험 그리고 도소매업이며, 2001~2003년 동안에는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으로, 이 기간 동안 선진국에 대한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업 유입이 두드러짐.

〈표 2-5〉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유량) (단위: 10억 달러)

	1989-1991			2001-2003		
산업	선진국	개도국	세계	선진국	개도국	세계
1차산업	9.6	3.7	13.3	34.3	14.6	51.6
제조업	50.9	16.9	67.8	96.4	69	167.2
서비스업	82.7	12	94.7	353.4	103.4	461
전기, 가스 및 수도	0.9	1.2	2.1	18.6	5.5	24.3
건설	0.5	0.7	1.2	3	2	5.2
도매 및 소매	16.4	2.6	19	32.9	14.8	49
숙박 및 음식	3.8	1	4.7	1.3	0	2.7
운수 및 통신	1.7	1.3	3	60.3	14.1	75.8
금융 및 보험	33.8	2.6	36.4	92.6	20.9	114.1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11.6	1.6	13.2	98.3	34.1	133
공공행정 및 국방	2.4	–	2.4	2.6	–	2.6
교육서비스	0	0	0.01	0	0.04	0.04
보건 및 사회복지	0.1	0	0.1	-0.2	0.2	-0.1
오락 및 운동	2.4	0	2.4	5.1	3.6	8.7
기타서비스	8.2	0.7	8.7	32.7	3.9	36.6
분류 안 된 서비스업	0.9	0.4	1.3	6	3.1	9.1
분류 안 된 산업	7.6	4	11.6	11.6	6.0	18.3
계	233.5	48.7	281.91	848.9	295.24	1159.14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표 2-6〉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저량) (단위: 10억 달러)

산업	1990			2003		
	선진국	개도국	세계	선진국	개도국	세계
1차산업	145.4	24.7	170.1	428.8	144	594.3
제조업	595.1	150.4	745.6	2081.7	779.1	2876.1
서비스업	717.2	158	875.1	4015.6	1110.8	5153.8
전기, 가스 및 수도	6.8	2.8	9.6	143.7	41	1185.9
건설	15.9	5.3	21.2	56.4	38.2	95.4
도매 및 소매	191.2	24.4	215.6	762.9	152.4	920.8
숙박 및 음식	20.3	4	24.3	66.2	24	90.6
운수 및 통신	15.4	12	27.4	343.9	90.3	445
금융 및 보험	264.7	88.9	353.6	1299.2	251.1	1555.1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107.3	14.3	121.6	1.8	0.3	2.3
공공행정 및 국방	–	0.1	0.1	1.8	0.4	2.3
교육서비스	0.1	–	0.1	0.5	0	0.5
보건 및 사회복지	1	–	1	9.4	4.4	13.8
오락 및 운동	12.8	0	12.8	68.1	5.2	73.5
기타서비스	68.6	4.5	73.1	369.4	36.7	4.6.2
분류 안 된 서비스업	13.2	1.7	14.8	63	18.8	81.8
분류 안 된 산업	8.8	4.2	13.1	57.1	74.9	135.2
계	2183.8	495.3	2679.1	9769.5	2771.6	13226.4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3.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전반적 동향

□ 국내의 외국인직접투자 연도별 변화추이

○ 국내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연도별 및 산업별 변화추이를 보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 1997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0

년 들어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자유화의 확대와 부실기업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의 진행, 그리고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을 촉진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이 시행됨에 따른 결과로 평가됨.

〈표 2-7〉 외국인 직접투자 연도별 투자실적 (단위: 건, 백만 달러, 증감률 %)

연 도		신고기준		도착기준	
연 도	건수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98	1,401	8,853	27	5,308	71.7
1999	2,103	15,531	75.4	10,851	104.4
2000	4,143	15,248	△1.8	10,238	△5.7
2001	3,344	11,286	△26.0	5,055	△50.6
2002	2,409	9,093	△19.4	3,804	△24.8
2003	2,565	6,469	△28.9	5,130	34.9
2004	3,075	12,788	97.7	9,262	80.5
2005	3,668	11,564	△9.6	9,643	4.1
2006. 1/4	861	2,210	△29.3		

자료: 산업자원부, 2006.

□ 국내의 외국인직접투자 산업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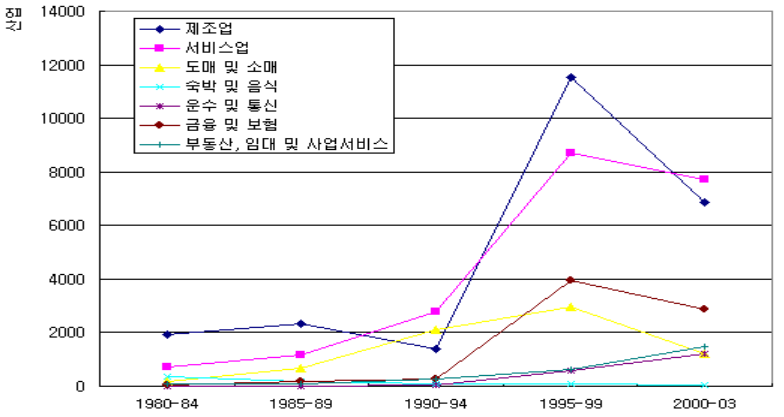
○ 1980~82년 동안의 제조업의 비중은 73%이고 2000~2003년 들어 그 비중이 47%로서 제조업의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비중은 27%에서 53%로 증가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서비스업의 경우, 주로 도소매(유통), 숙박 및 음식, 금융 및 보험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1990년대 들어 금융 및 보험 분야 및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에 대한 투자유입의 증가가 두드러짐.

〈표 2-8〉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1980-84	1985-89	1990-94	1995-99	2000-03
1차산업	0.2	8.9	6.1	45.3	4.6
	(0.0)	(0.3)	(0.2)	(0.2)	(0.0)
제조업	1914.7	2338.4	1411.2	11544.6	6874.3
	(73.2)	(66.6)	(33.6)	(56.9)	(47.1)
서비스업	699.6	1163.0	2785.5	8684.2	7718.0
	(26.8)	(33.1)	(66.3)	(42.8)	(52.9)
전기, 가스 및 수도	0.0	0.0	0.0	342.2	394.3
건설	5.0	26.8	12.3	99.0	240.3
도매 및 소매	201.8	656.2	2101.5	2958.0	1214.3
숙박 및 음식	366.5	178.5	75.3	95.8	51.6
운수 및 통신	7.8	0.6	34.9	575.4	1217.5
금융 및 보험	46.7	166.2	258.5	3948.3	2883.1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71.5	108.7	248.2	624.4	1498.7
공공행정 및 국방	0.0	0.0	0.0	0.1	0.1
교육서비스	0.0	0.0	0.0	3.0	9.2
보건 및 사회복지	0.0	13.3	0.0	0.3	1.2
오락 및 운동	0.3	12.7	48.5	36.0	156.7
기타서비스	0.0	0.6	39.6	3.2	51.6
계	2614.6	3510.3	4202.8	20274.1	14596.9

자료: 강성진·서상원, 2005.



<그림 2-3>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백만 달러)

(1) 2005년도 동향과 2006년 전망

□ 전반적 동향

○ 2006년 1/4분기 FDI(신고기준)는 국내에 사업장을 신규 설치하는 투자(Greenfield)가 14.9억불로 전년 동기(9.8억불) 대비 52.8% 증가한 반면, M&A형 투자는 7.2억불로 전년 동기(21.5억불) 대비 66.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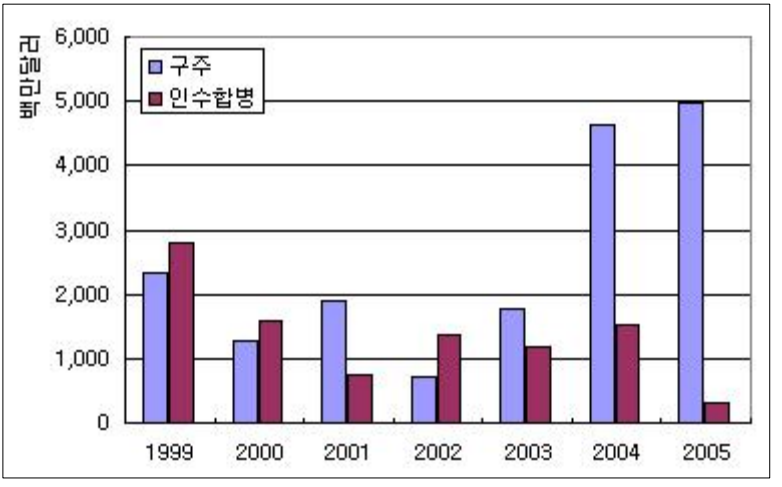
– 이에 따라 1/4분기 전체 FDI 금액은 22.1억불로서 전년 동기 31.3억불에 비해 29.3% 감소

– 이러한 투자금액의 감소는 전년 동기에 초대형 M&A 투자인 영국 SCB의 제일은행 인수(17.2억불)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base effect)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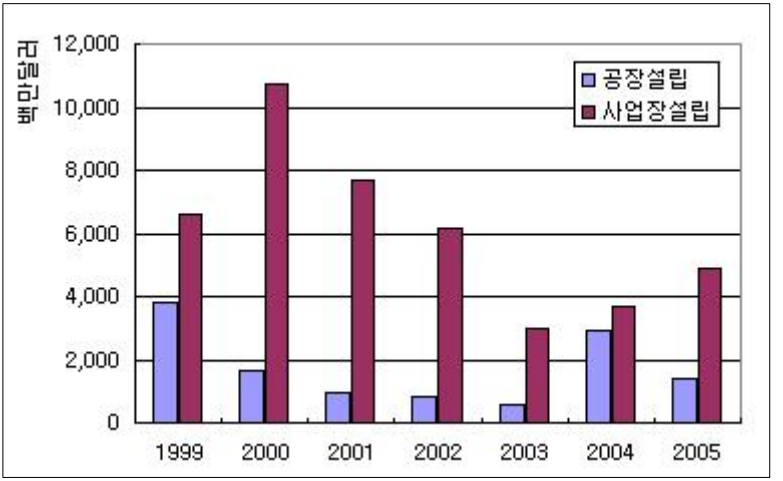
〈표 2-9〉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별 투자실적(신고기준, 단위: 건, 백만 달러, %)

	M&A						Greenfield					
	구주		인수합병		금액 합계	비중	공장설립		사업장설립		금액 합계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9	241	2,333	27	2,792	5,125	33.0	259	3,824	1,576	6,582	10,406	67.0
2000	313	1,277	13	1,588	2,865	18.8	309	1,666	3,508	10,717	12,383	81.2
2001	290	1,901	8	748	2,649	23.5	286	945	2,760	7,692	8,637	76.5
2002	260	714	25	1,370	2,084	22.9	275	840	1,849	6,168	7,009	77.1
2003	279	1,759	8	1,184	2,943	45.5	187	551	2,091	2,975	3,526	54.5
2004	321	4,636	19	1,533	6,169	48.2	253	2,933	2,482	3,686	6,619	51.8
2005	361	4,966	10	302	5,268	45.6	234	1,390	3,064	4,906	6,295	54.4
2006 1/4	97	719	2	1	720	32.6	71	292	691	1,198	1,490	67.4

자료: 산업자원부, 2006.



〈그림 2-4〉 외국인 직접투자 M&A 금액



〈그림 2-5〉 외국인 직접투자 Greenfield 금액

○ 부품소재에 대한 투자도 6.5억불을 유치하여 전년 동기의 5.0억불에 비해 30.7% 증가

– 부품소재에 대한 FDI는 기계장비(2.2억불) 및 전자장비(2.2억불)분야가 가장 많이 유치되었고, 전체 FDI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동기 15.8%에 비해 크게 증가한 29.3% 기록

○ 한편 '05년도 FDI 도착규모는 96.4억불로 사상최고의 도착율인 83.4%를 기록

– 따라서 도착금액 기준으로는 '05년이 '04년(92.6억불)보다 오히려 3.8억불 증가한 수준

〈표 2-10〉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 1/4
신고액(A) (증가율)	11,286 (△26.0)	9,093 (△19.4)	6,469 (△28.9)	12,788 (97.7)	11,564 (△9.6)	2,210 (△29.3)

신고건수	3,344	2,409	2,565	3,075	3,668	861
도착액(B) (증가율)	5,055 (△50.6)	3,804 (△24.8)	5,130 (34.9)	9,262 (80.5)	9,643 (4.1)	–
도착율(B/A)	44.8	41.8	79.3	72.4	83.4	–

자료: 산업자원부, 2006.

□ 주요 분야별 특징

○ 산업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이 73.1% 증가(10.1억 달러)한 반면, 서비스업은 52.8% 감소(12.0억 달러)하여 제조업비중이 제고(18.6%→45.5%)

– 그러나 Greenfield형 투자 중 제조업의 공장설립이 16.1%감소(2.9억 달러)한 반면, 서비스업의 사업장설립은 91.1% 증가(12.0억 달러)

– 제조업은 화공(2.7억불, 705.9%), 기계(2.2억 달러, 792.0%)분야 등이 증가한 반면, 전기 · 전자(2.5억 달러, △34.0%), 운송기계(1.1억 달러, △11.3%) 분야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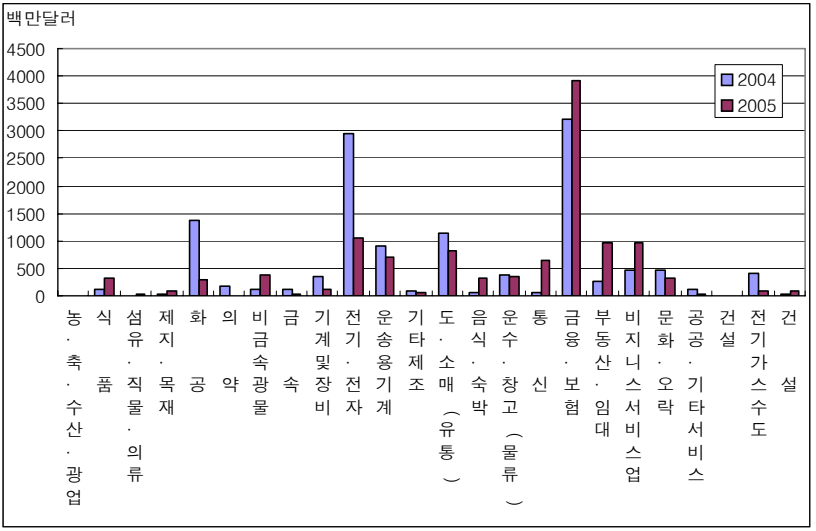
– 서비스업은 금융(6.7억 달러, △64.0%)이 크게 감소한 반면, 문화 · 관광(1.1억 달러, 37.5%), 비즈니스서비스업분야(1억 달러, 136.6%) 등이 증가

〈표 2-11〉 외국인 직접투자 업종별 투자실적 (단위: 건,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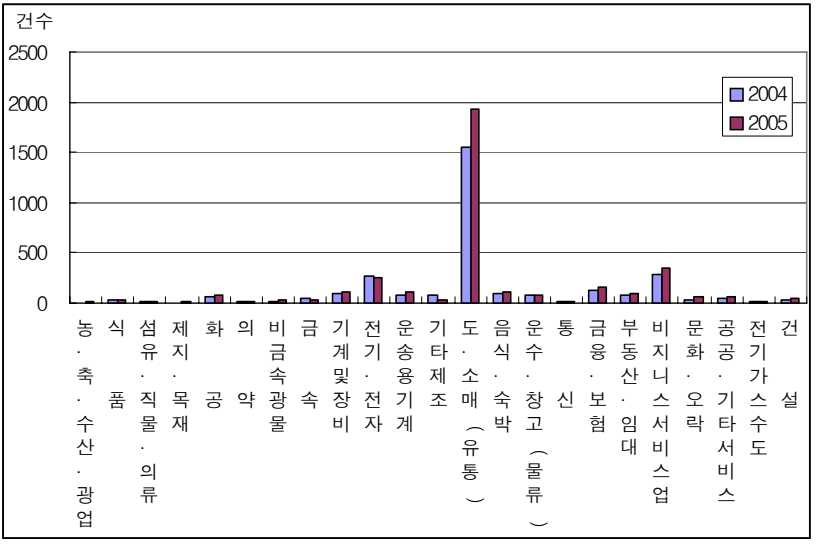
	2004		2005		2006. 1-3		누계 (1962-2006.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 · 축 · 수산 · 광업	6	1	10	3	4	–	230	420
제조업	690	6,213	746	3,076	196	1,006	12,204	50,056

식 품	31	118	31	325	6	3	668	4,112
섬유 · 직물 · 의류	19	7	20	29	3	1	648	903
제지 · 목재	7	20	15	85	1	9	239	2,659
화 공	67	1,377	86	278	19	274	1,842	8,881
의 약	19	167	13	8	5	2	270	975
비금속광물	15	116	29	376	10	106	463	2,513
금 속	41	105	37	29	9	16	747	2,348
기계및장비	102	358	118	128	31	223	1,772	4,721
전기 · 전자	272	2,944	253	1,041	72	245	3,465	16,299
운송용기계	77	907	112	706	29	110	1,042	5,750
기타제조	40	93	32	72	11	20	1,048	896
서비스업	2,330	6,141	2,858	8,301	649	1,200	20,885	61,671
도 · 소매(유통)	1,548	1,129	1,936	807	447	172	13,475	16,660
음식 · 숙박	100	53	109	307	12	1	939	5,683
운수 · 창고(물류)	72	372	75	364	25	28	696	2,148
통 신	15	44	18	638	3	4	223	2,031
금융 · 보험	134	3,221	151	3,920	32	666	1,422	19,150
부동산 · 임대	85	264	90	959	22	112	488	4,220
비즈니스서비스업	290	478	354	964	76	97	2,847	4,358
문화 · 오락	38	470	65	309	23	110	358	5,666
공공 · 기타서비스	48	110	60	34	9	9	437	1,755
전기 · 가스 · 수도 · 건설	49	433	54	184	12	3	544	5,541
전기가스수도	21	405	8	91	2	–	83	3,093
건 설	28	29	46	92	10	3	461	2,448
합 계	3,075	12,788	3,668	11,564	861	2,210	33,863	117,688

자료: 산업자원부, 2006.



〈그림 2-6〉 외국인 직접투자 업종별 투자실적 금액별 대비



〈그림 2-7〉 외국인 직접투자 업종별 투자실적 건수별 대비

○ 투자유형별로는 Greenfield형 투자 비중이 크게 증대하여 52.8%로 증가(14.9억 달러)한 반면, M&A형 투자는 66.6% 감소(7.2억 달러)하여 전체 FDI 중 Greenfield형 비중이 67.4% 차지

- M&A형 투자 감소는 작년 1/4분기 SCB의 제일은행 인수에 따른 반사적 영향,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M&A 참여 등에 기인
- Greenfield형 투자 중 제조업의 공장설립은 16.1%감소(2.9억불)한 반면, 서비스업의 사업장설립은 91.1% 증가(12.0억불)

〈표 2-12〉 투자유형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비중 · 증감률%)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연간	1/4Q	증감률
M&A	구주	4,636 (36.3)	4,966 (42.9)	719 (33.0)	△62.6
	인수 합병	1,533 (12.0)	302 (2.6)	1 (-)	△99.6
	소계	6,169 (48.3)	5,268 (45.6)	720 (32.6)	△66.6
Greenfield	공장 설립	2,933 (22.9)	1,390 (12.0)	292 (13.2)	△16.1
	사업장 설립	3,686 (28.9)	4,906 (42.4)	1,198 (54.2)	91.1
	소계	6,619 (51.8)	6,295 (54.4)	1,490 (67.4)	52.8
전체		12,788	11,564	2,210	△29.3

자료: 산업자원부, 2006.

○ 투자방식별로는 증액투자가 전년 동기에 있었던 제일은행 증액투자(17.2억 달러)의 반사적 영향으로 52.6% 감소(12.9억 달러)한 반면, 신규투자는 104.1% 증가(7.9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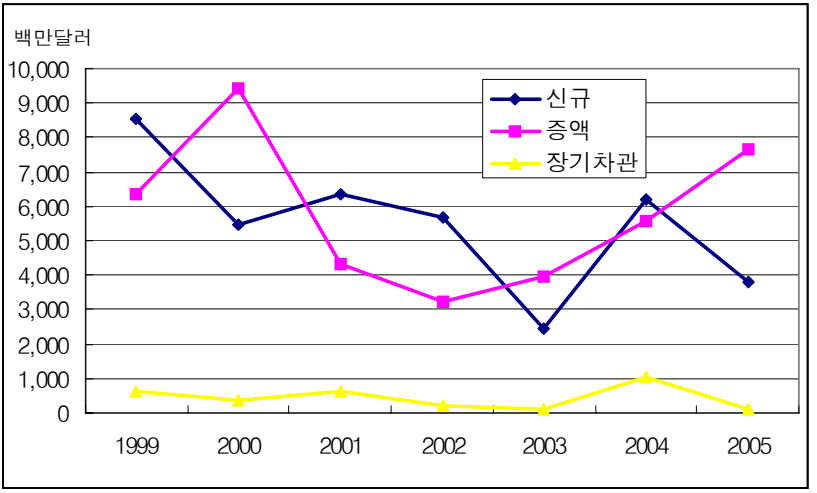
- 신규투자는 제조업(25.2%), 서비스업(328.1%) 모두 증가
- 제조업의 증액투자는 화공(2.5억 달러), 전기 · 전자(1.0억 달러)분야를 중심으로 95.7%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 증액투자는 69.0% 감소

〈표 2-13〉 외국인 직접투자 투자방식별 투자실적

(신고기준, 단위: 건, 백만 달러, %)

	신규		증액		장기차관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1999	8,553	55.1	6,341	40.8	637	4.1	15,531
2000	5,455	35.8	9,446	62.0	347	2.3	15,248
2001	6,346	56.2	4,330	38.4	609	5.4	11,286
2002	5,678	62.4	3,219	35.4	196	2.2	9,093
2003	2,455	38.0	3,934	60.8	80	1.2	6,469
2004	6,197	48.5	5,556	43.4	1,035	8.1	12,788
2005	3,795	32.8	7,679	66.4	90	0.8	11,564
2006. 1/4	794	35.9	1,285	58.2	131	5.9	2,210

자료: 산업자원부, 2006.



〈그림 2-8〉 외국인 직접투자 시점별 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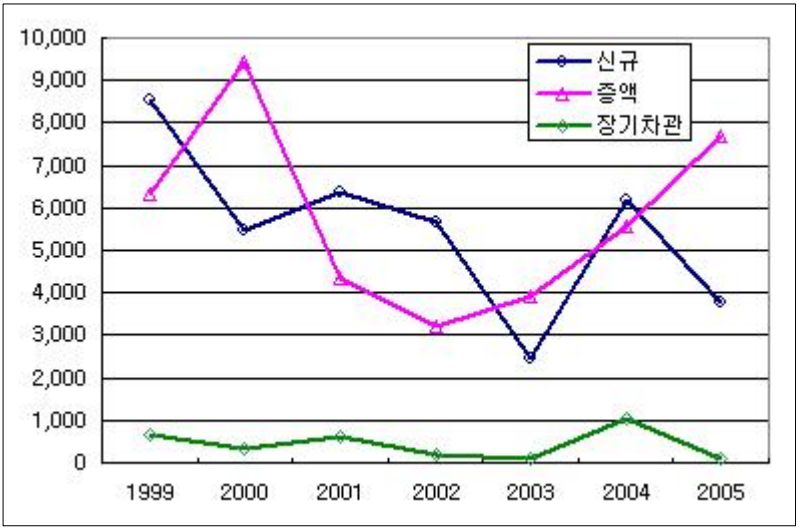
○ 투자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1억불이상 대형 투자가 57.5% 감소한 반면, 1억불미만의 중소형 투자는 29.3% 증가

– 1억 달러 이상의 투자의 경우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년 1/4분기에 40.7%로 전년 동기(67.6%)에 비해 감소

〈표 2-14〉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별 투자실적 (신고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1백만달러 미만		1백만~ 1천만달러		1천만~1억달러		1억달러 이상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1999	231	1.5	1,031	6.6	4,268	27.5	10,002	64.4	15,531
2000	433	2.8	1,376	9.0	3,924	25.7	9,515	62.4	15,248
2001	343	3.0	1,055	9.3	2,838	25.1	7,050	62.5	11,286
2002	255	2.8	945	10.4	1,950	21.5	5,942	65.4	9,093
2003	289	4.5	863	13.3	2,160	33.4	3,157	48.8	6,469
2004	317	2.5	1,416	11.1	3,617	28.3	7,438	58.2	12,788
2005	396	3.4	1,397	12.1	3,704	32.0	6,066	52.5	11,564
2006 1/4	103	4.6	409	18.5	800	36.2	899	40.7	2,210

자료: 산업자원부, 2006.



〈그림 2-9〉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별 투자실적

○ 지역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미국(12.1%), 일본(99.4%)은 증가한 반면, 영국(△74.5%), 네덜란드(△12.4%) 등 EU지역(△54.8%)은 감소

〈표 2-15〉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비중·증감률 %)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연간	1/4Q	증감률
미주	5,199 (40.7)	3,107 (26.9)	263 (11.9)	37.0
미국	4,718 (36.9)	2,690 (23.3)	194 (8.8)	12.1
아주	4,295 (33.6)	3,509 (30.3)	656 (29.7)	45.5
일본	2,258 (17.7)	1,879 (16.2)	337 (15.2)	99.4
EU	3,009 (23.5)	4,781 (41.3)	1,112 (50.3)	△54.8
네덜란드	1,309 (10.2)	1,150 (9.9)	283 (12.8)	△12.4
기타	285 (2.2)	168 (1.4)	179 (8.1)	678.3
전체	12,788	11,564	2,210	

자료: 산업자원부, 2006.

제2절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일반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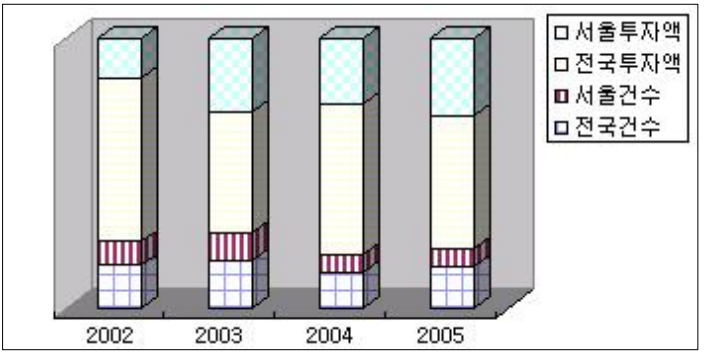
○ 서울시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건수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

어들지만, 전체 투자액이 늘어나 건당 투자액이 커짐을 알 수 있음.

〈표 2-16〉 서울시 외국인투자현황 (단위 : 건, 백만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전국	건수	2,408	2,564	3,068	3,666
	투자액	9,102	6,468	12,785	11,562
서울	건수	1,339(55.6%)	1,488(58%)	1,483(48.3%)	1,620(44.1%)
	투자액	2,266(24.9%)	3,933(60.8%)	5,580(43.6%)	6,853(59.3%)

자료: 서울특별시, 2006.



〈그림 2-10〉 외국인 투자현황(전국/서울대비)

□ 서비스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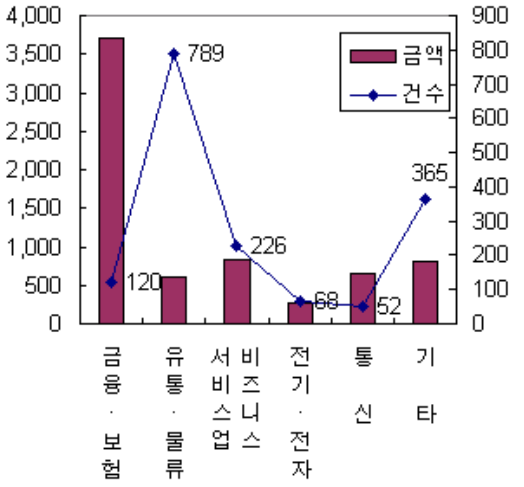
○ 서비스업종별 직접투자 추이는 건수에서는 유통·물류가 과반수를 차지하나 금액에서는 금융·보험이 과반을 차지하여, 금융·보험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함을 시사

○ 최근 들어 비즈니스 서비스업, 전기·전자 및 통신 분야의 투자도 증가추세임.

〈표 2-17〉 서울시 투자업종별현황 (단위 : 건, 백만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339	2,266	1,488	3,933	1,483	5,580	1,620	6,853
금융 · 보험	154	830	139	1,643	119	3,154	120	3,700
유통 · 물류	654	526	824	866	809	1,299	789	610
비즈니스 서비스업	180	218	181	207	202	236	226	822
전기 · 전자	61	62	66	36	60	169	68	263
통 신	16	73	13	503	13	34	52	655
기 타	274	557	265	678	280	688	365	803

자료: 서울특별시, 2006.



〈그림 2-11〉 서울시 투자업종별현황

□ 2005년과 2006년 대비 서울시의 외국인투자유치 동향

○ 2006년 1/4분기 전국의 외국인 투자금액 감소

– 2006년 1/4분기 전국의 외국이 투자금액은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29.3% 감소한 2,210백만 불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1/4분기에 초대형 M&A(SCB 제일은행 인수)로 투자금액이 증가 것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투자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투자건수에 있어서는 861건으로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0.6% 소폭 증가하였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73.1%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52.8% 감소하여 제조업 비중이 제고됨(2005년 1/4분기: 18.6% → 2006년 1/4분기: 45%)

○ 2006년 1/4분기 서울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큰 폭 감소

- 2006년 1/4분기 서울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47.2% 감소한 1.143백만 달러를 나타내며 투자건수에 있어서도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11.2% 감소한 341건으로 나타남.

- 외국인의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제조업이 89.2%, 10.2%로 나타나 지난해 1/4분기의 97.5%, 2.5%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서비스업 비중은 감소함.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116.7% 증가한 117백만 달러의 투자가 있었으며, 서비스업은 1,024백만 달러로 지난 1/4분기에 비해 51.4%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냄.

- 서비스업 내에서는 금융·보험업이 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지난해 1/4분기의 82.3%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도·소매(유통)업이 지난해 1/4분기 2.4%에서 크게 증가한 12.4%를 차지하였고, 그 중에서 비즈니스서비스업, 도·소매(유통)업 등이 각각 322.2%, 178.4% 증가하여 76백만 달러, 142백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각각 62.6%, 31.8% 감소하여 665백만 달러, 105백만 달러를 나타냄.

〈표 2-18〉 외국인투자 현황

구분		2005. 1/4			2006. 1/4			증감률	
		건수	금액	금액 비율	건수	금액	금액 비율	건수	금액
전체	전국	856	3,128	-	861	2,210	-	0.6	-29.3
	서울	384	2,164	-	341	1,143	-	-11.2	-47.2
제조업		59	54	2.5	48	117	10.2	-18.6	116.7
서비스업		322	2,109	97.5	289	1,024	89.6	-10.2	-51.4
	도·소매(유통)	165	51	2.4	148	142	12.4	-10.3	178.4
	음식·숙박	11	1	0.0	6	1	0.1	-45.5	0.0
	운수·창고(물류)	6	2	0.1	14	22	1.9	133.3	1000.0
	통신	40	33	1.5	3	4	0.3	-92.5	-87.9
	금융·보험	14	1,780	82.3	29	665	58.2	107.1	-62.6
	부동산·임대	21	154	7.1	12	105	9.2	-42.9	-31.8
	비즈니스서비스업	22	18	0.8	57	76	6.6	159.1	322.2
	문화·오락	6	6	0.3	17	8	0.7	183.3	33.3
	공공·기타서비스	37	63	2.9	3	2	0.2	-91.9	-96.8

주: 투자금액 및 금액비율은 반올림 수치이며 신고기준임
자료: 산업자원부, 2006; 서울특별시, 2006.

2.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1) 투자적격지로서의 서울

□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쟁력확보

○ 서울은 입지, 시장성, 인적자원, 경제규모, 금융, 정보통신, 환경, 교통 등에 있어서 동북아시아의 어느 도시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동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교두보로서 지리적으로 주변지역에 풍부한 시장과 국내시장을 갖춤.

- 비행기로 평균 2시간대의 위치에 인구 100만 이상의 주변국가

도시가 43개가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에서 40분이면 도심으로 진입 가능

- 북경 2시간10분, 상해 1시간50분, 동경 2시간10분, 오사카 1시간40분, 대만 2시간45분, 홍콩 3시간40분

□ 풍부한 인적자원

○ 상주인구 1천만 명을 포함, 2천 3백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 배후인구 등 시장성 존재. 게다가, 복원된 청계천이나 서울숲 같이 서울 곳곳에 조성된 공원들이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을 찾아오게 하고 있어 서울의 시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서울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40%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급인력들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근무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에서만 매년 9만 여명의 대학 졸업자가 배출

□ 우수한 경제 인프라

○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GDP 6,801억 달러로 세계11위, 교역규모는 세계 12위(수출 2,538억 달러, 수입 2,245억 달러)이며, 이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에 달함.

○ 자본시장에 있어서 주식부문은 거래량 규모에서 세계 9위, 시장규모는 15위, 그리고 채권부문은 거래량 및 시장규모에 있어서 세계 8위이고, 이미 서울에는 세계 메이저급 은행의 22개 지점, 증권사 45개 지점, 보험회사 82개 지점 등이 진출하여 영업 중. 최근 시티은행과 스탠다드 차터드은행의 국내은행 인수가 서울의 금융시장의 매력을 잘 반영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며, 시티은행의 대한민국 내 투자는 시티은행 역사상 가장 큰 규모

□ IT강국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 대한민국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이며, 광대역 멀티미디어서비스(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를 개발하는 IT산업의 강국

○ 서울지역의 PC 보급률은 86.4%,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은 91.8%에 달할 정도로 서울의 정보통신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

○ 특히, 서울시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과 노하우는 2003년 UN평가에서 100대 도시 중 1위를 차지함으로써 2004년 모스크바의 'e-모스크바' 프로젝트에 이어 2005년 9월 하노이시에도 수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동구권과 동남아, 남미 등지에서도 서울시의 전자정부를 도입하려는 움직임.

□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서울

○ 2005년 10월 완공된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은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관광명소로서뿐 만 아니라, 도심에서 일하는 많은 기업인·투자가들의 휴식처로 각광. 또한 녹색의 서울광장, 숭례문광장 등은 삭막하기만 한 도시에 여유를 주는 변화.

○ 특히 '청계천 복원사업'은 2004년 제9회 베니스 국제건축비엔날레에서 '최우수 시행자 상(the best public administration)을 수상

□ 세계에 수출하는 서울시의 교통개혁

○ 2005년 8월 서울시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가 UITP(세계대중교통협회)의 '우수정책 인증' 패를 전달받음. 영국 국회 교통위, 베트남 교통국 관계자, 북경시, 터키 이스탄불시의 교통정책 관계자들이 이미 서울을 방문해 대중교통체계를 시찰하거나 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 2005년 5월에도 베를린에서 대중교통의 획기적 테마프로젝트로 '메트로폴리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다른 세계 대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중심의 교통개혁은 서울의 또 다른 자랑거리

○ 서울전역을 연결하는 8개 지하철노선은 연장 287Km로 세계 4위이며, 이외에도 전국이 철도로 이어지는 광역철도망 건설 및 수도권 주위의 경전철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서울의 대중교통 인프라는 더욱 완비되어가고 있는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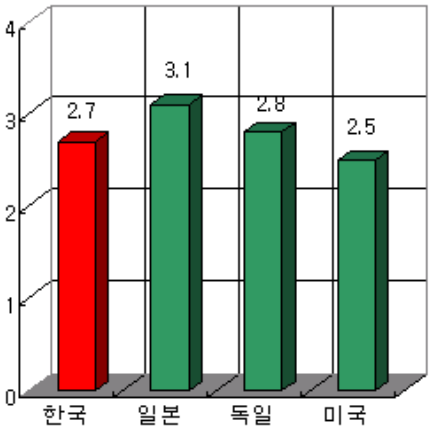
□ 활발한 연구개발(R&D)투자

○ 현재 한국은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의 R&D 투자 비율은 GDP의 2.7%로 OECD국가 중 6위에 해당하며, R&D의 측정지표로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세계 7위를 차지. 특히 서울은 우수대학 및 연구소가 집결되어 있어 연구개발 투자 지역으로 적합.

〈표 2-19〉 특허 등 출원 현황

순위	국가	건수	%
1	일본	452,528	6.1
2	미국	294,706	4.0
3	독일	244,345	3.3
4	영국	192,875	2.6
5	스페인	166,354	2.2
6	스웨덴	165,051	2.2
7	한국	163,777	2.2
8	오스트리아	163,085	2.2
9	스위스	162,403	2.2
10	덴마크	162,006	2.2

* R&D투자비율: GDP의 2.7%,OECD국가 중 6위



〈그림 2-12〉 GDP대비 R&D 투자(%)

□ 낮은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율

○ 한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6.4%로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고,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1.9%로 적은 부담으로 사업 가능. 서울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납부서비스시스템" 을 운영.

2) 사회기반시설

□ 편리한 교통망

○ 사회기반시설로는 공항과 고속철도, 고속도로 및 주변항만시설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교통체계를 갖춤.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50여개 항공사가 130개 지역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연간 4,200만명, 230만톤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고, 또한 편리한 철도와 항만시설을 갖춤.

□ 국제규모 컨벤션시설

○ 서울에는 컨벤션센터가 총11개가 있는데, 특히 COEX는 12개 전문 전시실과 61개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의실 규모는 아시아 최고수준

□ SOC 집중투자

○ 한국의 SOC 투자비율은 2%로 OECD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특히 인터넷 사용, 휴대폰 소유현황 등은 세계적인 수준.

□ 편리한 외국인 생활환경

○ 삶의 질을 표현하는 지표중인 하나인 주거비 부담률이 서울의 경우 뉴욕시를 100으로 볼 때 95.3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살기 좋은 도시임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서울에는 영어 9개교, 중국어학교 3개를 비롯하여 16개의 외국인학교가 있음. 특히, 국제적인 외국어 학교 건립 지원 등 서울은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제3절 국내외 외국인직접투자 우수사례

1. 해외 외국인직접투자 사례[2)]

1) 네덜란드

(1) 투자유치정책

○ 1970년대 후반 광업, 섬유산업, 신발제조업과 같은 수많은 전통산업들의 쇠퇴로 정부는 국내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창의적인 해결방안들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성 장관이었던 Ruud Rubbers가 'Commissariat Acquisitive(해외투자유치위원회)'의 설립이라는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

○ 네덜란드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주요목표는 국토전체의 균형성장과 고용창출

○ 네덜란드 투자진흥청(NFIA)은 투자입지로서 강점을 지닌 고도기술산업, 다국적 기업의 유럽지역본부(EHQ), 물류센터 유치에 중점

- 물류 및 비즈니스 기반시설에 대한 선행적 투자로 주위의 국가들보다 경쟁력 있는 물류기반을 구축
- 1990년대 들어 EU시장 진출을 꾀하는 북미와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기업 물류센터의 63%가 네덜란드에 위치

2) 이 절의 해외 외국인직접투자 4개국 사례는 Invest Korea(2004)의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 방향」을 정리한 것임.

⑵ 투자유치기관

□ 중앙투자유치기관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NFIA)

○ 1978년에 설립되었으며 경제성(EVD) 산하기관으로 경제성, 지방투자유치기관, 국제유통협회(HIDC), 외교성과 밀접한 협조관계를 맺고 있으며, 본부에 프로젝트팀, 관리지원팀, 마케팅 및 정보팀을 두고 있음.

○ 프로젝트팀은 해외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북미, 유럽, 아시아 등의 지역편제로 운영되며 해외조직으로는 13개의 해외사무소가 있으며 이중 인원의 절반은 미국과 일본에 집중

○ 예산은 전액 국고예산으로 경제성에서 지원

○ 네덜란드 전체 투자유치활동을 기획하고 실행,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네덜란드의 외국인 투자환경에 관한 정보제공, 투자 조사 사절단 구성 및 파견, 공장부지선정을 위한 입지조건 분석,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면담주선, 프로젝트 종료 후의 사후관리 등이 주된 역할

○ 특정산업분야의 시장 변화와 NFIA가 개발한 사업 내용을 게재한 간행물을 송부하여 잠재투자가를 접촉한 후 투자조사단 구성 및 지원, 투자환경 분석 및 투자관련 행정기관과의 면담주선, 프로젝트담당자가 개입하여 투자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과 투자완료후의 사후관리 담당

○ 투자유치기관으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박람회 및 전시회를 통한 투자유치 업무의 홍보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잠재 투자가들의 투자를 유도 등 NFIA의 홍보전략 및 수단으로 활용

□ 지방 투자유치 기관

- ○ NOM (Investment and Development Agency for the Northern Netherlands)
- ○ OOM (Business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for Overijssel)
- ○ GOM (Gelderse Ontwikkelings Maatschappij)
- ○ BOM (North Brabant Development Agency)
- ○ LIOF (Limburg Development Company)
- ○ WFIA (West-Holland Foreign Investment Agency)

⑶ 투자 인센티브

□ 인센티브 개요

- ○ 외국인투자가 대상의 명문화된 투자 인센티브는 없으며, 대부분 내외국인 투자가 모두에게 적용
- ○ 네덜란드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은 환경, R&D, 기술, 에너지 부분에 집중
- ○ 일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낮고 낙후된 지방은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보다 더 제공

□ 지방정부 보조금

-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출자
- ○ 지방 투자유치기관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

□ 현금보조(Cash Grant)

○ 몇몇 낙후 지역은 일정 규모 투자 시 국내외 투자가에게 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북부 3개 지방 흐로닝헌(Groningen), 프리슬란드(Friesland), 드렌트(Drente) 지방은 투자금의 20%까지 지원

○ 트윈터(Twente) 지역과 림버그(Limburg) 일부지역은 13.6백만 유로 이상의 투자에 대해 15%까지 지원

○ 렐리스타드(Lelystad) 지역은 백만 유로 이하의 투자에 대해 15% 내지 20% 지원

□ 고용/훈련 보조금

○ 주로 R&D 인력 고용, 일정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 고용, 장애인 고용시 보조금을 지급

□ 세금 인하 및 감면

○ 일반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며, 법으로 정한 수혜 기준 없음.

○ 투자규모 및 고용규모에 따라 세무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세금을 인하 받거나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함.

⑷ 투자유치제도의 특징

○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명문화된 인센티브는 없으며, 국내기업과 동일한 지원

○ 기업설립 및 운영이 용이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외국인도 비교적 간단하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외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게 되며, 특히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외환통제는 완전 자유화됨.

⑸ 투자환경

□ 투자환경 개요

○ 네덜란드 투자환경 자체(지정학적 위치, 발달된 인프라, 우수한 노동력, 유리한 세제 및 우수한 금융 시스템 등)가 보이지 않는 정책수단

○ 지리적 이점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갖추어 유럽의 주요도시 및 EU 인구의 40%가 네덜란드의 500Km 이내에 위치 또는 거주하고 있고, 항만 및 내륙운송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하루 이내에 화물 운송이 가능하며 내륙운송의 유럽대륙 시장점유율은 37%, 유럽 Trucking 시장 점유율은 40%로서 경쟁력 있는 운송회사 및 시스템 보유

○ 편리한 세관 및 창고 시스템과 유리한 세제 및 금융 제도, 정부의 국내 기업 활동 및 외국인기업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 및 환경 정비를 갖춤.

□ 물류환경

○ 외국기업의 유럽물류센터 중 절반이상이 네덜란드에 소재(자료원: BCI/HIDC 1997)

○ 미국기업 유럽물류센터 611개 중 57%, 벨기에 13%, 독일 7%, 프랑스 6%, 영국 12%, 기타 5%

○ 아시아계 유럽물류센터 344개 중 56%가 네덜란드 소재, 벨기에 12%, 독일 22%, 프랑스 5%, 영국 4%, 기타 1%

○ 99년 현재 총 550여개의 외국기업 물류센터가 네덜란드에서 운영 중

□ 유럽물류센터 적지로서의 네덜란드

○ 반경 300마일 (일일 생활권) 이내에 1억 6천만 명의 인구와 유럽 주요 기업의 50%를 소재하였으며, 유럽의 3대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독일 루르공업 지대를 포함한 유럽 주요공업지역과 수로 및 육로로 연결되어 화물이동 및 처리면에서 높은 경쟁력 보유하여 유럽의 지리적 중심지이자 양호한 접근성을 가짐.

○ 로테르담항

– 62년 이후 물동량면에서 부동의 세계 1위로 자리매김

– 처리능력: 연간 5백만 개의 컨테이너와 3억 1천만 톤의 화물

–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37%가 로테르담항과 암스테르담항을 경유

– INTIS라 불리우는 항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터미널의 모든 정보를 전자문서 교환시스템(EDI)을 통해 처리

– 세관망, 기업망, 공공망과 연계된 항만물류 종합정보시스템

○ 암스테르담 스키폴(Schiphol) 국제공항

– 스키폴 공항은 유럽 4위의 공항으로, 전 세계 240개국 이상의 지역으로 취항

– 물류, 운송, 보관 및 출하시설이 우수하며, 해외 각 지역과의 화물연결 체계가 특히 뛰어남.

– 과거 20년간 Business Traveler International에 의해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공항”으로 선정

□ 우수한 물류 전문 인력

○ 전통적으로 무역국가로 무역 및 운송이 화란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

○ 3만 명 이상의 풀타임 근로자가 물류관련 비즈니스에 근무하며, 160여개의 물류전문 서비스업체 보유

○ 물류관련 협회 및 기관, 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물류관련 전문가 양성

○ 교육과정도 물류 실무과정에서부터 대학학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업체 방문교육도 실시

□ 효율적인 비즈니스 마인드의 통관제도

○ 세관 통관절차 간략하고 융통성이 많고 물류반입 일자에 따라 부가세나 또는 통관세 없이 다른 유럽국가로의 물류수송이 가능하며, 보세창고의 허가도 매우 신축적임.

□ 유럽국가중 최고의 외국어 구사능력

○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 3~4개 국어 구사 필요

○ 단기 및 파트타임 계약 등 탄력적인 노동계약 체결가능하며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파업 등 분규로 인한 인력손실 기간이 최소로 나타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음.

□ 외국인투자 유치관련 클러스터 조성 현황

○ 지방정부에 따른 특정 목적의 산업단지 및 델프자일/베인담(Delfzijl/Veendam) 집중 개발 지역 등

□ 지역 특화산업 및 중점 육성

○ 각 지방 투자유치 기관은 투자유치 활동의 하나로 지역 특화산업 및 중점 육성 대상 산업을 집중 홍보함.

○ 유럽 최대 규모의 로테르담 항만을 통해 석유 및 화학제품 운송 용이, 물동량 기준, 유럽은 물론 세계 1위 항구로 해운업의 최적지인 로테르담항을 통한 석유 및 화학, 해운 산업

○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3대 경제 중심지인 암스테르담, 브뤼셀 및 뒤셀도르프 의 중앙에 위치, 스키폴 공항과 브뤼셀 공항 접근 용이, 로테르담, 암스텔담 및 앤트워프 항구와 인접한 북브라반트의 전자, 자동차, 제약, 플라스틱, 식품과 음료, 하이테크, 의료 기술 및 멀티미디어 산업

○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와 에너지 조달용이, 네덜란드 정부의 생체임상의학 및 제약산업 집중 육성 정책으로 북부 네덜란드는 화학, 생체임상의학 및 제약산업의 중심지가 됨.

2) 영국

⑴ 투자유치정책

○ 1970년대 전통적 산업인 석탄, 철강, 조선 산업의 사양화와, 이에 따른 실업증가, 노사분규 격화 등으로 국내경기 및 제조업 분야가 위축되자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에 총력을 기울임.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은 고용 유발적 투자,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함.

– 인건비 인상 등으로 신규의 대형 제조업 투자유치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기존의 투자기업 또한 인건비가 저렴한 동구권이나 중국

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추세에 있자 투자유치의 중심을 영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 즉 하이테크 산업 및 R&D 유치로 바꾸었으며 투자유치의 목적에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가.

○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50여개의 사이언스 파크 및 영국내의 90여개 대학이 최소한 특정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음.

○ 영국의 투자유치는 지방정부 지역상호간 투자유치 경쟁체제 양상을 띠고 있음

– 영국이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각 지역이 개별국가처럼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인.

○ 국내투자의 부족분을 외국인 투자유치로 보충할 목적으로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꾸준히 유치한 결과 외국인 투자업체수는 총 업체수의 1%에 불과하나 제조업체 고용인구의 18%, GDP의 24%, 국내 순자본 지출의 32%, 수출의 40%를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

⑵ 투자유치기관

□ UK Trade & Investment (UKTI : 구 Invest UK)

○ 중앙정보 소속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총괄하는 곳으로 1977년 IBB(Invest in Britain Bureau)란 명칭으로 설립되어 2000년 이후 Invest UK, 그리고 2003년 10월부터 현재의 명칭인 UK Trade & Investment를 사용

○ 주된 역할은 투자유치정책의 기획 및 전국적 차원의 투자유치활동 총괄하는 것으로 영국 내 12개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RDAs)간 투자유치 과당경쟁 방지 및 업무조정, 잠재투자가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입지, 인센티브, 조세, 영국 및 유럽

시장), 기존투자기업 관리 등을 맡고 있음.

□ 지방투자유치기관

○ 각 지방에 투자유치 및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지역개발청(RDAs: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12개 설치되어있으며 UK Trade & Investment 및 해당지의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상호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 잉글랜드 지역에 9개, 그리고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각 1개

⑶ 투자인센티브

□ 일반 인센티브

○ 일반 인센티브에는 지역선별 보조금 (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RSA)과 투자장려지구 (Enterprise Zones: EZ), 자유무역지대 (Free Zones)가 있음.

○ RSA는 지원지역(Assisted Areas: Tier1과 Tier2로 분류)을 설정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당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동 지역에 투자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타 지역보다 유리한 금융지원을 제공

○ EZ는 산업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침체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기업장려지구를 10년간 한시적으로 동 지역내에 투자하는 업체들에 대해 세금감면, 행정규제 완화 및 절차간소화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지역의 산업 및 상업활동을 촉진키 위해 지방회의 또는 개발공사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함.

○ 자유무역지대(Free Zones)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거의 유

사한 개념으로 항만, 공항내 또는 인접지역으로 보세물품의 저장 또는 처리되어 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와 부가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

□ 세제상의 인센티브

– 영국은 철저한 내외국기업 평등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가만을 위한 특별한 세제혜택 없으며, 주요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 실시(세금 공제 전 경상이익의 30%)

□ 연구 및 개발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 EUREKA 제도

– 유럽내의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국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영국은 통산부가 주관함)로서 DTI가 50%까지의 경비를 부담하며, 첨단기술 개발프로젝트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독 혹은 공동연구 개발 프로젝트 추진 경비를 지원함.

○ LINK 제도

– 영국내의 제조업체와 연구기관을 상호 연결하는 산학 협동프로그램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의 소요경비 지원

○ UK Foresight 제도

– 영국내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연구주제에 따라 적합한 선정을 통하여 보조 (http://www.foresight.gov.uk)

○ Sixth Framework Programme

– 산업정보기술에서 일상생활, 사회과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의 공동프로젝트 소요자금 지원을 통하여 업체간 연구개발 및 산학

협동체제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은 EU회원국 회사 또는 EEA회원국 회사로 경쟁력을 갖춘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영국 내 투자기업 포함)으로 연구결과의 유용성, 즉 연구결과의 보급 및 경제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이거나 기술혁신 내지 기술 활용의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이어야 함.

○ SMART

– 영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보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기술평가 지원, 기술 연구 지원,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 신기술의 상업적 기술적 타당성 지원, 개발 프로젝트 지원, 특별 개발 프로젝트 지원 등을 함.

□ EU로부터의 금융지원

○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EU집행위(European Commission)가 유럽 내 각국의 보조금 지원기관을 통하여 지원

□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인센티브

○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Housing Act, 1989)에 의거 해당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다양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어 인센티브의 내용이 자치단체별로 다소 상이하며 주로 Cash Grants(현금지원), 저리의 자금대출, 지급보증, 투자기업에 자본참여, 건물 등 부동산의 무료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잉글랜드(England) 지역,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지역, 웨일즈(Wales) 지역, 스코틀랜드(Scotland) 지역으로 나누어짐.

– 잉글랜드 지역의 English Partnerships에 의한 투자인센티브는 잉글랜드지역의 낙후지역 또는 오염지역 등을 개발, 정화하여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특정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동 기관에 의해 개발된 토지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투자유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지역 보조금, 고용 훈련 보조금, 기타 인센티브 등이 있음.

- 북아일랜드 지역은 자본지출에 대한 현금지원, 창업초기 인건비 보조, 이자감면, 공장임대료 보조, 시장개척비 보조, 세제지원, 금융지원, 종업원 교육훈련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있음.
- 웨일즈 지역은 외국기업이 투자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최종 마케팅단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WDA가 관련기관과의 협력 하에 Package형태로 지원하며, 교육훈련 인센티브로 종업원 채용, 부동산, 인프라 관련 인센티브 등이 시행되고 있음.
- 스코틀랜드 지역은 RSA 보조금, SMART, SUR와 SPUR Plus, 부동산, 인프라관련 인센티브, 종업원 고용 및 훈련관련 인센티브 등이 있음.

(4) 투자유치제도의 특징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차별적 특혜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내국기업에게 제공하는 조세감면, 금융지원, 입지지원 제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

○ 영국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홍보시 인센티브 등에 대하여 언급하기보다 영국이 투자하기에 좋은 여건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

- 세계최고 수준의 R&D 기관 및 설비 활용가능,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 완비,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서 자금조달 용이, 유럽시장 진출의 용이성, 세계 공용어인 영어 사용, 저렴한 가격으로 최첨단 유틸리티 사용, 양질의 노동력 및 낮은 인건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용, 금융지원에 대한 종합 서비스제공, EU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풍부한 문화생활 보장, 자녀교육 유리, 외국인투자 안내 전담조직 보유 등

⑸ 투자환경

□ 개요

○ R&D 및 첨단기술분야의 투자유치

– 최근 동유럽 등으로 제조업 기지가 옮겨가면서 영국정부는 대규모의 제조업 투자유치가 거의 불가능해져 영국이 세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유치를 전략적인 투자유치분야로 결정하고 여기에 많은 노력을 집중

○ 영국 내에는 90개 대학이 최소한 특정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바이오산업은 유럽에서 제일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

– IMD 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노벨상 수상자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

○ 영국 전역에 걸쳐 55개의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s, 과학기술집적단지)가 있어 이 분야의 투자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와 같이 과학기술집적단지들은 대부분 유명대학이나 연구소 인근에 위치

○ 영국의 R&D 및 첨단산업 투자유치에 있어 Science Park와 바이오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함.

□ Science Parks (과학기술집적단지)

○ 지식기반의 비즈니스 클러스터이며 입주업체의 성장을 돕기 위한 각종지원이나 자문이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역할은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특정기술 개발 및 발전 등

○ 제공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건물, 기술지원 및 비즈니스 서비스와

인근 대학이나 연구소와 연계하는 기술지원, 리셉션, 통신, 사무기기, 회의실, 경비, 청소 등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서비스 등이 있으며 설립주체는 지역개발청, 대학, 민간기업, 대학 및 민간기업 합작 등으로 다양함.

□ 바이오산업 (Biotechnology Industry)

○ 영국의 바이오텍 산업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유럽의 바이오텍 상장회사의 45%, 그리고 유럽 바이오텍 상장회사의 개발 제품의 43%가 영국에 있음.

○ 뛰어난 연구개발 능력과 제품을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다국적 기업 보유, 생명과학분야에서 20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선기금들의 자금지원, 실정에 밝은 투자자, 뛰어난 특허사무소 및 경영컨설턴트, 세계적 수준의 독성실험 및 임상실험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정부, 업계 및 금융계의 강하고 잘 확립된 협력관계, 세계적인 연구소 및 성공적인 제약회사의 존재 등을 발전 배경으로 꼽을 수 있음.

3) 아일랜드

⑴ 투자유치정책

○ 1980년대 후반부터 협소한 내수시장과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을 적극적인 지역통합 참여 및 외자유치로 극복하였으나 1987년에는 국가채무가 GDP의 120%에 이르면서 IMF 구제금융 지원까지 받음.

○ 총리실 산하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는 임금인상을 3년간 2.5%로 유지하고 법인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건 프로그램 제시하여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면서 경제도약에 성공

○ 기업환경 측면에서 법인세율을 12.5%를 적용하여 서유럽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용지무상대여 등 강력한 투자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며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 통합 추진

○ 갑작스런 고성장으로 고임금·고비용 구조의 경제로 진입함에 따라 인건비가 싼 중·동유럽권이 EU에 가입하면서 외국기업이 이탈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투자유치 대상을 가능한 모든 외국 기업에서 고부가 첨단 기업으로 수정하고 집중적인 지원하는 등 중·동유럽권과의 차별화를 추진하였으며, IT, 생명공학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유치에 힘씀.

○ 고급노동력과 노사정 합의 등 강한 인센티브와 IDA와 같은 외자유치 전담기구에 의한 적극적인 유치활동, 영어를 사용하는 젊은 고급인력의 양성이 성공 요인

⑵ 투자유치기관: IDA

○ IDA의 기능은 투자유치전략 및 목표수립, 유치전략의 실행, 목표대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잠재투자가 분석, 투자인센티브 승인 효율적인 업무절차 개발 등의 업무 추진

- ICT,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E-commerce), 제약·화학·의료기기, 금융·서비스센터 등의 국제무역서비스(Internationally Traded Services)를 투자유치 집중기업으로 설정
- 투자유치과정에서부터 투자가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며 투자유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IDA는 인력충원과 급여수준은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 맞춰 운영되나 다른 정부기관과는 달리 채용, 해고, 고용조건의 결정은 IDA에

일임되어 있을 만큼 전문성을 강조

- 인프라 개선이나 조세문제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정부부처들로 하여금 친기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독려
- 가장 큰 자산은 관련 정부기관을 네트워킹하는 능력이며 PM(Project Manager)의 권한 및 역할이 강함.

○ IDA의 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20〉 고용창출

구분/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신규고용창출(명)	15,959	17,634	22,838	13,282	11,743
총 지원업체(업체수)	1,165	1,276	1,262	1,158	1,094
총 정규직원수(명)	117,754	126,127	140,896	136,448	133,246

자료 : IDA Ireland Annual Report 2002

〈표 2-21〉 분야별 고용창출 수

분야/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국제/금융서비스	7,179	8,465	9,418	6,884	5,681
전자/엔지니어링	6,959	6,870	10,981	4,136	3,868
제약/건강관리	1,153	1,566	1,370	1,479	1,525
기타 산업	668	733	1,069	783	669
합 계	15,959	17,634	22,838	13,282	11,743

자료원 : IDA Ireland Annual Report 2002

<표 2-22> IDA지원기업(아일랜드투자기업)의 국가별 분류

국가	미국	독일	영국	기타유럽	아태지역	기타	합계
기업수	507	148	129	216	55	39	1,094

자료: IDA Ireland Annual Report 2002

<표 2-23> 신규투자건수 (2002년)

구분	총 프로젝트	신규투자	증액투자
프로젝트 건수	55	31	24

자료: IDA Ireland Annual Report 2002

(3) 투자인센티브 제도

○ 투자유치를 위한 현금보조금(Grants)에는 투자기업의 고정자산 지출에 대한 현금보조와 부지구입 및 개발, 건물, 신규시설 및 장비 구입시 보조하는 자본보조금(Capital grants),

○ 고용을 창출하지만 고정자산에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기업에 보조하기 위한 보조금인 고용보조금(Employment grants), 기존 투자기업이 기술기반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직업훈련 보조금(Training grants),

○ 연구개발시설의 설치 및 확장시 지원하는 연구개발 보조금(Research & Development grants)이 있음.

(4) 투자유치제도의 특징

○ 1990년대 이후 글로벌경제의 진전으로 유럽과 미국의 경제관계가 밀접해지면서 하이테크 분야의 다국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2000년 현재 1,200여개의 외국기업들이 진출하여 약 13만 명을 고용

– 미국계 기업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영국과 독일이 각각 2, 3위

○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조세 및 투자인센티브에 있어 자국기업 및 외국기업 차별 없으며 2003년 1월부터 부과하는 12.5%의 법인세는 EU국가 가운데 가장 낮음.

○ 우수한 노동력, 낮은 운영비, 뛰어난 정보통신 인프라, 첨단물류시설, 쾌적한 생활환경

(6)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

□ 경영성과

○ 현재 외국계 기업이 아일랜드 전체 제조활동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하이테크 분야 다국적기업들의 수출은 지난 5년간 약 2.5배 증가

○ EU로의 시장접근 활용, 수출지향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첨단기술분야 육성, 국내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외자유치를 국내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증진으로 연계

○ 산업별 사례로는 의료업종의 외국기업은 Phizer, Sandoz, Novatis, Baxter, Travenol 등 150개사에 이르며, 2만 5,000명을 고용하고 있고 이들 외국기업의 총수출은 아일랜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활동

○ 다국적기업이 설립한 자회사들이 현지국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

동이 해당국전체 연구개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무려 60%를 초과하는 등 생산 및 연구개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4) 싱가포르

(1) 투자유치정책

○ 싱가포르의 경제시스템은 정부주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투자유치도 정부의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이 기획하면 여타 정부기관, 민간기업, 노조, 일반국민까지 유기적으로 활동

○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함에 따라 도시국가로서의 체계적인 국가운영시스템에 따라 투자유치도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됨.

○ 통산부 산하의 경제개발청이 외국인투자 유치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외국인투자자의 문의에 대한 신속한 처리, 투자인센티브 신청서에 대한 평가, 공장부지 및 인력과 관련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싱가포르의 투자인센티브는 신기술 및 신공정의 도입을 촉진하고 생산성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는 사업,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 국제적 금융·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사업에 제공

○ 투자유치는 경제개발청이 전담하지만 공단개발은 JTC(Jorong Town Corporation)에 일임하여 추진

○ 기획유치 접근방식으로 다국적기업의 투자 계획과 싱가포르의 중·장기적 경제발전 목표 간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목표가 기존 고용창출·지역개발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로 정착되면서 세계 초우량기업 유치를 최우선과제로 추진

⑵ 투자유치기관

□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 of Singapore)

○ 싱가포르의 투자유치 담당기관으로 1961년 재무부 소속으로 설립되었으며 1979년 이후 현재까지 통상산업부 법정기관(Statutory Board)으로 되어 있음.

○ 국내와 해외를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서의 경제개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막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싱가포르 경제발전을 책임지고 각종 인센티브 수립운영에 권한을 가짐.

○ 무역개발청(TDB), 주롱도시공사(JTC),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 하에 투자관련 전 분야에서 One-Stop 서비스와 투자입법, 인프라 및 인력확보, 조세인센티브 제공하고 잠재투자가의 발굴 및 투자가에게 정보제공·산업용지·운영시설·금융·사업파트너 및 숙련인력 확보가 가능토록 후원

○ 해외본부, 클러스터 개발, 기업서비스, 기업 환경 및 계획 등의 4개 본부가 있으며, 17개 해외조직망을 가짐(북미 7, 유럽 5, 아시아 5개)

⑶ 투자인센티브 제도

□ 개척자격(Pioneer Status)

○ 싱가포르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생산을 위한 신기술 도입의 경우 제품유형, 기술수준에 따라 5-10년간 법인세를 26% 감면함. 면세 기간 중 손실은 기간종료 후로 이월가능하며 또한 개척자격 기간 종료 후 추가 개척 자격(Post Pioneer)으로 인가받게 되면

최장 10년간 10%의 법인세율 적용

□ 생산설비 확장(Expansion Incentive)

○ 기존 제조기업이 1천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의 생산설비를 확장할 경우 확장부분의 소득에 대해 확장일로부터 최고 10년까지 법인세 감면

□ 투자소득 공제(Investment Allowance Incentive)

○ 개척자격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치를 받지 않은 기업이 승인된 산업분야(제조, R&D, 건설, 식수절약) 활동을 위한 자본설비에 5년의 법정기한내 투자를 시행할 때 신규투자액의 50%까지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 사업본부 설치(Operational Headquarters)

○ 국제적인 조직망을 갖춘 기업으로서 싱가포르 내에 본사업무를 담당하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자회사를 관리하는 경우 관리비·이자·로열티·외환거래수입·역외투자수입 및 기타 소득에 대해 설립 후 최고 10년까지 본부 법인 또는 해외자회사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5-10%의 세율을 적용

○ 외국 원천배당소득은 10년간 비과세이며 비과세 소득으로 지불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 가속 감가상각 지원 (Accelerated Depreciated Scheme)

○ 기계설비에 대한 통상적 감가상각율(초기 20%, 매년 5-20%)대신, 컴퓨터 및 자동화설비·산업용 로봇 등에 대해 연 100% 또는 33.3%의 감가상각을 인정해 주거나 산업용 건물에 대하여 25년간의 감가상각 인정

□ 해외 융자액에 대한 지원 (Approved Foreign Loan Scheme)

○ 생산설비 구입을 위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2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 융자를 받은 경우(단, 면세액이 해외에서 과세가 되지 않을 경우) 이자에 대한 원천과세 감면

□ 금융지원

○ 금융지원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자진흥 담당기관인 경제개발청과 기타 유관기관들의 자체지침에 의해 시행

○ 다만 경제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규모 투자는 경제개발청(EDB)이 개별 투자건마다 비공개로 지원폭 결정

□ 투자유치제도의 특징

○ 인센티브의 적용에 있어서, 싱가포르에서 투자유치 혹은 진흥을 위한 인센티브들은 거의 대부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

5) 해외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비교

○ 앞의 절에서 분석된 4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사례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됨.

〈표 2-24〉 4개국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비교

	네덜란드	영 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투자유치정책	o유치중점:고도기술산업, 기업 유럽지역본부 유치, 물류센터 유치 o주요목표 : 국토 균형성장/고용창출	o유치중점:고도기술산업/R&D중심 산업구조 고도화 o지방정부간 투자유치정책이 경쟁체제 양상	o낮은 법인세율 o용지 무상대여 oSoftware, 전자상거래 등 국제 무역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유치	o유치중점:국제적 금융 / 비즈니스 거점화 o주요목표:산업구조 고도화 및 수출촉진산업 유치

			o고급인력의 양성 (외국어, 전문기술 등)	
투자 유치 기관	o중앙투자유치기관 (NFIA) -경제성, 지방투자유치기관, 국제유통협회, 외부성과 협조 -프로젝트팀, 관리지원팀, 마케팅/정보팀으로 구성 -지역편제 (미국/일본 중심)	oUK Trade & Investment -투자유치 총괄 -12개 지역 개발청간의 업무조정	oIDA -지속적 외투성과 모니터링 -전문적 인력운영 (채용, 해고 등 권한보유) -관련 정부기관 네트워킹 능력 보유/PM의 권한 및 역할 수행	o싱가포르 경제개발청 -재무부 소속 -각종 인센티브 수립/운영에 권한 보유 -One stop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클러스터 개발, 기업서비스 등 4개본부 구성
투자 인센 티브	o내/외국인 동일 적용 o지방정부 보조금 o현금보조 o고용/훈련보조금 o세금인하/감면	o일반인센티브 -지역선별보조금 -투자장려지구 -자유무역지대 o세제인센티브 oR&D개발인센티브 -EUREKA, LINK제도 등 oEU의 금융지원	o보조금 지급 -현금보조금 (고정자산 관련) -자본보조금 (부지, 신규시설 관련) -고용보조금 -직업훈련보조금 -R&D보조금	o개척자격 (신기술 관련) o생산설비 확장 o투자소득 공제 o사업본부 설치 o가속 감가상각 지원 o해외 융자금액 지원 o금융지원
투자 유치 제도 특징	o내/외국인 동일 적용 o투자에 대한 간단한 행정절차 o외투기업에 대한 외환통제가 완전 자유화됨 o국내기업들과 동등한 법적 지위	o차별적 특혜를 제공하지 않지만 영국이 투자의 적소라는 점을 강조(R&D 및 금융의 중심지, 영어 사용 등을 강조)	o내/외국인 동일 대우 o서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12.5%의 법인세율 o우수한 노동력 o낮은 운영비 o정보통신/ 물류 인프라	o내/외국인 동일 대우 o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투자 환경	o우수한 지정학적 지위 o인프라 -최고수준의 SOC -잘 발달된 항만/내륙운송 시스템 o우수한 노동력 -외국어 구사능력 -탄력적인 노동시장 o효율적 금융시스템	oScience/바이오 산업의 메카 o세계적 R&D시설 보유 o바이오산업 메카 -전 세계 43%의 바이오산업 기업이 산재	o약 1,200개의 고도기술 산업기업 산재 oEU로의 시장접근 용이	o고도의 전문화 인력 -외국서 사용 및 전문기술/지식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사례

1) 외국기업 투자유치 경쟁력 결정 4대 요소

□ 투자유치경쟁력 4대 요소

○ 시스템분야 :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인력시스템, 정부조직 간의 구조, 노사관계 등 유치업무의 시스템요소 등

– 고급 인적자원(영어, 전문 인력)

– 긍정적 노사관계 정립

– 관련 기관 간 협조 (ex:중앙/지방정부간, 다수 유관 기관 간)

– 규제 완화 및 간소화

– 적극적인 마케팅/홍보 프로그램

○ 인센티브 :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자치단체 등에서 외국투자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비용절감 효과, 세제 감면, 정부지원금 등

– 관세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의 인센티브

– 세제 감면 조치

– 정부 지원금

○ 인프라(Infrastructure) : 도로 및 항만 등의 기반시설과 정주 외국인이 사용하게 될 지역적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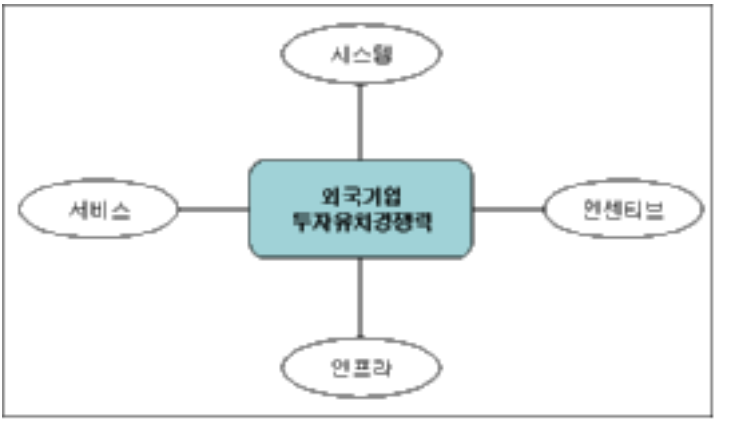
– 도로 등 물류 인프라

– 외국인 정주환경(교육, 교통 등)

○ 서비스 : 서비스지향으로의 공무원들의 인식변화와 서비스행정(원스톱 행정서비스) 등

– 서비스 행정 및 (공무원) 인식변화

– 자금지원, 입지선정, 인·허가 문제 등



〈그림 2-13〉 투자유치경쟁력 4대 요소

□ 투자유치경쟁력 4대 요소의 강화의 제반조건

- ○ 투자유치 공무원들의 마케팅 지향적 자세로의 전환
- ○ 지역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FDI 유치의지 천명 및 행동
- ○ 4대 요소 중 한 요소의 강화가 아닌 산업의 특성과 부가가치를 고려, 종합 및 균형적으로 4대요소의 고른 발전 필요

2) 경기도 투자유치사례를 통해서 본 투자유치 성공요인 분석[3)]

(1)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제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반도체산업 유치(대상기업: 산플러스)

- ○ 빠른 행정절차 과정과 자금지원/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3) 이 절에서는 경기도청(2006)의 「나, 세계의 장벽을 허물어 가는 이야기: Tales of Breaking the World's Barriers」와 「나, 찍새와 딱새의 이야기: Global Investment Base Camp」의 사례를 통해 투자유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음.

– 산플러스의 경우에는 36억 4천만 원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제공받고, ‘고도기술수반사업 인증’으로 조세감면을 제공받았고, ‘고도기술수반사업 인증서’ 등 각종 인증서의 빠른 교부가 이루어 졌음

○ FDI 관련 정부부서간의 원활한 협력 필요

– 여러 가지 행정절차 과정에서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의 협력과정에서 마찰이 생겨 시간적 손실이 발생

○ 원천기술(핵심기술)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확보: GaN(갈륨 나이트라이드) 등 반도체 원천기술

○ 정주환경의 애로 사항(자녀교육 문제 및 생활환경) 해결 필요

□ 인센티브제공을 통한 글로벌소재기업 유치(대상기업: 3M)

○ 경기도는 3M을 경기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도내 R&D 클러스터 조성계획 및 경기도 투자 인센티브 제시

○ 경기비전 2006로 대표되는 외국투자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 첨단산업 위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외자유치 추진

– 글로벌 기업의 R&D 및 물류 센터 유치 강화

○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 지속 공급

– 소규모 임대단지 및 투자업종에 적합한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 지속 공급

– 평택 환곡(1), 화성 장안(1), 장안(2), 평택, 오성 파주 당동 등

○ LG Philips LCD, 스미모토 화학 유치 등 외국 투자기업 유치시 제공한 인센티브

–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외국인투자 대기업 첨단업종 입지 허용

–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 외국인 전용단지에 투자금액에 따라 임대료 전액면제 가능 / 고용보조금 지급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1인당 50만원, 업체당 최고 10억 원)

○ 5대 글로벌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 LCD 클러스터 : 파주 LG Philips LCD 산업단지 및 협력단지 등 7세대 LCD의 세계 최대 생산시설

– IT·LCD 클러스터 : IT · LCD · 반도체 및 나노기술 집적(평택~화성~수원~성남 지역에 세계적 기업과 연구소 집적지 조성)

– BIO 클러스터 : 안산~화성~수원에 R&D와 생산거점 연계 바이오 벨트를 육성

–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 서해안 공업지역을 중심으로(시흥~안산~화성~평택)

– 도자산업 클러스터 : 경기 동남부 중심으로 육성(이천~여주~광주)

○ 2대 R&D 중심지 개발 및 7대 핵심 연구시설 구축

〈표 2-25〉 2대 R&D 중심 및 7대 핵심 연구시설

2대 R&D 중심지	7대 핵심 연구시설
1. 광교 테크노밸리 R&D 지구 ('04~'10) 2. 판교 IT지구('04~'09)	1. 나노소자특화팹센터('03~'06) 2. 무선 인터넷 연구원('04.03~) 3. 경기바이오센터('04~'06) 4. 바이오장기 생산 연구시설 ('04~'05) 5. 차세대융합기술원('04~'07) 6. 경기테크노파크(운영중) 7. 경기대진테크노파크('04~'13)

자료: 경기도청, 2006.

○ 경기도는 3M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수차례의 실무자간 상담과 현장방문 및 손학규 경기도 지사의 3M 부회장 면담 등 지원활동을 실시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소재기업 유치(대상기업: NH테크노그라스)

○ 경기도는 경기도가 보유한 산업에서의 역할과 구조, 장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 또한 NHT는 조세감면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경기도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고도기술 수반사업 사전확인을 받아내고 투자 유치를 확정

○ 적극적인 홍보정책과 조세, 환경관련 문제해결 지원

○ 산업의 특성상 공업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NHT의 사용 후 공업용수 방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관계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기준 이내로 방류를 할 경우에 하류로 방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도록 경기도가 지원활동을 벌임.

(2) 인프라스트럭쳐 제공 및 정비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동차부품회사 유치(대상기업: 델파이)

○ 세계적인 자동차부품 회사인 델파이사가 진입도로 개설 어려움으로 용인시에 추진 중이던 연구소 설립을 포기하려 했을 때 경기도는 도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 및 사후 지원활동을 통한 유치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제공

○ 외국인 기업 환경 인프라 개선사업을 진행해야 함

– 외국인 창업보육센터 및 외국인 가족의 문화, 교육, 정보교류의 장을 위한 Invest Korea Plaza 설립 등의 노력

○ 중앙정부의 지원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 전시효과만을 노린 투자유치 정책을 지양해야 하며, 국가적인 견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적인 발전 요망

○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투자기업이 호소하는 애로사항

– 노사문제, 금융, 외환, 세제문제에 대한 지원 및 해결

– 환경관련법, 군사시설 보호 관련법, 토지이용 관련사항에 대한 지원 및 해결

(3) System 정비 – 고급 인적자원(영어, 전문 인력)· 긍정적 노사관계 정립· 관련 기관 간 협조 등

□ 시스템 변화를 통한 투자유치 확보(대상기업: Axesstel)

○ 한국(지방)의 기술적,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

– 외국 투자 유치 마케팅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로서 활용

○ 공장 및 R&D 연구소 등의 건설에 있어서 경기도는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여 협상자, Facilitator, 서비스맨으로서 기능

○ 적극적으로 먼저 외국 투자 기업을 방문, 투자정보,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투자유치시스템의 정착)

○ 가능성 있는 기업의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인프라)과 투자유치 시스템의 상호 발전의 방향을 추구

○ 지방정부는 현재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하지만, 그만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유치하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함

□ 유연한 행정 처리를 통한 투자유치 확보(대상기업: 나노테크 미쿠니)

○ 유연성이 있는 행정처리 필요: 투자유치 후 공장부지 등 세부사항에 있어서 유연한 협상과정이 필요

○ 사후 A/S 관리 필요

– 경기도의 경우 최고 행정책임자와 해당 투자기업의 CEO와의 간담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투자유치 정책 보완점

– 유치 시 절차상에 관한 자료의 보완: 일괄적인 필요조건의 제시 등 간단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필요

– 입주 공단의 사전방문 등 투자 예상 기업의 편의를 위해 사전 공단 방문이 요구됨

□ 중앙–지방정부간 조율자 역할을 통한 투자유치 확보(대상기업: Prexair)

○ 적극적인 투자 유치 공무원들의 태도와 일처리 방식이 하나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음

○ 간소화된 법적 및 행정적 처리와 항상 어디에서나 동일한 규제의 적용이 필요

○ 정부기관의 양방향 활동 필요

– 정부기관이 해당 투자기업과 관련기관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투자기업과 모기업과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의 장점 등을 홍보하고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동

○ 투자 관련기업과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중앙 혹은 지방정부의 개입과 해결 지원이 필요

(4) 서비스 행정

□ 규제완화활동을 통한 투자관계 개선(대상기업: LG-Philips LCD)

○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기관(경기도)의 노력

- 정부 수도권 규제정책의 변경: 24개 첨단업종 중 외국인 투자비율 51% 이상인 대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장의 신/증축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수십 차례 지휘보고 및 TV토론 등을 거쳐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인 25개 첨단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완화하고 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만듦.
- LG 필립스의 공장착공 일정 단축 요청에 대한 정부기관(경기도)의 노력: 유관기관의 종합/공동적인 유치/지원 노력: 2단계로 Task Force 팀을 구성하고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여 산자부 주관으로 15개 부처로 구성된 중앙지원반과 관련기관을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합동으로 지원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장애 극복

-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 정부기관의 규제의 완화 노력
- 군사협의: 관련부처 실무(국장급) 간담회를 비롯한 지속적인 군과의 협의
- 문화재 시/발굴조사: 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노력 끝에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 묘지이장: 공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묘지들의 이장을 위한 군사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처리를 대행함
- 인프라 시설 지원

○ LG 필립스 투자유치 성공 요인

– 투자기업에 대한 철저한 정보 분석과 신뢰 구축

–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 및 조직정비

–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원활한 증액투자와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원반'을 구성하여 산자부의 무역투자실장이 총괄, 14개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24명의 담당자들이 참여. 정부지원반은 공업배치법 시행령의 개정은 물론 군사협의, 인프라 지원은 물론, 산업단지 지정 절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실시계획 절차 등에 있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냄.

–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지속적인 행정지원 및 A/S활동을 통한 투자관계 개선(대상기업: Chisso Korea)

○ 투자 유치 이후 적극적인 사후 관리(행정 A/S)의 제공

– 부지 선정 이후 공장부지에 경사면을 발견하고 갑작스런 변경을 요구 했지만,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의 빠른 행정처리 및 서비스로 무사히 공장부지를 옮겨 건축할 수 있었음, 경기지방공사의 경우 바뀐 공장부지에 현장사무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측에서 협조하여 매끄럽게 조정하였음

○ 지속적인 외국 투자정책 기조: 외국 투자기업의 경우, 정부관리 책임자 등이 바뀌면서 투자정책의 기조가 변경되는 것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함

○ 도지사 등 지역단체 수장의 적극적인 FDI 추진 필요: 치소 코리아의 경우 도지사가 2번 치소코리아 방문

○ 지역의 우수한 인재의 제공 가능성이 중요함.

○ 교통, 물류,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 상태가 중요함.

○ 첨단기술 보유 기업 유치: 전 세계에서 오직 2곳만이 가진 배향막과 액정을 동시 생산하는 기술

□ 인·허가 관련문제 해결을 통한 투자관계 개선(대상기업: BOC)

○ 적극적인 인/허가 문제 해결 서비스

– BOC의 경우, 개별입지를 허가 받기 위해 KOTRA와 경기도 측에서 법적 절차를 프로젝트급으로 취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했음 / 공장부지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는 고속도로가 건설된 위치와 공장부지가 겹쳐서 이를 협의 끝에 해결

○ 공무원들의 투자유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함(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와 일의 처리에 대한 상호 신뢰)

– 경기도 공무원들의 경우,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 해결

제Ⅲ장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국내외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제도
제3절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제도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제도

제1절 개요

○ 외국인 투자에 있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지국(Hosting country)의 투자환경인데, 이에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있음.

○ 경제적요인은 주로 내수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생산비용 및 투자 수익률 등이고, 비경제적 요인은 다시 세무, 금융/외환, 정부정책, 노사관계 등 제도적 요인과 의료, 교통, 주거 등 외국인 생활환경 등 사회적 인프라 요인으로 나눌 수 있음.

○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환경이란, 투자 유치 증대를 위해서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을 외국인이 선호할만한 제도나 편의로 제공하는 것

– 이 중 경제적 요인은 단시간 내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 비경제적인 요인을 개선시킬 수 있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이 장에서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제도와 지원 내용을 정부와 서울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외국인 투자에 있어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제한 등을 파악해 우리의 투자환경이 어떤 정도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제2절 국내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제도

1.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방향

○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은 기존의 차관위주 외자도입정책이나 외국인투자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수준에서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음. 이에 따라 1997년 1월 13일 외자도입법의 명칭을 변경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하 외촉법, 법률 제5256호)을 새롭게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제도를 국제규범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절차의 간소화를 꾀하였음.

○ 1998년 정부는 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공포하고 외국인투자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

– 제정된 법을 통해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조세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을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자유치 전담기구를 설립,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국가의 긴급한 외환보유고는 어느 정도 확충되었고, 기업구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기업의 인수·합병(M&A) 매물이 줄어들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M&A가 부진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 정부는 2003년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대폭 확충하여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해로 삼음.

- 두 차례의 토론과 국무회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을 확정함(2004년 9월 2일).
- 외국인투자가 국가경쟁력제고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경쟁국과 대응한 수준이상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매력도 제고,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 공무원의 포상금제도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외촉법을 개정함.
- 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 7281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차 개정을 단행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첫째, 외국인투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외국투자가에 대하여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여 그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등 외국인투자유치제도의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임.

○ 앞으로의 방향은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며, 질적인 측면에서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는 질적으로 고도화된 투자의 유치임.

2. 외국인투자의 자유화와 그 제한

○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음.
- 이러한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를 금지 한다' 라기

보다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을 일컬음.

〈표 3-1〉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 우편, 중앙은행, 개인 · 사업공제, 연금, 증권 및 선물거래소, 기타 금융시장관리, 어음교환 - 입법 · 사법 · 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경제학연구개발,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 - 교육기관(유아, 초등에서 대학, 특수학교 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 · 전문가 · 환경운동 · 정치 · 노동운동단체 등

자료 : Invest Korea, 2004.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 할 수 없음

- 그러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라도 외국인은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 비율이 1%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부터 6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해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 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알리기 위하여 『외국인투자통합공고』 제도를 시행

-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는 제도임.

〈표 3-2〉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제한업종	외국인투자허용기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벼,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함
육우사육	외투비율 50% 미만
연 · 근해어업	외투비율 50% 미만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	신문은 외투비율 30%미만, 그 외는 50% 미만
핵연료가공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 · 공급 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발전업	원자력발전 제외하고는 허용함. 단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송전업, 배전 및 판매업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아니며, 외투비율 50% 미만
육류도매	외투비율 50% 미만
내항여객, 내항화물운송	남 · 북한간 운송, 국내회사와 합작필수, 외투비율 50%미만
정기, 부정기 항공운송	외투비율 50% 미만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유선전화사업 무선전화사업,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 기타 전기통신업	외투비율 49%이하(다만 한국전기통신공사 (KT)는 외국인 최대주주 제한 및 1인 투자비율 15% 이하)
국내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허용 (특수은행과 농수축협 미개방)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미개방
방송채널사용	외투비율 33%이하, 단 종합편성 및 보도프로그램 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은 미개방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방송	외투비율 33% 이하, 단 중계유선방송은 미개방
위성방송	외투비율 33% 이하
뉴스제공	외투비율 25% 미만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제외하고 허용

자료: Invest Korea, 2004.

3.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 외국인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러한 경제효과에 대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

○ 또한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는 투자는 시장정보의 제약 등으로 자본이동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불리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도 있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1) 조세감면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인데, 헝가리,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별도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음.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지, 자금 등의 차원에서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임.
- 더욱이 1996년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유해조세 경쟁 방지를 위한 규제움직임이 있으며(현재 금융부문 및 서비스부문에 한정), 장기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어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조세지원보다 현금지원 및 부지무상제공 등의 직접 재정지원 및 인프라 조성 등의 간접 재정지원방법으로 전환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해당 기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등인 경우, 법인세 · 소득세, 취득 ·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 일정 조건 충족 시 관세 ·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법인세 · 소득세,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 감면

○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득과 배당소득, 기술도입대가,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 법인세 · 소득세를 감면하고, 취득 ·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있음.

〈표 3-3〉 조세감면대상기업

구분	조세감면요건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다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신고일 기준)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으로서 공장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		- 제조업은 투자금액 3천만 달러 이상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 국제회의시설 등은 투자금액 2천만 달러 이상 - 물류(유통)산업, SOC는 투자금액 1천만 달러 이상 - 고도기술 등의 연구시설은 투자금액 5백만 달러 이상에 석사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 합계액이 3천만 달러 이상 - 이상의 조건은 외국기업 희망지역인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외국기업 전용지역인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의 대상이 됨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5백만 달러 이상 투자한 물류업 - 1천만 달러 이상의 제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제조업, 관광업은 투자금액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은 투자금액 5백만 달러 이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 비율 50% 이상으로 총 개발사업비 5억 달러 이상
제주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 비율 50%이상으로 총 개발 사업비 1억 달러 이상
제주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생명공학, 정보통신, 문화, 첨단기술
	제주투자진흥지구	- 관광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시설업, 대체에너지사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 투자금액 1천만 달러 이상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 제조업은 투자금액 1천만 달러 이상, 상시 고용원 100명 이상 - 물류업은 투자금액 1천만 달러 이상

자료 : Invest Korea, 2004.

○ 조세감면 대상은 신규로 공장시설이나 사업장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이며, 사업의 양·수도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폭이 3년 50%, 2년 30%로 축소됨. 구체적인 조세감면 내용은 <표 3-4>에 제시됨.

〈표 3-4〉 조세감면 내용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요건
법인세 소득세	- 2004.12.31까지 총 10년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2005.1.1부터 시행 총 7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산업지원서비스업 -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기업 희망지역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총 5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자인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기업 전용지역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기업도시 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사업자인 외국인투자기업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 2004.12.31까지 총 8년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 2005.1.1부터 시행 총 7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산업지원서비스업 -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기업 희망지역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총 5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자인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기업 전용지역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기업도시 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사업자인 외국인투자기업

주: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5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감면비율 제고 가능

자료 : Invest Korea, 2004.

□ 관세 ·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 관세 ·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표 3-5> 참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본재는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투자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한 자본재임.

<표 3-5>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현황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요건
관세	3년간 100%	- 산업지원서비스업 -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사업 - 자유무역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3년간 100%	- 산업지원서비스업 -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사업

자료 : Invest Korea, 2004.

2) 현금지원제도

○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후부터 R&D 센터 설비나 첨단 기술 분야 또는 산업연관효과가 크고 부가 · 가치창출효과가 큰 부품소재 등 대규모 첨단산업을 적극유치하기위해, 투자가와 정부 간 협상에 의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현금보조제(Cash Grant)를 도입 · 실시하고 있음.

○ 현금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표 3-6> 참조).

- 2004년부터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현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지원규모는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부품 · 소재산업의 경우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첨단기술 또는 핵심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에 한정함고 있음.

-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총투자금액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파급효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와 현금지원신청서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현금지원의 한도는 정부의 현금지원, 임대 토지를 제공한 경우 정부의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산정됨.
- 평가시 사용하는 평가기준은 고도기술 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프로젝트의 생존가능성, 고용창출효과, 입지의 적정성 등의 기준임.
- 평가를 마친 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팀은 평가결과보고서와 현금지원건의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자부장관은 동 건의서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위원회에 상정
- 지원을 받는 투자가는 지원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사업을 영위할 의무를 부담
- 현금지원은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됨. 분할지급의 경우 투자계획 변경이나 분할 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 토지 매입비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또는 최종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임대료는 신청인과 임대 토지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후 5년간 비용이 지출된 해의 다음 연도 초에 일시 지급함. 교육훈련보조금

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100만 원이하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함. 고용보조금은 내국인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초과고용 1인당 100만 원 이하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함. 다만 학사급 이상의 이공계 인력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로 12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는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함.

-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기간 중 회사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지원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현금지원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표 3-6〉 현금지원 내역

고려요소	조건	현금지원내용
- 고도기술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 고용창출규모 -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 입지지역의 적정성 -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 투자의 생존 가능성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 사업 영위를 위한 공장시설 · 사업장의 신설 · 증설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최종 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크거나, 첨단 · 핵심 기술을 수반하는 부품 · 소재 생산을 위한 공장시설의 신설 · 증설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위한 연구시설의 신설 · 증설, 단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석사학위 이상 또는 3년 이상 연구 경력의 학사 학위 이상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일 것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 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 ·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자료 : Invest Korea, 2004.

3) 입지지원

□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입지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요건 충족시 국 · 공유재산이 임대되고 임대료도 최고 100%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부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지원하고 있음. 매입비의 분담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국가 40%, 지자체 60%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국가 75%, 지자체 25%로 하고 있음. 임대기간은 50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고, 임대료는 당해 토지 · 공장 그 밖의 재산의 가액에 1%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 그러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안에 있는 토지 · 공장 그 밖의 재산 등의 임대요율은 산업자원부장관,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그리고,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정해지는 요율을 적용함. 국 · 공유재산이 아닌 경우 임대료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비율은 부지매입비율과 동일함.

○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토지 · 공장 그 밖의 재산을 매입할 때, 국 · 공유재산일 경우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 이자는 연 4% 이내에서 지불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

○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를 임대하여 공장시설이나 사업장을 신규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임.

〈표 3-7〉 입지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임대용지 지원 가. 용지매입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지정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 (부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입)		
나.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 국가 소유 토지 등을 임대하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설 시설 운영자	100%이내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제조업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	75%이내	
	–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	50%이내	
* 50년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 갱신가능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100% 감면	
	1백만 달러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단지형외국인 투자지역	100%
		일반산업단지	50%
	5백만 달러이상 제조업	단지형외국인 투자지역	75%
		일반산업단지	50%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조례로 규정		
2. 임대료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		
3. 분양가 차액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 등의 조성원가 이하 분양시 차액 보조 –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차등		

자료: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2004, 2005.

□ 산업입지 지원

○ 한국은 공장 · 지식산업관련시설 · 문화산업관련시설 ·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 자원비축시설 및 관련 지원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

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시대별 · 지역별 성장 주력산업을 수용하여 산업을 발전시켜 왔음. 이러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비해 단지 내의 제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공장설립 등에 관한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비교적 손쉽게 제조업 등의 생산 활동이 가능

○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산업입지는 지정의 목적, 지정 위치, 입주자격, 지원의 범위 등에 따라 외국인 전용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정 · 운영하고 있음.

○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불렸던 외국인투자지역(Type B)은 원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단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었으나 2004년 12월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이를 이관 받아 외국인투자지역의 한 형태(Type B)로 규정되었음.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Type A)과 같은 조세감면 혜택 부여. 현재 충남 천안, 충북 오창, 광주 평동, 전남 대불, 경남 진사, 경북 구미가 외국인 전용단지로 지정

○ 외국인 투자지역은 개별형과 단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제조업과 관광업, 물류업, 연구개발업 등 업종별로 5~30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활동 공간을 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 및 임대료 감면 지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산업단지내의 일정구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임대전용으로 운영하며, 입주기업에 대해선 부지매입비의 1% 범위의 저렴한 임대료와 업종별로 5~10백만달러 이상 투자시 조세감면 지원. 현재 경남, 사천, 충남 천안, 경기 평택, 경남 양산, 전북 전주, 전남 여천, 충남 연기, 충북 음성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보장과 관세상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 및 유통, 화물터미널 지역에 대해 지정하며, 관세를 면제시킨 보세구역으로, 수출목적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물류관련사업, 수출입 거래 목적 도매업 영위자 등의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선 임대료 및 조세감면, 관세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 현재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 광양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 경제자유구역은 해당 구역 내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활동 이외에 생활 및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의료, 주거환경, 행정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예외적 지원을 인정한 포괄적 개념의 행정 지원 구역으로 볼 수 있음. 현재 부산·진해, 인천, 광양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표 3-8〉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주요 산업입지제도

구분	외국인투자지역 (TYPE A)	외국인투자지역 (TYPE B)*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 위치	제한없음 (외국인투자기업이 선택하는 지역)	산업단지 내	항만, 공항주변 지역, 산업단지	항만, 공항주변 지역, 산업단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 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 현황	8개지역	6개단지	8개 지역	4개 지역	제주
입주 자격	외국인투자기업(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물류, SOC, R&D센터)	외국인투자기업(투자지분 30% 이상)	국내외 기업(제조, 물류, 무역, 지원 서비스업, 외국인지분율 10%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1천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제조업, 관광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과 5백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첨단산업, 관광산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항만·공항시설 운영업 등)	
임대료 지원	100%	· 백만 달러 이상,고도기술 수반:100% 감면 · 오백만 달러 이상, 일반 제조업: 75% 감면	최대 100% 감면	· 외국기업에 임대하는 부지 조성, 토지 등에 임대료감면 · 외국인 편의시설설치 소요 자금지원	· 대체조림비, 대체 초지 조성비, 농지조성비에 대해서는 50%감면 · 투자시설용국·공유지는 50년간 임대 및 사용료 감면
세제 지원	법인.소득. 지방세(5년간 100%, 이후 2년 50% 감면)	고도기술수반 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 TypeA와 같은 지원	제조업 1천만 불 이상,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법인. 소득. 지방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법인. 소득. 지방세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	법인. 소득. 지방세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
특징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부지를 제공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 아니라 외국인이 원하는 곳을 지정해 운영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기업 중심으로 운영	외국인도 생활하기 편한 도시 형태로 개발	제주도를 금융, 첨단산업과 관광이 결합 동북아중심도시로 개발

주: 종전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불렸던 특구제도로서 원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왔으나 2004년 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이관되어 규정됨.
자료: Invest Korea, 2004.

4) 재정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조세지원과 더불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임.

○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1대 주주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신규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의 50%로 하고 있으며, 증설

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금액의 50%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더한 금액의 25% 범위(전체금액 중 FDI가 25% 이상 차지해야함) 중에서 큰 금액을 지원한도로 함. 자세한 내용은 <표 3-9> 참고.

<표 3-9> 재정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1.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최대 6개월간 월10만원~50만원까지 지자체가 지급하는 금액만큼 지원
2. 고용 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초과 1인당 월10만원~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3.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 조성 지원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진입도로 · 용수시설(100%), 폐수종말처리시설(50%) 지원
4. 생활환경 개선지원	교육 · 의료 · 주택 등 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수준 결정 - 외국인학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지원

자료: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2004, 2005.

4.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1) Invest KOREA

○ 투자유치기관의 투자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중점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기관인 Invest KOREA가 2003.12.5에 출범하였음.

- 산업별 투자유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력산업유치팀, 서비스산업유치팀, 신산업유치팀의 3개 팀이 있음.
- 사전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 투자컨설팅팀이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사후관리 기능 수행을 위해 투자환경개선팀과 외국기업고충처리팀이 활동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가의 애로사항 처리를 위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두고 있음.

○ Invest KOREA는 KOTRA 내에 설립된 한국의 공식적인 외국인투자유치기관으로서의 외국투자가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

- 원스톱서비스란 초기의 투자 상담부터 조세·관세에 대한 감면 절차 및 법인설립절차 등 분야별 전문상담, 공장부지 선정 및 매입을 위한 현장지원, 공장설립 인가 등 각종 인·허가의 직접 또는 일괄대행처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의 정착을 위한 생활여건 상담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밀착 서비스라 할 수 있음.
- 구체적인 Invest Korea의 외국인투자 지원 서비스분야는 첫째, 단독투자, 합작투자, M&A, 부동산투자 등 투사상담 및 제도안내. 둘째, 투자신고 처리, 합작파트너 물색 및 시장조사 수행. 셋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취득 등 각종 행정절차 직접처리 및 일괄 대행처리. 넷째, 주택, 학교 및 의료보험 등 외국투자가의 국내정착 지원 및 고충 처리. 다섯째, 신설법인의 설립대행 처리 등이 있음.

2)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 이하 PM) 제도

○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PM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PM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제공 및 면담의 알선, 외국인투자관련 조세감면·국공유 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지

언 및 현금 지원에 관한 의견제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업무지원과 민원의 대행, 주택임차·학교입학의 안내 등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지원 등의 일을 담당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현을 위해 도입된 PM 제도의 신속한 정착 및 효과성 있는 PM의 역량 발휘를 위해 PM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대상은 일반적으로 Invest KOREA 소속직원 및 파견공무원 등 50여명 수준이고, 교육기간은 연2회로 보통 3개월 기간에 걸쳐 총 10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 교육 내용은 투자유치 업무에 필요한 중급 재무회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협상기법, 관련법 등으로 구성

3)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사업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필요

- Invest KOREA에서 투자유치관련 절차, 상담·컨설팅, 제도적 지원사항, 투자애로해소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행정처리, 사후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적 시스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 국가 차원의 투자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외국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환경, 인센티브, 투자절차, 경제정보, 입지지원 등의 각종 투자관련 정보를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서비스할 계획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2004~2008년)을 통해 외국인

들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구축할 예정

- 2004년 3월 교육, 주거, 의료 등 6개 분야의 102개 과제를 정부와 공동 수립하여 과제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 추진

제3절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제도

1.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1) 조세 인센티브

□ 국세 및 지방세

○ 단지형 투자지역 혹은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입주기업에게는 국세에 대한 감면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의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표 3-10〉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내용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감면 투자요건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지방세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종토세 ※ 지방세의 경우 10년간 감면	7년간 감면 - 5년 100% - 2년 50%	고도기술 : 없음 투자지역 - 제조업 : 3천만$ - 관광업 : 2천만$ - 물류업 : 1천만$ - R&D : 5백만$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5년간 감면 - 3년 100% - 2년 50%	제조업 : 1천만$ 관광업 : 1천만$ 물류업 : 5백만$ ※기업도시 : 1천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 7년 100% - 3년 50%		FDI 3천만$ 이상 외투 50% 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불 이상

자료: 서울특별시, 2006.

□ 관세 등 면세(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3)

○ 단지형 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기업에게는 관세 (일정요건 성립시,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 혹은 유보 등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하고 있음.

<표 3-11> 면세 내용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대상기간	감면 투자요건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3년내 수입신고 완료대상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 - 반입외국물품에 대한 관세유보 - 반입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관세		

자료: 서울특별시, 2006.

□ 재정지원

○ 지원기준은 외투비율이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 신규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범위내, 증설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25%를 합산한 금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단, 후자의 경우 전체금액중 외국인투자가 25%이상 차지해야 함).

〈표 3-12〉 재정지원 내용

<table>
<tr><th>지원대상</th><th colspan="2">지원내용</th></tr>
<tr><td>(ⅰ) 임대용지 지원
① 용지매입</td><td colspan="2">·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등의 지정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td></tr>
<tr><td rowspan="8">②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50년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 갱신가능</td><td>감면 대상</td><td>감면 내용</td></tr>
<tr><td>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체</td><td>100% 감면</td></tr>
<tr><td rowspan="3">고도기술수반사업 & 1백만 달러 이상</td><td>외국인기업 전용단지 100%</td></tr>
<tr><td>국가산업단지 50%</td></tr>
<tr><td>지방산업단지 50%</td></tr>
<tr><td rowspan="3">일반 제조업 & 5백만 달러 이상</td><td>외국인기업 전용단지 75%</td></tr>
<tr><td>국가산업단지 50%</td></tr>
<tr><td>지방산업단지 50%</td></tr>
<tr><td colspan="2">※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조례로 규정</td></tr>
<tr><td>(ⅱ) 분양가
차액보조</td><td colspan="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토지 등의
조성원가 이하 분양시 차액 보조
–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차등</td></tr>
<tr><td>(ⅲ) 임대료 보조</td><td colspan="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td></tr>
<tr><td>(ⅳ) 교육훈련
보조금</td><td colspan="2">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지자체가 지급하는 금액만큼 지원</td></tr>
<tr><td>(ⅴ) 고용보조금</td><td colspan="2">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진입도로 · 용수시설(100%),
폐수종말처리시설(50%) 지원</td></tr>
<tr><td>(ⅵ)외국인투자지역
Infra 조성 지원</td><td colspan="2">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진입도로 · 용수시설(100%),</td></tr>
</table>

	폐수종말처리시설(50%) 지원
(vii) 생활환경 개선지원	교육 · 의료 · 주택 등 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수준 결정 – 외국인학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지원

자료: 서울특별시, 2006.

2) 현금지원(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4조의 2)

○ 외국인투자 1천만 달러 이상인 고도기술수반사업, 부품소재, 혹은 산업지원서비스업 기업이거나, 5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석사급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R&D 분야의 기업에 대하여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등을 평가하여 현금지원을 함.

○ 입지지원 등의 재정지원과 중복지원하지는 않으므로 과다한 부지가 요구되지 않는 고도기술 수반업종은 현금지원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넓은 부지가 요구되는 업종은 재정지원 선택이 유리함.

〈표 3-13〉 현금지원 내용

구분	세부사항
대상	ⅰ) FDI 1천만 달러 이상인 고도기술수반사업 · 산업지원서비스업 ⅱ) FDI 1천만 달러 이상인 부품 · 소재 ⅲ) FDI 5백만 달러 이상 & 석사급 20이상 고용하는 R&D분야
용도	토지매입비, 건축비, 장비구입비,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기반시설 설치비 등
평가항목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낙후지역 입지, 국내투자와 중복여부 등
지원금액	투자가와 협상을 거쳐 FDI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원 (최소 5% 이상)
보조금 지급 따른 의무	10년간 Cash Grant를 지급받은 사업을 영위 현금지원협약에 의해 규정된 최소의무고용인원을 준수 계약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 감액 또는 의무이행기간의 연장 등 조치
신청절차	i) 사전 상담 신청(서면 또는 구두) ii) 현금지원신청서를 산자부장관에게 제출

	iii) 협상 및 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iv) 현금지원계약 체결 * 신청서 제출 후 60일내 결정, 30일내 연기 가능
기타사항	재정지원(주로 입지지원)과 현금지원은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으며 양 제도 중에서 신청인이 택일 가능

주: 임대부지를 제공받는 경우 정부가 지원한 토지매입비는 현금지원액에 포함
자료: 서울특별시, 2006.

3)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 서울시 추진 투자유치 정책 가운데, 투자유치에 공헌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방식의 간접적인 유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금액,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0.1%~0.02%)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포상금을 수여함.

2. 수도권 정비 계획법

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요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

○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

□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용어

○ 수도권: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

○ 인구집중유발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학교 · 공장 · 공공청사 · 업무용 건축물 · 판매용 건축물 ·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시설

○ 대규모개발사업: 택지 · 공업용지 및 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

○ 공업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해 공업용지 및 이에 부수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지역

□ 기타 관계 법률과의 관계

○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외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을 수립 · 시행하여서는 안 됨.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범위

○ 규제권역: 권역별로 인구집중 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차등 규제를 가하는 것

○ 규제수단: 과밀부담금과 총량규제

○ 계획고권: 계획수립과정에서 지방의 주도권 행사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의의

○ 시 · 도지사, 관계행정기관장의 개발계획 및 공업단지조성계획이 실효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 · 허가가 필요함.

○ 시·도지사, 관계행정기관장의 개발계획 및 공업단지조성계획은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관계부처를 거치면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지역개발계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냄(개발계획에 대한 주도권이 중앙정부에게 있음을 나타냄).

2)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단

□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권역구분 및 규제의 불합리

○ 지역 행정기관에 의해 적합하게 개발된 공업/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는 경쟁력 있는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규제 불일치로 인한 중복규제의 문제

○ 투자유치 및 공업/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중앙정부의 규제와 지방정부 및 기초 자치단체 법률 및 원칙의 적용으로 이중, 삼중의 규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자유치에 심각하게 불리한 조건이 형성됨.

□ 계획고권의 문제

○ 지역에 맞게 개발되어야 할 공업/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방정부나 기초 자치단체가 계획 및 운영권리를 정당하게 소유하지 못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계획의 부적절성과 관리태만의 문제가 예상됨.

3)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지향

□ 지방정부 및 기초 자치단체에게로의 권한 이양

○ 대등한 협상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서로 협조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지역의 자율적 개발능력 확대를 위해 재정 및 도시계획에 대한 대폭적 권한이양의 추진이 요구됨

□ 자금조달체계의 정립

○ 지역 개발에 대한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현행 개발 부담금의 배분율을 국가 25%, 광역자치단체 25%, 기초 자치단체 50%로 조정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정부 및 기초 자치단체들의 인센티브 제공

○ 첨단 고부가가치 공업/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유치결정에 따른 금융지원, 양도세, 취득세의 감면, 법인세의 감면 등과 동시에 첨단정보 인프라 구축·지원, 종업원 주택 및 이전을 위한 금융지원책의 강화가 필요함.

3. 서울시 외국인투자 관계 회의 운영

□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Seoul International Business Advisory Council)

○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들인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 또는 최고 경영자들로 부터 서울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

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2001년 11월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을 창립하여 운영

□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 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

○ 주한외국 상공회의소 회장 및 서울거주 주요 외국기업인 등 27명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투자정책 수립과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과 홍보

○ 주요성과로는 국내외 투자설명회 및 각종 외자유치관련 행사에 발표자로 참석하여 매력적인 서울시 투자환경을 홍보하였고, 서울시 도시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마케팅담당관을 설치할 것을 결정, 서울시의 해외홍보 및 마케팅활동 강화하였으며,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생활환경이 개선돼야 함을 지적하고 서울타운미팅 창설 및 정착에 기여

□ 서울타운미팅

○ 서울거주 외국인들에게 서울시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활동 및 외국인의 생활 관련 시정을 알리고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외국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의 생활 및 투자환경 개선할 수 있는 서울타운미팅을 개최

〈표 3-14〉 서울시 외국인투자 관계 회의

구분	목적	구성	운영
서울국제경제자문단 (SIBAC : Seoul International Business Advisory Council)	서울시경제정책 및 투자환경개선 자문	ㅇ현재 22명 ㅇ해외 15개국 다국적기업 CEO ㅇ세계연구소 및 대학의학자 등	년 1회
외국인투자자문회의	서울투자환경 홍보	ㅇ총 27명	년 4회

(FIAC : 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	및 자문	ㅇ주한외국기업의 CEO, 주한 상공회의소 회장 등	
서울타운미팅	외국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의 생활 및 투자환경 개선	ㅇ서울거주 외국인, 외국인커뮤니티 관계자, FIAC 위원 등	년 1회

자료 : 서울특별시, 2006.

4. 투자 허브의 구축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Seoul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건립

○ 서울시는 여의도에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는 개발과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각각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 추진(2006년 6월 5일 기공).

– 국제금융센터에는 다국적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입주하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호텔 등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

○ 이를 통해 서울이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GNP 증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미디어시티(DMC: Digital Media City) 조성

○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신기술 및 서비스 산업의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2010년까지 상암 새천년신도시 안에 약 17만평의 면적으로 건설되는 뉴미디어와 관련 소프트웨어 중심의 최첨단 정보산업 단지

– 세계 최고수준의 차세대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제공. 테라(Tera)급 이상의 광통신 기간망은 서울시 전용 정보고속도로와

연결되고 무선, 위성통신과 상호 연계되며 세계최고의 통신망 관리체제를 갖추게 될 예정

○ 세계 최고수준의 R&D 기관인 Media 연구소를 권위 있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조성

○ DMC 내에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컨텐츠분야의 기술을 지원하는 문화컨텐츠 컴플렉스를 유치

- 첨단디지털미디어실험장인 DMS(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 Digitam Media Street)가 조성되며 이를 위해 각종 지원 및 건축심의 등을 통해 DMC가 지향하고자하는 이미지를 각 건축물 및 가로시설들이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

○ 공공지원시설 건립을 추진. DMC사업의 조기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성공적인 비즈니스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벤처오피스빌딩, 첨단산업센터, 외국인 임대아파트 등의 시설 건립 추진

○ DMC 내에 랜드마크빌딩 건립을 추진하여 금융, 법률, 컨벤션 등의 국제업무를 지원하고 세계적인 국내외 유수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본부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DMC가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노력

- DMC 사업의 투자와 관련된 모든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행정 서비스를 제공

- 또한, DMC단지내로의 국내 유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세제, 금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시장가격이 아닌 감정가격 및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등 차별화된 택지공급조건으로 제공

5. 외국인 생활환경 여건

1)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경쟁국 수준이상의 외국인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인 친화적 환경 및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이 생활하면서 필수적이나 불편한 사항들에 대하여 집중적 지속적으로 개선

○ 2004년~2008년(5개년)에 거쳐 교육, 주거, 교통 등 외국인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

○ 교육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외국인투자유치의 현안과제인 열악한 외국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용산외국인학교의 건립을 추진하여 2006년 8월 개교할 예정

○ 주거의 경우,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 내에 수영장, 골프 연습장, 헬스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175세대의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건축할 계획(2004년 5월~2006년 9월)이며, 우면동 우면지구 내에 아파트 280세대(12층 기준), 또는 빌라 130세대(4층 기준)의 외국인 임대아파트의 건축을 추진 중에 있음(2004년 3월~2007년12월).

○ 교통의 경우 도로표지판의 외국어표기 정비, 버스정류소 영어 안내방송, 버스노선안내도 영문표기 등의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첫째, 도로표지판 외국어표기 정비와 관련하여, 도로표지에 대해 공무원, 시민, 전문가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일부 오류가 있는 영문표기 정비하는 한편, 기존의 “도로표지신고센터”를 개편하여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시민의 오류신고를 유도하고, 도로표지관리시스템 모니터링과 자치구의 일제점검을 통하여 오류사항을 확인 수정조치
- 둘째, 주요 환승지점 및 전철역에 대해서 버스 내 영어 안내방송

을 실시

- 셋째, 버스정류소 노선안내도에 주요 환승지점 및 전철역에 영문 표기
- 넷째, 외국인 택시서비스 향상방안 일환의 택시기사 영어회화 교육실시할 뿐 아니라, 교육의 실효성을 거양하기 위해 신규·보수 교육 적극 활용 추진하고, 신규자 강화교육 과정에 내용이 보강된 외국어회화 및 친절교육실시
- 다섯째, 버스의 속도향상과 정시성이 입증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서울시 주요간선도로에 설치하여,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 유도하며, 더불어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우대정책의 지속적 확대로 대중교통(버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활성화
- 여섯째, 서울시 및 수도권(전국 포함)에서 10인 이하의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시민 스스로 운행하지 않는 요일을 선택(월,화,수,목,금)하여 해당 요일에 승용차를 운휴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 생활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통하여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

- 2004년 11월에 개관한 송파구 풍납동의 영어체험마을은 초등학생에게 영어체험기회 제공(5박 6일)
-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외국인 서울체험행사 추진, 서울타운미팅 개최, 외국인전자민원서비스 운영, 문화행사 외국인 참여 확대, 매년 50여개국이 참여하는 지구촌 한마당 축제 개최, 국내외 10여 개 팀이 참가하는 서울드럼페스티발, 홈페이지의 외국어 운영(영어·일어·중국어·스페인어·불어) 등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문화 창출

2)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 서울의 외국인들에게 투자·사업 및 생활 등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Seoul Help Center for Foreigners)가 2003년 6월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음

○ 대면상담과 Seoul Hot-Line을 통하여 외국인들의 생활 여건에 관련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Seoul Hot-Line은 서울에서의 생활·비즈니스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네트워크를 이용, 외국인들의 전화·팩스·이메일·인터넷 문의에 응대필요에 따라 심층적인 서비스 기능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기관과 외국인들을 연결해주는 역할 수행

○ 외국인 투자관련 업무로는 센터의 투자상담 전문인력이 투자절차, 인센티브제도 등에 대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시청 분소를 센터 내 개설하여 D8(기업투자) 및 D8에 따른 F3(동반자), F1(가사보조인) 비자 발급 및 90일 이하 단기체류기간 연장 등의 비자발급업무 수행
- 폭 넓은 네트워크를 구축, 공공기관, 법률회사, 회계법인, 국내 비즈니스 파트너 등 비즈니스 유관기관에 외국인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비즈니스 링크 업무 수행

○ JOBS(외국인취업지원시스템)은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시스템으로 구직자와 고용주에 관한 정보를 취합해서 양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

○ MRS(Medical Referral Service,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는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로 24시간 운영.

○ 서울의 비즈니스, 생활, 관광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자료실을 운영. 방문객들은 참고서적, 잡지, 신문, 리플렛 그리고

멀티미디어 자료(비디오테이프, CD, DVD를 포함한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제Ⅳ장 외국인직접투자의 실태조사

제1절 실태조사 개요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 경영성과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 경영환경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의 실태조사

제1절 실태조사 개요

□ 외국인투자 유치 실태조사의 필요성

○ 글로벌 경제의 진전과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국가 및 지역의 산업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에 세계 각국의 정부는 자신들의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적극지원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위와 같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경제현안에 활용하고자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 서울시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인 정책방향의 정립과 시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실태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외국인투자 유치 실태조사의 개요

○ 본 장의 분석은 경영실태에 대한 부분과 경영환경 애로에 관한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음.

- 첫째, 산업자원부와 KOTRA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에 관하여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것과
- 둘째, KOTRA가 3년에 걸쳐 매해 조사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애로조사에 대한 분석을 재정리한 것임.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 경영성과

1. 경영성과 조사기업의 현황[4)]

1) 외국인기업의 투자방식

□ 최초 투자방식

○ 외국인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최초 투자방식은 신규설립이 51.7%, 주식인수가 28.1%, 자산인수 8.7%, 기타 11.7%로 조사됨.

○ 비제조업의 경우도 신규설립이 57.9%로 가장 높고, 주식인수가 33.5%로 그 다음을 차지했음.

〈표 4-1〉 외국인의 최초 투자방식 (단위: 개, %)

구 분	기업 수	신규설립	주식인수	자산인수	기타	계
제 조 업	333	51.7	28.1	8.7	11.7	100.0
비제조업	271	57.9	33.5	3.9	4.7	100.0

자료: KOTRA, ITI and Gallup Korea, 2005.

□ 투자형태

○ 외국인의 투자형태는 합작투자가 46.5%로 가장 많았고, 자회사설립이나 인수합병이 각각 34.1%, 단순지분투자가 19.4%로 조사되었음.

○ 하지만,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달리 합작투자가 24.8%로

4) 이 절에서 분석한 기업현황은 KOTRA와 Gallup Korea가 조사·분석한 「2005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를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2005년도의 설문조사 실시 대상은 604개 표본업체(현황 실태조사 기업 수)임.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고, 자회사 설립이나 인수합병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지분투자도 31.1%로 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표 4-2〉 외국인 투자형태 (단위: 개, %)

구 분	기업 수	합작투자	자회사설립 인수합병	투자수익만을 목적한 단순지분투자	계
제 조 업	333	46.5	34.1	19.4	100.0
비제조업	271	24.8	44.1	31.1	100.0

자료: KOTRA, ITI and Gallup Korea, 2005.

□ 제1대 외국인 투자자와의 관계

○ 제조업에 있어서 제1대 외국인 투자자와의 관계를 보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1대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부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하는 기업이 45.6%에 이르고, '1대 외국투자기업 생산제품 판매' 도 23.9%로 나타났음(복수응답).

– 하지만, '1대 외국투자기업 무관하게 제품 생산·판매' 한다는 기업은 33.3%로 조사되었음.

○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1대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서비스의 국내판매' 가 60.8%로 월등히 높은 반면, '자체 개발 및 구입한 제품/서비스를 제공' 은 35.7%로 조사됨.

〈표 4-3〉 제조업에서의 제1대 외국인 투자자와의 관계 (단위: 개, %)

제조업	기업수	1대 외국 투자기업 생산 제품	1대 외국 투자기업으로 부터 수입한	1대 외국 투자기업에 부품·반제품	1대 외국 투자기업과 무관하게	1대 외국 투자기업과 단순기술 및

		판매	원재료・부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을 제조하여 납품	제품 생산・판매		업무제휴
	268	23.9	45.6		13.0	33.3		24.4
비제조업	기업수	1대 외국투자 기업 생산 제품 / 서비스의 국내 판매	자체 개발 및 구입한 제품 / 서비스를 제공	연구소	인력 서비스 제공	운수 서비스 제공	자회사	금융 서비스 제공
	187	60.8	35.7	0.6	1.0	0.6	2.3	1.4

자료: KOTRA, ITI and Gallup Korea, 2005.

□ 제1대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

○ 제조업에서는 제1대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은 '새로운 설비 도입', '신제품개발', '해외수출결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고전략수립'과 '생산계획결정'에는 영향력이 낮았음.

○ 하지만,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비해 제1대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4-4〉 제1대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 (단위: 개, %)

구 분	기업수	생산계획 결정	새로운 설비 도입	신제품 및 사업 개발	광고 전략 수립	가격 구조 변경	제품 디자인 결정	해외 수출 결정
제 조 업	268	48.9	67.5	66.4	46.8	57.7	54.8	61.9
비제조업	187	79.9	75.0	78.2	66.0	72.8	–	–

자료: KOTRA, ITI and Gallup Korea, 2005.

2) 연구개발(R&D) 활동 및 기능

□ 외국인투자 기업의 연구소 보유

○ 외국인투자기업 중 제조업의 경우, 연구소나 연구부서가 있는 업체는 57.7%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 이 가운데 별도의 연구소가 설립된 업체의 비율은 40.2%로 나타남.

○ 하지만, 비제조업의 경우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12.1%, 연구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11.4%로 나타났고, 76.5%는 연구소나 연구부서를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 외국인투자 기업의 연구소 보유 여부 및 형태

구 분	연구소(부서) 보유 여부 및 형태 (%)		
	연구소	연구부서	연구소/연구부서 없음
제조업	40.2	17.5	42.3
비제조업	12.1	11.4	76.5

자료: KOTRA, ITI and Gallup Korea, 2005.

□ 외국인투자 제조기업의 연구소(부서)의 기능

○ 외국인투자기업 중 제조업의 경우, 연구소(부서)의 기능을 묻는 설문에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개량' 이 87.1%이고, '정보수집 분석' 이 55.6%, '공정개량 및 신공정 개발' 이 44.8% 등의 순이었음.

○ 비제조업의 경우, 연구소나 연구부서가 하는 기능은 새로운 사업 및 서비스 개발 및 개량이 47.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보

수집/분석이 38.3%, 원천기술 개발 또는 기초연구 31.7% 순으로 나타났음.

〈표 4-6〉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소(부서)의 기능

구 분	연구소(부서) 기능 (%)				
제조업	정보수집 분석	제품디자인개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개량	공정개량 및 신공정 개발	원천기술개발 또는 기초연구
	55.6	42.8	87.1	44.8	40.3
비제조업	정보수집 분석	새로운 사업 및 서비스 개발, 개량	원천기술 개발 또는 기초연구	상품개량	품질평가
	38.3	47.4	31.7	1.6	1.2

자료: KOTRA, ITI and Gallup Korea, 2005.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협력형태

○ 외국인투자기업 중 제조업의 협력형태를 살펴본 결과, '제1대 외국투자기업' 이 34.6%로 가장 많았고, '독자적 개발' 이 18.0%로 그 다음으로 나타남.

– 이는 연구개발에 있어서 외국의 모기업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줌.

○ 비제조업의 협력형태에서 역시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 개발시 주로 협력하는 업체는 '제1대 외국투자기업' 이 2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독자적으로 개발' 한다는 응답이 15.1%, '국내 관련기업' 이 14.8%, '국내대학이나 연구소' 가 4.8% 순으로 나타났음.

〈표 4-7〉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협력형태

구 분	연구개발 협력형태 (%)					
	국내관련 기업	국내대학이나 연구소	외국대학이나 연구소	제1대외국 투자기업	독자적으로 개발	기술개발 하지않음
제조업	14.1	16.6	1.4	34.6	18.0	15.3
비제조업	14.8	4.8	0.7	23.1	15.1	41.5

자료: KOTRA, ITI and Gallup Korea, 2005.

□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

○ 연구소(부서)가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중 제조업의 경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했다는 응답이 49.6%로 가장 높았으며, '연구성과가 다소 높음' 이 22.5%, '연구성과는 있었으나 다소 미흡' 이 20.1%로 나타났음.

– 한편, '향후 국내 연구기능을 새로이 시작하거나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체 조사업체의 59.0%에 해당하는 196개의 기업이 '있다' 라고 응답했음.

○ 비제조업체의 경우 역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했다는 응답이 41.8%로 가장 높았고, '연구성과가 다소 높음' 이 26.4%, '연구성과는 있었으나 다소 미흡' 이 17.8%로 나타났음

〈표 4-8〉 외국인투자 기업의 연구 성과

구 분	연구 성과 (%)				
	연구성과 없음	연구성과는 있었으나 다소 미흡	비슷한 수준유지	연구성과가 다소 높음	매우 큰 성과를 거둠
제조업	4.4	20.1	49.6	22.5	3.5
비제조업	–	17.8	48.1	26.4	5.7

자료: KOTRA, ITI and Gallup Korea, 2005.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1)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수익성 비교

○ 외국인투자기업은 전반적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성과지표별로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외국인투자기업이 7.9%, 국내 기업이 7.6%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 0.3% 포인트 높게 나타났음.
-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외국인투자기업이 8.8%로 국내기업 7.8%에 비해 1% 포인트 높으며, 총자본 경상이익률도 외국인투자기업이 10.2%이고 국내기업이 9.4%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 제조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15.0%로 국내 기업의 18.6%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 2003년에 비해 2004년에는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포인트, 매출액경상이익률은 3.1%포인트, 총자본경상이익률은 3.7%포인트, 자기자본순이익률은 5.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종합적으로 2004년의 수익성 개선은 크게 좋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개선 비율을 보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4%, 매출액경상이익률은 54%, 총자본경상이익률은 59%, 자기자본순이익률은 50%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내 제조업과 비교할 때,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총자본경상이익률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국내 제조업보다 0.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표 4-9〉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수익성 비교

구 분	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			차이 (A-B) (%포인트)
	2003년 (%)	2004년(A) (%)	전년대비 (%포인트)	2003년 (%)	2004년(B) (%)	전년대비 (%포인트)	
매출액 영업이익률	6.9	7.9	+1.0	6.9	7.6	+0.7	+0.3
매출액 경상이익률	5.7	8.8	+3.1	4.7	7.8	+3.1	+1.0
총자본 경상이익률	6.4	10.1	+3.7	5.2	9.4	+4.2	+0.7
자기자본 순이익률	10.0	15.0	+5.0	10.8	15.6	+7.8	-0.6

자료: KOTRA, ITI and Gallup Korea, 2005.

2) 국내기업 대비 개별 성과지표 비교

(1) 매출액 영업이익률

○ 국내기업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률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7.9%, 국내 기업이 7.6%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 0.3% 포인트 높게 나타났음.

○ 하지만,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국내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음.

○ 국내 제조업과 비교할 때 주요업종 가운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반기계(2.1%포인트)와 화학제품업종(1.5%포인트)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자동차업종은 국내 기업에 비해 3.1%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전자업종도 다소 낮은 것(-0.7%포인트)으로 나타났음.

○ 다른 제조업 부문에서는 비금속광물업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 무려 11.5%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음.

- 그 밖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이익률이 국내기업에 앞서는 업종은 고무 · 플라스틱(3.6%포인트), 전기기계(3.3%포인트), 음식

료품(3.1%포인트), 제지(1.9%포인트) 등이었음.

- 반면에, 국내 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업종은 제1차금속(-5,7%포인트)에서 다소 큰 차이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컴퓨터 · 사무기기(-3.8%포인트), 의료정밀광학(-0.5%포인트), 석유정제(0.3%포인트), 조립금속(-0.2%포인트), 조립금속(-0.2%포인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비제조업 부분에서는 5대 서비스업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국내 기업보다 높은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운수 · 창고업, 도소매업종으로 분석되었음.

-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국내기업이 4.2%에 비해 외국인투자기업은 9.9%로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통신업종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음식 · 숙박업도 외투기업이 약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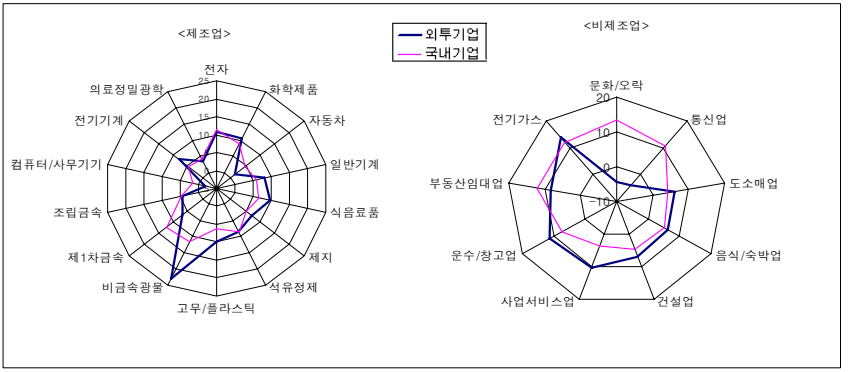
○ 기타 업종에서는 전기 · 가스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7.2%나 되어 국내 기업의 9.5%에 비해 크게 높았고, 부동산 · 임대업은 14%대 9.6%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소 높으며 건설업은 5.6% 대 5.1%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 반면에 문화 · 오락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해서 국내 기업의 12.7%와 큰 대조를 보였음.

〈표 4-10〉 국내기업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률

구 분	매출 영업이익률		
	외국인투자기업(A) (%)	국내기업 (%)	국내대비 (%포인트)
제조업	7.9	7.6	+0.3
비제조업	6.0	-	-

자료: KOTRA, ITI and Gallup Korea, 2005.



자료: KOTRA, ITI and Gallup Korea, 2005.

〈그림 4-1〉 국내 기업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률 비교

(2) 부가가치율

○ 외투 기업의 부가가치율은 13%로 전년도 18.4%에 비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국내기업의 22.9%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짐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율의 57% 정도).

– 전체 업종 가운데 음식료품만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가가치율이 국내 기업보다 높고, 나머지는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주요 업종에서는 화학제품업종만 차이가 다소 적고, 자동차, 전자, 일반기계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남.

– 기타 업종가운데는 조립금속, 컴퓨터 · 사무기기,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비제조업의 경우 전체의 부가가치율은 8.3%이고, 금융 · 보험업을 제외하면 16.6%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음식숙박업과 사업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서비스업종에서는 1차산업과 부동산 · 임대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업종은 통신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16.1%, 국내 기업이 43.3%로 나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의 1/3 수준에 머물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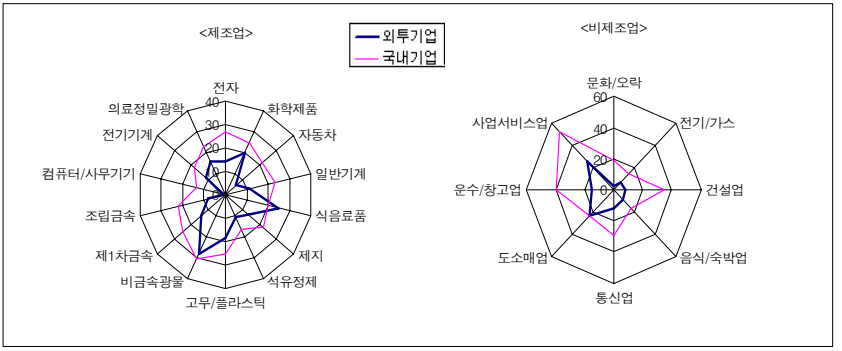
– 문화 · 오락업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18.9%를 기록, 국내 기업 41.8%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로 나타났으며, 건설업종은 외국인투자기업이 9.9%를 기록, 국내기업 25.6%의 약 39%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기업은 모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국적기업의 계열기업으로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현지 기업 경영은 전체 네트워크의 전략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기업에 비해 자체생산보다 외부조달 의존도가 높으며,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

〈표 4-11〉 국내기업대비 부가가치율

구분	부가가치율		
	외국인투자기업(A) (%)	국내기업 (%)	국내대비 (A/B) (%)
제조업	13.0	22.9	56.8
비제조업	8.3 16.6(금융/보험업 제외시)	–	–

자료: KOTRA, ITI and Gallup Korea, 2005.



자료: KOTRA, ITI and Gallup Korea, 2005.

〈그림 4-2 〉 국내기업대비 부가치율 비교

(3) 노동생산성

○ 국내 제조업과 비교하여 보면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생산성은 7,600만원 규모로 2003년보다 1,300만원 낮아짐(전년 기준 14.6% 감소)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생산성은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기업의 108.9% 수준임.

○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주요 업종의 노동생산성은 국내 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기계의 노동생산성은 국내기업의 364.5% 수준으로 크게 높았으나 다른 업종들은 국내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전자, 자동차 업종의 노동생산성은 국내기업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음식료품, 제지, 비금속, 1차금속, 전기기계, 의료정밀광학 업종은 국내기업보다 노동생산성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음식료품의 노동생산성은 국내기업의 322.9%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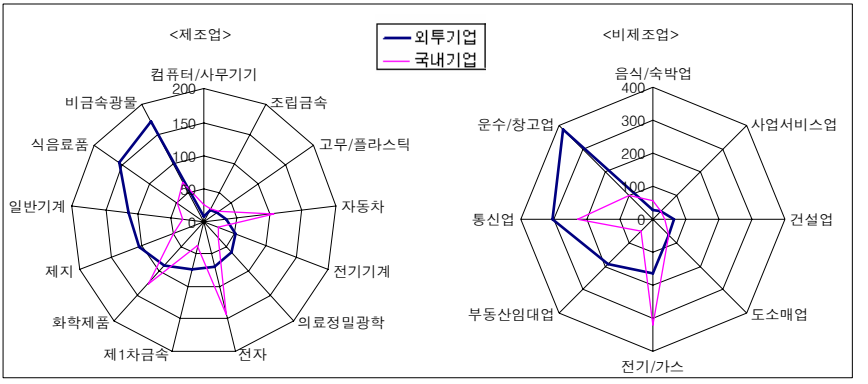
○ 비제조업과의 비교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생산성은 8,200만 원으로 나타남.

– 5대 서비스 업종 중 운수·창고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종은 국내 비제조업체보다 노동생산성이 높았으며, 특히 운수·창고업은 국내업체의 390.8%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고 도·소매업은 국내업체와 차이가 없었음. 반면 음식·숙박업은 국내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표 4-12〉 국내기업대비 노동생산성

구 분	노동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A) (백만원)	국내기업 (백만원)	국내대비 (%)
제조업	76	74.6	108.9
비제조업	82	–	–

자료: KOTRA, ITI and Gallup Korea, 2005.



자료: KOTRA, ITI and Gallup Korea, 2005.

〈그림 4-3〉 국내기업대비 노동생산성

(4) 설비투자효율

○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투자효율은 제조업 전체적으로 35.9%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47.2%에 비해 11.3%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23.9% 감소한 것임.

○ 4대 주요 업종 가운데는 전자와 자동차업종에서 국내 기업에 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투자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화학제품업종만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타 업종에서는 국내 기업에 비해 설비투자효율이 높은 업종은 의료정밀광학과 음식료품업종 뿐이었음.

– 특히 조립금속, 컴퓨터 · 사무기기, 전기기계업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비제조업의 경우, 설비투자효율은 2004년 기준으로 30.8%로 분석되었으며, 사업의 특성상 부가가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금융 · 보험업을 제외할 경우 41.9%로 나타남.

○ 5대 서비스업종 가운데 사업서비스업이 1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 · 소매업이 7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그러나 이 결과는 업종 특성상 설비투자 비중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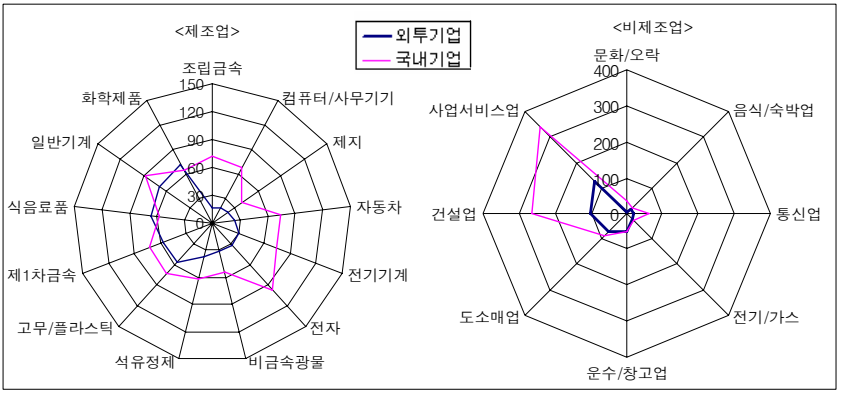
– 5대 서비스업 부문의 설비투자효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업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124%인데 비해 국내기업은 339%로 상당히 높은 차이를 보였음.

– 기타 업종도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낮았으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101%인데 비해 국내 기업은 263%로 큰 차이를 보였고, 문화 · 오락의 경우 국내 기업의 14% 수준임.

〈표 4-13〉 국내기업대비 설비투자효율

구 분	설비투자효율		
	외국인투자기업(A) (%)	국내기업 (%)	국내대비 (%)
제조업	35.9	70.9	50.6
비제조업	30.8 41.9 금융/보험업 제외시	–	–

자료: KOTRA, ITI and Gallup Korea, 2005.



자료: KOTRA, ITI and Gallup Korea, 2005.

〈그림 4-4〉 국내기업대비 설비투자효율 비교

3.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5)]

1)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

○ FDI의 경제적인 효과를 23개 평가항목을 사용하여 각각의 설문대

5) 2006년 현재 산업자원부와 KOTRA가 Gallup Korea에 의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과 한국경제: 투자환경, 경제적 효과, 정책적 제안"라는 명칭으로 진행 중인 실태조사(설문조사)의 원 자료(raw data)를 사용 승인받아 157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상기업이 FDI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3개의 항목을 선정함으로써 평가함.

○ 외국기업의 한국진출(외국인 투자 유치)로 인하여 한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3개의 선택에 대한 답변은 전체 응답한 기업의 수(157개) 대비 해당 항목의 빈도수에 따라 네 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함.

- 첫째,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항목으로는 '고용증진'(48.4%)과 '기술이전 및 기술향상'(40.7%)으로 전체 응답 기업 수 대비 항목별 응답수의 비율이 40%를 상회함.
- 둘째, 전체 응답 기업 수 대비 항목별 응답수의 비율이 20%~30%인 그룹으로 아래 표에서 '국내시장의 성장 및 수출증가'(26.8%) 항목에서 '한국시장의 글로벌 시장화'(20.4%) 항목까지가 두 번째 그룹으로서,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임.
- 셋째, 전체 응답 기업 수 대비 항목별 응답수의 비율이 10%~20%인 그룹으로 아래 표에서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18.5%)에서 '세수증대'(11.5%) 항목까지로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 넷째, 전체 응답 기업 수 대비 항목별 응답수의 비율이 10% 미만에 해당하는 그룹으로서, '소비자의 안목향상'(9.6%) 에서부터 '불필요한 법률규제의 축소'(0.6%)까지의 항목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판단됨.

○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의 성격을 비교해보면, FDI의 수출 및 시장여건 개선에 대한 영향이 산업 및 기업경쟁력에 대한 영향보다는 크다고 인지됨.

- 전자는 '국내시장의 성장 및 수출증가', '한국시장을 글로벌

경쟁시장으로 촉진' 및 '(한국시장의) 글로벌 시장화'로 대체로 시장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로서 FDI가 수출 및 시장 상황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후자의 경우는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경쟁을 통한 체질강화', '한국 산업을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 및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 등의 산업경쟁력과 관련된 항목들과 '기업 재무건전성 촉진'과 '세수증대'의 기업성과 관련 항목들로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에 대한 영향보다는 적으나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

○ 네 번째 그룹은 '법률규제', '노사관계' 및 '비즈니스 공정성 증진에 의한 기업 성취의욕 증진' 및 '비즈니스의 투명성' 등, 제도 및 기업문화와 관련성이 큰 항목들로서 이처럼 기업 활동의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FDI의 영향력이 가장 적으며 변화가 어려운 부문임을 알 수 있음.

〈표 4-14〉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

범 례 번호	세부사항	빈도수 (개)	비율 (%)
1	고용증진	76	48.4
2	기술이전 및 기술향상	64	40.7
3	국내시장의 성장 및 수출증가	42	26.8
4	한국시장을 글로벌 경쟁시장으로 촉진	37	23.6
5	(한국시장의) 글로벌 시장화	32	20.4
6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29	18.5
7	경쟁을 통한체질강화	24	15.3
8	기업 재무건정성 촉진	21	13.4
9	한국산업을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	19	12.1
10	부품, 유통 등 관련산업의 발달에 파급효과(Spillover)	19	12.1
11	세수증대	18	11.5
12	소비자의 안목 향상	15	9.6
13	(거래비용의 최소화 등) 비즈니스의 투명성 증진	14	8.9

14	한국사회의 개방화 증진	10	6.4
15	노동생산성의 증진	10	6.4
16	(시장의 성장 등으로 인한) 경제활성화	8	5.1
17	산업 클러스터 발전	8	5.1
18	유통, 금융, 법률, 교육, 관광 등 기초인프라 개발 촉진	7	4.5
19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등 투자촉진 제도의 개선	6	3.8
20	(비즈니스 공정성 증진으로) 기업 성취의욕 증진	5	3.2
21	노사관계의 건전성 증진	4	2.5
22	(지적재산권 보호 등으로) 기업 개발의욕의 증진	2	1.3
23	불필요한 법률규제의 축소	1	0.6

주: 결과치는 복수응답(3개 선택)의 결과임

자료 : KOTRA and Gallup Korea, 2006.

2) 시사점

○ 외국인투자는 한국경제에 '고용증진'과 '기술이전 및 기술향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수출 및 시장 상황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에 대한 영향보다는 적으나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

○ '법률규제', '노사관계' 및 '비즈니스 공정성 증진에 의한 기업 성취의욕 증진' 및 '비즈니스의 투명성' 등, 제도 및 기업문화와 관련성이 큰 항목들에 대해서는 FDI의 영향력이 가장 적으며 변화가 어려운 부문임을 알 수 있음.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 경영환경

○ 본 분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KOTRA가 실시

한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의 3개년에 걸친 자료와 2006년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조사를 정리·분석함.

- 경영환경 만족도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투자 동기, 경영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최초 투자시점 대비 현재의 경영환경 개선도 평가를 분석
- 한국에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 평가, 지역본부 설치를 위한 국가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한국이 지역본부 설치 국가로 부족한 사항 등 분석
- 향후 3년간 한국시장의 영업 전망, 향후 3년간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 가능성, 향후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정리

1. 경영환경 만족도

○ 본 절은 한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해 KOTRA가 실시한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의 3개년에 걸친 자료와 Gallup Korea의 2006년 서울지역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한 조사를 정리·분석하였음.

○ 이 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투자 동기와 경영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다음 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및 한국경제에 대한 효과를 살펴봄.

1) 한국 투자 동기

○ 한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동기를 보면 시장성장 잠재력(2006년

60.7%)이 가장 중요한 동기이며, 다음으로 내수시장 진출(2006년 35.4%)이나 내수시장 진출은 동기로서의 중요성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반면, 기술인력 확보와 R&D 환경은 그 중요성이 다소 높아지고 있어, 투자동기가 내수시장 진출에서 기술 및 연구개발 환경으로 변화의 방향을 알 수 있음.

○ 전국 대비 서울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 순위에 있어서 1위(시장 성장 잠재력)와 2위(내수 시장 진출)를 제외한 하위 순위는 상당히 다른 답변을 보여주고 있음.

- 전국에 비해 서울은 R&D 환경(11.9% vs. 7.5%)에 대한 평가는 높으나 생산효율성(1.7% vs. 7.5%)의 면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음.
- 특히, 서울지역의 생산효율성을 보고 투자하는 제조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전무함.

○ 서울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동기를 보면 기술인력확보와 산업인프라에서 큰 차이가 남.

- 제조업에서 기술인력확보의 동기는 18.2%로서 비제조업의 7.1%보다 월등히 높아 서울지역에 대한 제조업의 투자는 저조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서울의 산업인프라는 제조업이 12.1%이나 비제조업은 1.2%로 투자동기로서 차이가 매우 큼.

〈표 4-15〉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투자동기 (단위: %)

구분		시장 성장 잠재력	내수 시장 진출	인근시장진출 교두보	기술인력확보	산업 인프라	생산 효율성	R&D 환경
전체	2004년	60.5	45.3	12.1	7.6	8.5	6.3	5.4
	2005년	50.4	44.0	10.4	8.88	8.88	8.0	7.2
	2006년(전국)	60.7	35.4	12.5	10.7	6.8	7.5	7.5
	2006년(서울)	64.4	34.7	8.5	11.9	4.2	1.7	11.9
제조	2004년	54.9	48.0	11.8	10.8	10.8	10.8	6.9
	2005년	44.4	52.1	10.3	10.3	10.3	9.4	7.7
	2006년(전국)	54.3	43.0	11.9	12.6	8.6	11.3	6.6
	2006년(서울)	48.5	42.4	9.1	18.2	12.1	0.0	12.1
비제조	2004년	65.0	43.3	11.7	5.0	6.7	2.5	4.2
	2005년	66.3	39.1	9.8	6.5	5.4	3.3	5.4
	2006년(전국)	69.0	27.0	12.7	8.7	4.0	3.2	8.7
	2006년(서울)	70.2	32.1	8.3	7.1	1.2	2.4	11.9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2) 경영환경에 대한 만족도

(1) 전반적 만족도

○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의 금융, 세무, 노무, 인력채용, 입지선정, 물류 및 R&D 등의 경영환경에 대하여 2006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의 만족도(5점 척도기준으로 평균 2.89점)를 보이고 있으며, 48.2%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환경 만족도를 보통으로 평가함.

○ 2005년 만족도 결과 대비, 전국의 만족도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오차 범위 내에 있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2006년 평균점을 비교하면, 서울이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업종과 무관하

게 '만족' 한 기업의 비중이 전국보다 높으며, 특히 비제조의 경우 약 40%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6〉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만족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점)
전체	2004년	17.5	46.2	36.3	2.79
	2005년	25.2	48.0	26.8	2.97
	2006년(전국)	23.6	48.2	28.2	2.89
	2006년(서울)	35.6	45.8	18.6	2.75
제조	2004년	19.6	50.0	30.4	2.89
	2005년	27.4	51.3	21.4	3.06
	2006년(전국)	24.5	53.0	22.5	2.99
	2006년(서울)	27.3	57.6	15.2	2.79
비제조	2004년	15.8	42.5	41.7	2.71
	2005년	20.7	44.6	34.8	2.84
	2006년(전국)	22.2	42.1	35.7	2.77
	2006년(서울)	39.3	40.5	20.2	2.73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2) 경영환경에 대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분석

□ 전국 경영환경에 대한 IPA 분석

○ 경영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각 분야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중요도에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가장 중요한 분야로 나타났던 노무환경 분야가 2006년도에 추가된 인력채용환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중점개선영역(고중요도-저만족도)에는 2004년도에 노무와 세무, 2005년도에 노무, 2006년도에 세무와 입지선정이 속한 것으로 분석됨.

- 2004년과 2005년에 중점개선영역에 속했던 노무환경 분야가

2006년도에 추가된 인력채용환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개선유보영역(저중요도-저만족도)으로 들어감.

- 2006년도에는 세무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국제조세 이슈가 표면에 떠오르면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노력유지영역(고중요도-고만족도)에는 2004년도에는 금융, 2005년도에는 R&D, 2006년도에는 인력채용이 노력유지영역으로 속함.

- 2004년도의 금융은 2006년도에는 개선유보영역 (저중요도-저만족도)으로 옮겨감.
- 2005년도의 R&D는 2006년도에는 노력전환영역(저중요도-고만족도)으로 옮겨감.

○ 노력전환영역(저중요도-고만족도)에는 2004년도에 물류와 입지선정, 2005년도에 물류, 2006년도에는 물류와 R&D가 속함.

- 물류는 지속적으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만족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대체로 우리나라의 물류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분석됨.

○ 개선유보영역(저중요도-저만족도)에는 2004년도에 R&D, 2005년도에 금융, 입지선정, 세무, 2006년도에 노무, 금융이 속한 것으로 분석됨.

- 2005년~2006년에 걸쳐 금융이 만족도가 낮으나 중요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7〉 전국의 경영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2006		2005		2004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금융환경	14.2	25.4	12.0	26.4	25.4	20.6
세무환경	23.4	20.7	14.8	21.2	17.4	15.2

노무환경	10.1	18.6	28.2	23.2	35.2	12.6
인력채용환경	15.3	25.7	–	–	–	–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 환경	21.4	22.9	14.2	27.2	12.9	26.0
물류환경	8.4	34.6	14.2	36.8	0.4	22.9
R&D 환경	7.1	29.7	16.7	31.2	8.7	14.3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그림 4-5〉 전국의 경영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IPA 결과

□ 2006년 서울지역 경영환경에 대한 IPA 분석

○ 전국의 IPA 분석은 중회귀분석에 의한 간접적 중요도를 사용한 반면, 서울지역은 간접적 중요도가 없이 설문조사에 의한 직접적 중요도를 사용함.

– 전국 IPA에서 간접적 중요도에 의한 노무환경 분야가 2006년도에 추가된 인력채용환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인 것에 반해, 직접적 중요도에 의한 노무환경 평가는 가장 높게 평가됨.

○ 중점개선영역(고중요도-저만족도)에는 서울지역 전체적으로 노무와 세무, 서울 제조업 분야에 노무, 세무, 인력채용, 서울 비제조업

분야에 노무, 세무가 속한 것으로 나타남.

○ 노력유지영역(고중요도-고만족도)에는 서울지역 전체에 인력채용이 속함.

- 인력채용은 서울 제조는 중점개선영역(고중요도-저만족도)에, 서울 비제조는 노력전환영역(저중요도-고만족도)에 속한 것으로 분석됨.
- 서울 제조에서 인력채용인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지방에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며,
- 서울 비제조에서 인력채용이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서울이 비교적 우수한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됨.

○ 노력전환영역(저중요도-고만족도)에는 물류와 R&D가 서울지역 전체, 제조 및 비제조에 동일하게 속하나, 비제조업의 경우에 인력채용이 속해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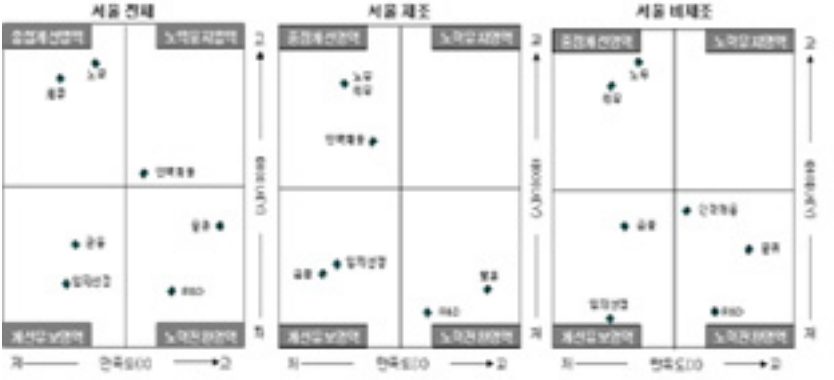
○ 개선유보영역(저중요도-저만족도)에는 서울지역 전체, 제조 및 비제조에 동일하게 입지선정과 금융이 포함되어 있음.

- 서울의 경우 생산시설을 요하는 제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적으므로 입지선정은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별로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또한 금융의 경우도 만족도가 낮으나 중요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8〉 서울의 경영환경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서울 (전체)		제조		비제조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금융환경	16.9	17.8	15.2	12.1	17.9	19.0
세무환경	36.4	16.1	36.4	18.2	36.9	15.5
노무환경	39.0	21.2	36.4	18.2	39.3	22.6
인력채용환경	23.7	25.4	27.3	21.2	21.4	27.4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 환경	9.3	16.1	15.2	15.2	7.1	16.7
물류환경	15.3	37.3	12.1	36.4	16.7	38.1
R&D 환경	8.5	29.7	6.1	27.3	9.5	29.8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그림 4-6〉 서울의 경영환경에 대한 IPA 결과

3) 최초 투자시점 대비 경영환경 개선도 평가

(1) 평가개요

○ 최초 투자시점 대비 한국의 경영환경 개선도를 평가하면, '인건비', '간접비용', '물류비용', '노사관계', '인력수급'에 대하여는 '더 나빠졌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좋아졌다'는 견해보다 더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개선도 평가를 받았음.

– 특히, ‘인건비’와 ‘간접비용’ 항목에 대한 부정 평가율은 각각 57.9%, 53.2%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언어소통의 편의성’, ‘행정기관의 서비스’, ‘자금조달의 편의성’ 항목은 개선되었다는 긍정 평가가 30% 이상으로 나타남.

– ‘언어소통의 편의성’은 긍정률이 40.0%로 2005년에 이어 13개 항목 중 가장 개선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영어와 일어 등의 외국어에 대한 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2) 개별 항목별 개선도 평가

□ 인력수급

○ 인력수급은 개선의 의견(16.1%)보다 악화(30.0%)의 의견이 높게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항목이다. 서울의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개선에 대한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악화의 의견도 전국에 비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9〉 인력수급 개선도 평가

구분		개선(%)	변화없음(%)	악화(%)	평균(점)
전체	2004년	28.7	47.1	24.2	2.98
	2005년	16.8	52.0	31.2	2.79
	2006년(전국)	16.1	53.9	30.0	2.79
	2006년(서울)	19.5	57.6	22.9	2.90
제조	2004년	25.5	48.0	26.5	2.93
	2005년	16.2	53.0	30.8	2.79
	2006년(전국)	13.9	52.3	33.8	2.74
	2006년(서울)	18.2	54.5	27.3	2.85
비제조	2004년	30.8	46.7	22.5	3.01
	2005년	14.1	52.2	33.	2.74
	2006년(전국)	18.3	55.6	26.2	2.84
	2006년(서울)	20.2	58.3	21.4	2.92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 지가, 사무실 임차료 등 간접비용

○ 간접비용 항목은 인건비와 더불어 악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비제조업의 경우 2005년보다 악화의 의견이 크게 나타남.

〈표 4-20〉 지가, 사무실 임차료 등 간접비용 개선도 평가

구분		개선(%)	변화없음(%)	악화(%)	평균(점)
전체	2004년	5.4	33.6	61.0	2.29
	2005년	8.4	43.6	48.0	2.52
	2006년(전국)	9.3	37.5	53.2	2.45
	2006년(서울)	9.3	37.3	53.4	2.43
제조	2004년	4.9	29.4	65.7	2.21
	2005년	6.8	41.9	51.3	2.47
	2006년(전국)	7.9	38.4	53.6	2.44
	2006년(서울)	6.1	45.5	48.5	2.39
비제조	2004년	5.8	37.5	56.7	2.37
	2005년	9.8	45.7	44.6	2.58
	2006년(전국)	11.1	35.7	53.2	2.45
	2006년(서울)	10.7	34.5	54.8	2.45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 인건비

○ 인건비 항목은 평가대상 13개 항목 가운데 투자시점 대비 가장 악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부정 평가율이 매우 크게 나타나 향후 집중적인 관리와 개선이 요구되는 항목임을 알 수 있음.

〈표 4-21〉 인건비 개선도 평가

구분		개선(%)	변화없음(%)	악화(%)	평균(점)
전체	2004년	5.4	30.0	64.6	2.21
	2005년	9.2	38.4	52.4	2.42
	2006년(전국)	8.6	33.6	57.9	2.37
	2006년(서울)	7.6	41.5	50.8	2.45
제조	2004년	4.9	18.6	76.5	2.05

	2005년	6.8	34.2	59.0	2.26
	2006년(전국)	6.0	27.8	66.2	2.25
	2006년(서울)	9.1	57.6	33.3	2.39
비제조	2004년	2.0	16.3	81.6	1.88
	2005년	6.5	42.4	51.1	2.43
	2006년(전국)	11.1	41.3	47.6	2.52
	2006년(서울)	7.1	45.2	47.6	2.48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 노사 관계[6)]

○ '노사 관계' 항목은 최초 투자시점과 비교하여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33.2%로 대체로 높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비교하면 전국이나 서울 모두 제조업 분야에서 노사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하는 기업이 약간 더 많음.

〈표 4-22〉 노사관계 개선도 평가

구분		개선(%)	변화없음(%)	악화(%)	평균(점)
전체	2004년	-	-	-	-
	2005년	-	-	-	-
	2006년(전국)	13.6	53.2	33.2	2.73
	2006년(서울)	12.7	57.6	29.7	2.75
제조	2004년	-	-	-	-
	2005년	-	-	-	-
	2006년(전국)	13.2	51.7	35.1	2.71
	2006년(서울)	15.2	54.5	30.3	2.76
비제조	2004년	-	-	-	-
	2005년	-	-	-	-
	2006년(전국)	14.3	54.0	31.7	2.75
	2006년(서울)	11.9	58.3	29.8	2.75

주: 2004년과 2005년에는 노사관계는 조사되지 않음.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6) '노사관련' 평가는 2006년도에 처음으로 문항이 마련되어 이전의 자료가 없음.

□ 세무 관련 환경

○ 세무관련 환경에 대해서는 최초 투자시점 대비 변화 없다는 의견(59.3%)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개선의 의견이 악화되었다는 의견보다 많았고, 비제조업의 경우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개선되었다는 의견보다 많이 조사되어 비제조업 기업에 대한 세무관련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줌.

〈표 4-23〉 세무 관련 환경 개선도 평가

구분		개선(%)	변화없음(%)	악화(%)	평균(점)
전체	2004년	19.7	59.2	21.1	2.96
	2005년	20.4	65.2	14.4	3.05
	2006년(전국)	21.1	59.3	19.6	2.95
	2006년(서울)	20.3	57.6	22.0	2.88
제조	2004년	18.6	61.8	19.6	2.98
	2005년	23.1	62.4	14.5	3.09
	2006년(전국)	22.5	62.3	15.2	3.03
	2006년(서울)	27.3	54.5	18.2	3.00
비제조	2004년	20.8	57.5	21.7	2.96
	2005년	19.6	66.3	14.1	3.03
	2006년(전국)	18.3	56.3	25.4	2.85
	2006년(서울)	16.7	59.5	23.8	2.82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 물류 비용

○ 물류비용의 경우 개선(10.4%)의 의견보다 악화(39.6%)의 의견이 4배 정도 놓게 나타나 물류비용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한 가운데, 업종에 상관없이 서울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보다 좋은 긍정의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4〉 물류 비용 개선도 평가

구분		개선(%)	변화없음(%)	악화(%)	평균(점)
전체	2004년	9.0	54.3	36.3	2.67
	2005년	10.8	54.4	34.8	2.72
	2006년(전국)	10.4	50.0	39.6	2.65
	2006년(서울)	11.9	57.6	30.5	2.75
제조	2004년	7.8	46.1	46.1	2.59
	2005년	11.1	51.3	37.6	2.69
	2006년(전국)	9.3	45.0	45.7	2.58
	2006년(서울)	18.2	45.5	36.4	2.73
비제조	2004년	10.0	60.8	28.3	2.74
	2005년	8.7	60.9	30.4	2.75
	2006년(전국)	10.3	57.1	32.5	2.71
	2006년(서울)	8.3	63.1	28.6	2.74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 통관 비용 및 편의성

○ 통관비용 및 편의성에 대한 개선도 평가는 변화없음(59.3%)의 의견이 가장 많은 가운데, 전년과 유사한 평가를 보였으며,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을 알 수 있음.

〈표 4-25〉 통관 비용 및 편의성 개선도 평가

구분		개선(%)	변화없음(%)	악화(%)	평균(점)
전체	2004년	21.1	60.5	17.9	3.01
	2005년	22.4	60.4	17.2	3.03
	2006년(전국)	27.5	59.3	13.2	3.11
	2006년(서울)	27.1	62.7	10.2	3.13
제조	2004년	21.6	63.7	14.7	3.10
	2005년	25.6	59.0	15.4	3.09
	2006년(전국)	30.5	58.3	11.3	3.17
	2006년(서울)	27.3	60.6	12.1	3.06
비제조	2004년	20.8	57.5	20.8	2.93

	2005년	30.7	60.9	18.5	2.99
	2006년(전국)	23.8	60.3	15.9	3.04
	2006년(서울)	26.2	64.3	9.5	3.14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 자금조달 편의성

○ 자금조달 편의성 항목 역시 변화 없음(53.2%)의 의견이 가장 많은 가운데, 전년과 유사한 평가를 보였으며,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을 알 수 있음.

〈표 4-26〉 자금조달 편의성 개선도 평가

구분		개선(%)	변화없음(%)	악화(%)	평균(점)
전체	2004년	25.1	62.3	12.6	3.10
	2005년	25.2	60.4	14.4	3.10
	2006년(전국)	32.9	53.2	13.9	3.17
	2006년(서울)	30.5	57.6	11.9	3.16
제조	2004년	27.5	61.8	10.8	3.15
	2005년	35.9	53.0	11.1	3.25
	2006년(전국)	35.8	53.6	10.6	3.26
	2006년(서울)	30.3	57.6	12.1	3.21
비제조	2004년	23.3	62.5	14.2	3.06
	2005년	18.5	66.2	16.3	3.01
	2006년(전국)	28.6	53.2	18.3	3.05
	2006년(서울)	29.8	58.3	11.9	3.13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 기업 거래관행의 투명성

○ 기업 거래관행의 투명성 항목은 개선(29.6%), 악화(21.1%)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은 가운데, 특히 서울의 경우 제조업은 전국에 비해 부정의 평가가 다소 많았으며, 비제조업의 경우 긍정의 평가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7〉 기업 거래관행의 투명성 개선도 평가

구분		개선(%)	변화없음(%)	악화(%)	평균(점)
전체	2004년	33.2	42.2	24.2	3.01
	2005년	31.6	49.2	19.2	3.09
	2006년(전국)	29.6	49.3	21.1	3.05
	2006년(서울)	26.3	50.8	22.9	2.99
제조	2004년	39.2	36.3	24.5	3.07
	2005년	36.8	41.4	18.8	3.19
	2006년(전국)	33.8	50.3	15.9	3.19
	2006년(서울)	21.2	48.5	30.3	2.88
비제조	2004년	28.3	46.7	24.2	2.97
	2005년	26.1	53.3	20.7	3.02
	2006년(전국)	23.8	48.4	27.8	2.87
	2006년(서울)	27.4	52.4	20.2	3.02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 행정절차의 투명성

○ 행정절차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긍정평가(22.1%)와 부정평가(19.3%)가 비슷하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며, 서울 제조업의 경우 악화의견이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표 4-28〉 행정절차의 투명성 개선도 평가

구분		개선(%)	변화없음(%)	악화(%)	평균(점)
전체	2004년	24.2	58.3	17.0	3.02
	2005년	23.2	56.4	20.4	2.96
	2006년(전국)	22.1	58.2	19.3	2.98
	2006년(서울)	20.3	55.9	23.7	2.88
제조	2004년	22.5	58.8	18.6	2.98
	2005년	26.5	58.1	15.4	3.09
	2006년(전국)	23.2	58.9	17.2	3.03
	2006년(서울)	18.2	48.5	33.3	2.73
비제조	2004년	25.8	57.5	15.8	3.05
	2005년	19.6	57.6	22.8	2.91
	2006년(전국)	20.6	57.1	22.2	2.91
	2006년(서울)	20.2	59.5	20.2	2.93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 행정기관의 서비스

○ 행정기관의 서비스 항목은 투자시점 대비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높은 항목으로 제조업의 경우 비제조업보다 높은 긍정의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표 4-29〉 행정기관의 서비스 개선도 평가

구분		개선(%)	변화없음(%)	악화(%)	평균(점)
전체	2004년	27.8	56.5	15.2	3.09
	2005년	30.4	54.4	15.2	3.13
	2006년(전국)	35.0	51.4	13.6	3.18
	2006년(서울)	34.7	50.8	14.4	3.15
제조	2004년	25.5	57.8	16.7	3.06
	2005년	33.3	54.7	12.0	3.22
	2006년(전국)	39.1	52.3	8.6	3.30
	2006년(서울)	42.4	45.5	12.1	3.24
비제조	2004년	30.0	55.0	14.2	3.11
	2005년	25.0	54.3	20.7	3.02
	2006년(전국)	30.2	50.0	19.8	3.03
	2006년(서울)	31.0	53.6	15.5	3.11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 언어소통의 편의성

○ 언어소통의 편의성은 개선도 평가 13개 항목 가운데 가장 개선되었다는 의견(40.0%)을 보인 항목으로 조사됨.

〈표 4-30〉 언어소통의 편의성 개선도 평가

구분		개선(%)	변화없음(%)	악화(%)	평균(점)
전체	2004년	41.7	42.6	15.2	3.22
	2005년	33.6	47.2	19.2	3.08
	2006년(전국)	40.0	43.6	16.4	3.23
	2006년(서울)	40.7	44.1	15.3	3.25
제조	2004년	35.3	47.1	17.6	3.13
	2005년	35.0	46.2	18.8	3.09
	2006년(전국)	43.0	44.4	12.6	2.32
	2006년(서울)	45.5	39.4	15.2	3.30
비제조	2004년	46.7	39.2	13.3	3.29
	2005년	29.3	54.3	16.3	3.11
	2006년(전국)	36.5	42.9	20.6	3.13
	2006년(서울)	38.1	46.4	15.5	3.23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 R&D 환경

○ R&D 환경은 2004년 이후 꾸준히 개선의 평가가 증가한 항목인데, 서울의 제조업의 경우 개선에 대한 평가가 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1〉 R&D 환경 개선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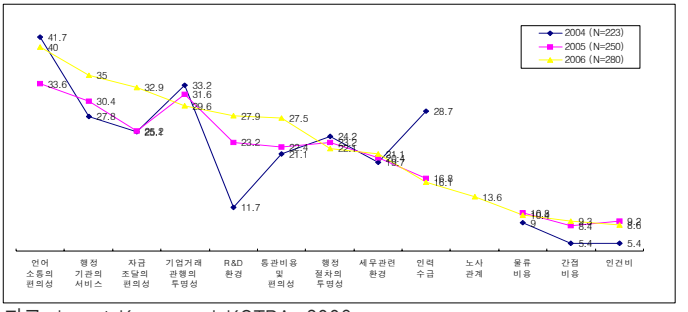
구분		개선(%)	변화없음(%)	악화(%)	평균(점)
전체	2004년	11.7	69.5	18.4	2.87
	2005년	23.2	58.4	18.4	3.02
	2006년(전국)	27.9	57.5	14.6	3.10
	2006년(서울)	23.7	61.0	15.3	3.05
제조	2004년	9.8	69.6	20.6	2.82
	2005년	28.2	54.7	17.1	3.09
	2006년(전국)	31.1	55.6	13.2	3.15
	2006년(서울)	21.2	60.6	18.2	2.97
비제조	2004년	13.3	69.2	16.7	2.92
	2005년	15.2	63.0	21.7	2.92
	2006년(전국)	24.6	58.7	16.7	3.03
	2006년(서울)	25.0	60.7	14.3	3.08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3) 개선도 (긍정률) 평가 비교

□ 연도별 비교

○ 2005년 대비 경영환경 항목별 개선도 평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2005년 조사 결과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자금조달 편의성' 과 '언어소통의 편의성' 에 대한 긍정 평가율이 각각 7.7%P, 6.4%P 상승한 반면, '기업 거래관행의 투명성' 은 2004년 이후 하락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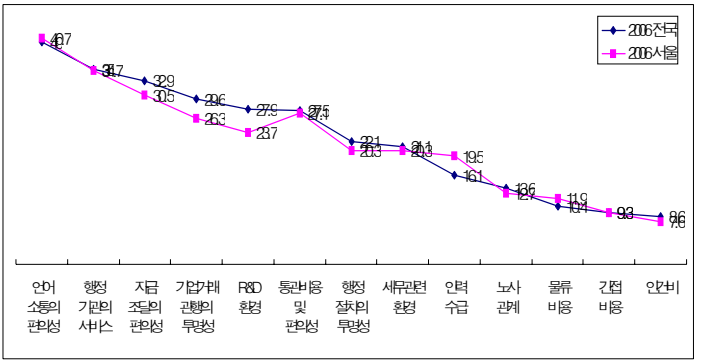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6.

〈그림 4-7〉연도별 최초 투자시점 대비 경영환경 개선도 평가 – 긍정률

□ 전국과 서울지역 비교

○ 2006년 전국 대비 서울의 경영환경 항목별 개선도 평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국의 결과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인력수급' 과 '물류비용' 에 있어서 서울이 높게 나타났고, '언어소통의 편의성' 과 '간접비용' 에 있어서 약간 높게 나타났음.

○ 반면, 'R&D 환경' 과 '기업 거래관행의 투명성' 및 '자금조달의 편의성' 은 서울이 개선도가 전국에 대한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사관계' 는 약간 낮은 것으로 평가됨.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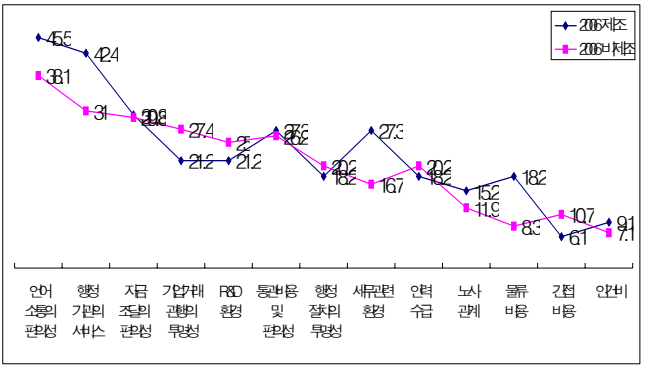
〈그림 4-8〉 2006년 전국과 서울의 비교

□ 서울지역 제조업과 비제조업 비교

○ 서울지역의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비교하면, 비제조업이 '기업거래관행의 투명성', 'R&D 환경', '간접비용' 에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언어소통의 편의성', '행정기관의 서비스', '세무관련 환경' 과 '노사관계' 및 '물류비용' 에 있어서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개선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그림 4-9〉 2006년 서울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비교

4) 경영환경 애로사항 분석결과 종합

○ 2004년~2006년의 경영환경 애로사항을 '경영환경 만족도', '분야별 만족도', '항목별 개선도' 및 '분야별 세부개선사항'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됨.

〈표 4-32〉 외국인투자 경영환경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비교분석 (2004~2006)

	2004년	2005년	2006년
경영환경 만족도	○ 불만족하나 미래에 대해 높은 기대 - 노무, 세무, 행정 절차 및 규제, 물류, R&D 등의 경영환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불만족 - 특히 노무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음 - 향후 3년 간 한국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평가 - 향후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 보통 수준이나, 2004년 대비 향상 - 노무, 세무, 행정 절차 및 규제, 물류, R&D 등의 경영환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의 평가 - 200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만족율이 7.7%P 상승하였으며 불만족율은 9.5%P 감소하여 전년대비 만족 수준이 상승 - 매년 만족도 평가 수준이 향상	○ 2005년 대비 만족수준 낮아짐. - 200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만족율이1.67%P 감소하였으며 불만족율은 1.4%P 증가하여 전년대비 만족 수준이 낮아짐 - 통계적 오차 범위 내에 있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

	늘리겠다는 의향이 높아 한국 시장에 대한 잠재력과 매력도를 높이 평가 – 경영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분야별 만족도	○ 입지선정/공장설립 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가장 우수 – 만족도 순위는 '입지선정/공장설립' 〉 '물류환경' 〉 '금융환경' 〉 '세무환경' 〉 'R&D' 〉 '노무환경' – 노무환경 만족도 12.6%에 불과하며 특히, 미국계 기업의 불만족률이 64.3%로 매우 높으며 투자시점이 최근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특성 – 금융환경 만족률은 20.6%, 불만족률은 23.3%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갈림. – 세무환경은 만족도가 15.2%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한 경우는 35.4%로 부정적인 평가가 높으며, 특히 비제조업, 투자시점이 최근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불만족률이 높음. – 입지선정/공장설립은 26%가 만족하며, 특히 유럽계 기업의 만족률이 41.9%로 타국적 기업 대비 매우 높은 평가 – 물류환경은 22.9% 만족, 32.7% 불만족으로 다소 부정적 – R&D 환경은 만족 14.3%, 불만족 15.7% 엇갈리는 평가	○ 물류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가장 우수 – 경영환경의 6개 측정 분야별로는 '물류환경'에 대한 만족률이 36.8%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는 'R&D 환경'(만족률 31.2%)이 30% 이상의 만족률을 얻어 긍정적이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 – 반면 '노무환경'(만족률 23.2%), '세무환경'(21.2%)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나 상위 분야와의 만족률 차이가 크지는 않음. – 분야별로 2004년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R&D 환경'의 만족률이 14.3%에서 31.2%로 무려 16.9%P 상승, '물류환경' 역시 22.9%에서 36.8%로 13.9%P 상승 – '입지선정/공장설립'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년대비 만족도 평가의 상승 – 한편 경영환경 분야별 직접 중요도를 살펴보면, '노무환경' 〉 '세무환경' 〉 '금융환경' 〉 '입지선정/공장설립' 〉 'R&D 환경' 〉 '물류환경' 등의 순으로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또한 통계적 중요도(중회귀분석을 통한 간접 중요도)에서는 '노무환경' 〉 'R&D 환경'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간의 영향력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직접 중요도와 간접 중요도를	○ 물류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가장 우수 – 경영환경의 7개 측정 분야별로는 '물류환경'에 대한 만족률이 34.6%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는 'R&D 환경'(만족률 31.1%)이 30% 이상의 만족률을 얻어 긍정적이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노무환경'(만족률 18.6%), '세무환경'(20.7%)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만족도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2005년 대비 단 한 개의 항목에서도 만족률이 상승한 분야가 없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경영환경 분야별 직접 중요도를 살펴보면, '노무환경' 〉 'R&D 환경' 〉 '세무환경' 〉 '인력채용환경' 〉 '금융환경' 〉 '입지선정/공장설립' 〉 '물류환경' 등의 순으로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또한 통계적 중요도(중회귀분석을 통한 간접 중요도)에서는 '세무환경' 〉 '입지선정/공장설립'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음. – 직접 중요도와 간접 중요도를 종합해 보면, 경영환경 분야에서는 '세무환경'이 가장 중요한 분야인 것으로 분석 – 분야별 만족도 결과와 간접 중

		종합해 보면, 경영환경 분야에서는 '노무환경' 이 가장 중요한 분야인 것으로 분석 – 분야별 만족도 결과와 간접 중요도 결과를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통해 개선 우선 순위를 도출해 보면, 향후 '노무환경' 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요도 결과를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통해 개선 우선 순위를 도출해 보면, 향후 '세무환경' 과 '입지선정/공장설립' 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항목별 개선도	○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나, 아직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함. – 최초 투자시점과 비교 개선된 항목: '언어소통의 편의성' (긍정률 41.7%), '기업 거래 관행의 투명성' (긍정률 33.2%), '인력수급' (긍정률 28.7%), '행정기관의 서비스' (27.8%) 등 – 악화된 항목: '인건비' (부정률 64.6%), '간접비용' (61%), '물류비용' (부정률 36.3%) 등 – 특히 '인건비' 와 '간접비용' 에 대한 부정 평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 집중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항목으로 평가	○ 2004년 결과와 유사하며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최초 투자시점과 비교 개선된 항목: '언어소통의 편의성' (긍정률 33.6%), '기업 거래 관행의 투명성' (긍정률 31.6%), '행정기관의 서비스' (긍정률 30.4%) 등 – 악화된 항목: '인건비' (부정률 52.4%), '간접비용' (48.0%), '물류비용' (부정률 34.8%) 등 – 2004년 결과 대비 부정율은 낮아졌으나 유사한 경향 – 특히 '인건비' 와 '간접비용' 에 대한 부정 평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 집중적인 관리와 개선이 요구되는 항목으로 평가	○ 2005년 결과와 비교할 때, 악화된 항목에 대한 향후 집중적 관리 필요 – 최초 투자시점과 비교 개선된 항목: '언어소통의 편의성' (긍정률 40.0%), '행정기관의 서비스' (긍정률 35.0%), '자금조달의 편의성' (긍정률 32.9%) 등 – 악화된 항목: '인건비' (부정률 57.94%), '간접비용' (53.2.0%), '물류비용' (부정률 39.6%) 등 – 특히 '인건비' 와 '간접비용' 에 대한 부정 평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 집중적인 관리와 개선이 요구되는 항목으로 평가
분야별 세부개선사항	○ 경영환경 분야별로 세부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 노무 분야에서는 '노조활동 관련 제도, 관행 등' (64.6%)과 '임금 및 퇴직금 제도' (43.5%)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금융 분야에서는 '본사와의 채권, 채무 상계 절차 복잡' (38.6%)과 '외환거래 주거래 은행 지정제도' (28.3%)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세무 분야에서는 '빈번한 세법	○ 경영환경 분야별로 세부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2004년도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 – 노무 분야에서는 '노조활동 관련 제도, 관행 등' (48.8%)과 '임금 및 퇴직금 제도' (37.6%)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금융 분야에서는 '본사와의 채권, 채무 상계 절차 복잡' (39.6%)과 '외환거래 주거래 은행 지정제도' (22.4%)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경영환경 분야별로 세부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2005년도 결과와 개선사항의 순위는 비슷함. – 금융 분야에서는 '본사와의 채권, 채무 상계 절차 복잡' (34.3%)과 '외환거래 주거래 은행 지정제도' (28.9%)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세무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중복' (37.1%) ', ' 조세당국의 고압적 태도 '(25.7%), ' 세법개정 정보습득을 위한 영문자료 부

	개정, 세법 개선 정보습득을 위한 영문자료 부족' (39.0%)과 '조세 당국의 고압적 태도' (29.6%)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 분야에서는 '각종 인프라 부족' (41.3%)과 '담당 관청 행정처리 지연' (33.6%)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물류 분야에서는 '고질적 도로 교통 체증 및 통행료 부담' (51.1%)과 '해운, 항공 운송 운임 및 부대비용 고가' (23.8%), '노동시장 경직' (22.9%)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R&D 분야에서는 '지적 소유권 제도 미비' (56.5%)와 '정부지원 및 동기부여 제도 미비' (33.6%)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세무 분야에서는 '세법개정 정보습득을 위한 영문자료 부족' (38.8%)과 '불필요한 행정 중복' (26.4%)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 분야에서는 '각종 인프라 부족' (29.6%)과 '외국인 전용공단 등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 부족' (23.2%)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물류 분야에서는 '고질적 도로 교통 체증 및 통행료 부담' (42.8%)과 '노동시장 경직' (23.2%), '해운, 항공 운송 운임 및 부대비용 고가' (20.4%)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R&D 분야에서는 '지적 소유권 제도 미비' (41.6%)와 '우수 연구인력 확보 곤란' (30.8%)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족' (22.9%)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 분야에서는 '각종 인프라 부족' (28.2%)과 '각종 인,허가 취득의 어려움' (25.0%), '담당관청 행정처리 지연 '(25.0%)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물류 분야에서는 '고질적 도로 교통 체증 및 통행료 부담' (31.8%)과 '노동시장 경직' (28.2%), '해운, 항공 운송 운임 및 부대비용 고가' (19.6%)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R&D 분야에서는 '지적 소유권 제도 미비' (35.0%)와 '우수 연구인력 확보 곤란' (31.4%), '정부지원 및 동기부여 제도 미비' (23.9%)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노무 분야에서는 '노조의 경영권 참여요구' (41.8%), '복잡한 임금체계' (27.1%), '퇴직금 제도' (23.9%) 등이 우선 개선 사항으로 선정 – 인력채용 분야에서는 '지원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 (51.1%), '높은 임금수준 요구' (43.2%), '지원자의 전문성 부족' (36.8%)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노무와 인력채용 분야는 2005년과 제시 보기가 다르거나 새로이 추가된 항목으로 평가하였음.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2. 지역본부(regional hub) 설치

1) 한국에 투자한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현황

○ 2005년 말 현재 총 21개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가 한국에 진출하였으며, 이 중 11개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음.

– 한국에 소재한 21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본부는 14개가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3개가 프랑스국적이며,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스웨덴 국적기업이 한국에 각각 지역본부를 두고 있음.

– 서울 소재 지역본부는 볼보건설기계코리아(기계), 클레스트라하우저만(건축자재), 한국하니웰(전기전자), 모토로라코리아(통신), 한국유리공업(요업), 텍사스인스트루먼트(전기전자), 르노삼성(자동차), 푸르덴셜자산운용(투자신탁), 켈로그아시아(식품), 유한킴벌리클라크(제지), eBay(전자상거래)의 11개 기업임.

○ 지역거점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총 21개는 거점형을 포함한 Invest Korea의 잠정추정으로서 향후 명확한 정의를 정하고 그에 따라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표 4-33> 한국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	회사명	투자가명	국적	업종	서울소재
1	볼보건설기계코리아	Volvo Korea Holding	스웨덴	기계	서울
2	클라크머티리얼핸들링아시아	Clark Material Handling	미국	운송기기	
3	클레스트라하우저만	Clestra	프랑스	건축자재	서울
4	한국하니웰	Honeywell□	미국	전기전자	서울
5	보워터한라제지펄프	Bowater Nuway	미국	제지목재	
6	모토로라코리아	Motorola, Inc	미국	통신	서울
7	한국유리공업	Societe Financiere D'Administration□	프랑스	요업	서울

		Et De Gestion			
8	셀트리온	Vaxgen	미국	의약	
9	디브이에스코리아	Digital Video Systems	미국	전기전자	
10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코리아	Texas Instruments	미국	전기전자	서울
11	신광마이크로에랙트로닉스	Shinko Electric Industries	일본	전기전자	
12	대한중석초경	Iscar Int'L B.V.	화란	기계	
13	한라공조	Ford Motor Company	미국	기계	
14	페어차일드코리아 반도체	Fairchild Semiconductor Corp. of California	미국	전기전자	
15	오드펠코리아	Odfjell ASA	노르웨이	물류	
16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General Motors Asia Pacific Holdings LLC.	미국	자동차	
17	르노삼성	Renault Group	프랑스	자동차	서울
18	푸르덴셜자산운용	Prudential Financial	미국	투자신탁	서울
19	켈로그아시아	Kelloggs	미국	식품	서울
20	유한킴벌리클라크	Kimberly Clark	미국	제지	서울
21	eBay	eBay	미국	전자 상거래	서울

자료: 산업자원부 내부자료 (Invest Korea 작성), 2006.

2) 지역본부 설치를 위한 국가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 지역본부 설치를 위한 국가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는 시장 성장성(26.4%)을 최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이어 외국어 구사 가능한 숙련된 노동력(17.9%), 인근시장 접근성(13.2%)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조사 결과 대비 시장성장성 및 인근시장 접근성 등의 시장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진 반면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고려는 낮아져, 지역본부 설치국가의 시장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경우에도 전국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에는 차이가 있음.

– 서울에 위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인근 시장 접근성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비제조업에서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숙련된 노동력이 중요 고려사항임.

〈표 4-34〉 지역본부 설치를 위한 국가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단위: %)

구분		외국어구사 가능한 숙련 노동력	시장 성장성	인근 시장 접근성	본사직원 파견에 걸맞는 생활의 질	낮은 조세 부담률	정부 정책의 일관성
전체	2004년	19.7	–	27.8	10.8	9.0	–
	2005년	25.6	23.2	12.0	8.0	7.6	7.2
	2006년(전국)	17.9	26.4	13.2	6.1	6.1	9.3
	2006년(서울)	19.5	26.3	14.4	8.5	7.6	7.6
제조	2004년	18.6	–	29.4	10.8	3.9	–
	2005년	25.5	22.2	12.8	8.5	9.4	6.0
	2006년(전국)	15.9	28.5	12.6	3.3	4.0	12.6
	2006년(서울)	15.2	27.3	21.2	6.1	0.0	9.1
비제조	2004년	20.0	–	26.7	10.8	13.3	–
	2005년	26.1	21.7	9.8	7.6	5.4	10.9
	2006년(전국)	20.6	23.8	13.5	9.5	8.7	5.6
	2006년(서울)	21.4	25.0	11.9	9.5	10.7	7.1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3) 지역본부 설치 적합성 평가

○ 지역본부 설치 적합성의 경우 50.7%가 부정의 의견을 보여, 아직까지 한국은 지역본부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비제조업 분야(비적합: 53.2%)에서 두드러지며, 이는 시장개방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비제조업에 대한 지역본부 설치의 적합성은 적합과 비적합이 제조

업보다 모두 크게 나타나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비제조업 내에서 개방이 된 업종과 개방이 되지 않은 업종 등 업종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됨.

〈표 4-35〉 외국인투자기업 지역본부 설치 적합성 평가

구분		개선(%)	변화없음(%)	악화(%)	평균(점)
전체	2004년	-	-	-	-
	2005년	18.8	26.0	55.2	2.57
	2006년(전국)	17.5	31.8	50.7	2.56
	2006년(서울)	17.8	28.8	53.4	2.53
제조	2004년	-	-	-	-
	2005년	16.2	25.6	58.1	2.52
	2006년(전국)	14.6	36.4	49.0	2.56
	2006년(서울)	15.2	36.4	48.5	2.58
비제조	2004년	-	-	-	-
	2005년	15.2	26.1	58.7	2.48
	2006년(전국)	21.4	25.4	53.2	2.56
	2006년(서울)	19.0	26.2	54.8	2.51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4) 한국이 지역본부 설치 국가로 부족한 사항

○ 한국이 지역본부 설치 국가로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항목들로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숙련된 노동력(22.5%)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20.7%) 항목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2005년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던 항목으로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제조업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본사직원 파견에 걸맞는 생활의 질' 은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으나(12% -> 3.3%), '적정한 임금수준' 은 다소 악화되었음(12.8% -> 19.2%)을 알 수 있음.

〈표 4-36〉 한국이 지역본부 설치 국가로 부족한 사항 (단위: %)

구분		외국어구사 가능한 숙련된 노동력	정부 정책의 일관성	본사직원 파견에 걸맞는 생활의 질	적정한 임금수준	인근시장 접근성	선진화된 법률회계 서비스
전체	2004년	19.3	–	17.9	–	13.9	14.3
	2005년	24.4	12.8	9.6	10.4	5.2	5.2
	2006년(전국)	22.5	20.7	8.2	14.3	4.3	6.1
	2006년(서울)	25.4	23.7	11.0	10.2	6.8	5.9
제조	2004년	19.6	–	17.6	–	16.7	9.8
	2005년	24.8	10.3	12.0	12.8	–	–
	2006년(전국)	21.2	22.5	3.3	19.2	2.0	4.6
	2006년(서울)	27.3	27.3	6.1	12.1	3.0	3.0
비제조	2004년	18.3	–	18.3	–	11.7	18.3
	2005년	22.8	13.0	7.6	9.8	–	–
	2006년(전국)	24.6	19.0	13.5	7.9	7.1	7.9
	2006년(서울)	25.0	22.6	13.1	8.3	8.3	7.1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3. 한국 시장의 전망과 외국인투자 유치확대

1) 향후 3년간 한국시장의 영업 전망

○ 한국시장에 대한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이라 할 수 있으나, 2006년의 경우 낙관적 전망의 감소(5.8%P 하락)와 비판적 전망의 증가(7.5%P 상승)로 인해 2005년보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증가하였음.

○ 비제조업의 경우 서울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영업전망(50%)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4-37〉 향후 3년간 한국시장의 영업 전망

구분		개선(%)	변화없음(%)	악화(%)	평균(점)
전체	2004년	40.4	34.1	25.6	3.14
	2005년	44.4	38.8	16.8	3.34
	2006년(전국)	38.6	37.1	24.3	3.15
	2006년(서울)	43.2	34.7	22.0	3.24
제조	2004년	33.3	36.3	30.4	3.01
	2005년	41.0	41.0	17.9	3.28
	2006년(전국)	35.1	39.1	25.8	3.10
	2006년(서울)	27.3	42.4	30.3	2.88
비제조	2004년	45.8	32.5	21.7	3.24
	2005년	42.4	41.3	16.3	3.32
	2006년(전국)	*	33.3	23.0	3.21
	2006년(서울)	50.0	31.0	19.0	3.38

주: 2006년 전국의 경우 통계치에서 자료 누락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 향후 한국 시장의 전망은 밝으며, 투자 확대 가능성 역시 희망적임

- 향후 3년간 한국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38.6%)
-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투자를 늘릴 것'(42.1%)이라는 의향이 높음.
- 2005년 대비 한국시장에 대한 낙관율과 확대 의향률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향후 한국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견해 나타냄.
-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 향후 '건강한 노사관계 정착'(34.6%), '국민의식 국제화'(31.1%), '시장 개방 확대'(25.5%) 등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
- 국민의식 국제화 및 투명한 기업거래 관행 확보에 대해서 2005년 대비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 비중이 감소한 특징을 보임.

2) 향후 3년간 한국시장의 외국인투자 확대 가능성

○ 2005년에 비해 투자 확대 의견은 감소하고 투자 축소 의견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다소 감소하였음.

○ 그러나 비제조업의 경우, 전국과 서울지역 모두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확대 가능성을 더 긍정적으로 전망

– 특히 비제조업의 서울지역에 대한 투자확대는 45.2%로서 서울지역 제조업의 33.3%로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4-38〉 향후 3년간 한국시장의 외국인투자 확대 가능성

구분		개선(%)	변화없음(%)	악화(%)	평균(점)
전체	2004년	42.6	43.9	13.5	3.31
	2005년	50.8	36.4	12.8	3.46
	2006년(전국)	42.1	38.2	19.6	3.28
	2006년(서울)	41.5	42.4	16.1	3.31
제조	2004년	47.1	40.2	12.7	3.38
	2005년	58.1	29.9	12.0	3.56
	2006년(전국)	39.1	41.1	19.9	3.27
	2006년(서울)	33.3	45.5	21.2	3.18
비제조	2004년	38.3	47.5	14.2	3.25
	2005년	41.3	46.7	12.0	3.36
	2006년(전국)	46.0	34.9	19.0	3.29
	2006년(서울)	45.2	41.7	13.1	3.38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 2004년~2006년의 한국시장의 향후전망과 개선사항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39〉 한국시장의 전망과 외국인투자 (2004~2006)

	2004	2005	2006 (전국)
향후 전망	○ 향후 한국 시장의 전망은 밝으며, 투자 확대 가능성은 희망적임. - 한국 시장 투자 동기는 주로 '시장 성장 잠재력'(60.5%)과 '높은 시장 수요'(45.3%) 등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잠재력과 성장성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음. - 향후 3년간 한국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40.4%) -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투자를 늘릴 것'(42.6%)이라는 의향이 높음. - 현재 시장 환경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면이 많이 존재하나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견해 -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 향후 '건전한 노사관계정착'(58.3%), '국민의식 국제화'(32.3%), '시장 개방 확대'(24.2%)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 특히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은 만족도 평가가 가장 낮은 분야이면서 매우 중요한 경영환경 분야인 것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이 요구	○ 향후 한국 시장의 전망은 밝으며, 투자 확대 가능성은 희망적임. - 향후 3년간 한국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44.4%) -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투자를 늘릴 것'(50.8%)이라는 의향이 높음. - 현재 시장 환경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면이 많이 존재하나 미래 한국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견해 -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 향후 '국민의식 국제화'(41.6%), '건강한 노사관계 정착'(28.4%), '투명한 기업거래 관행 확보'(24.4%) 등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	○ 향후 한국 시장의 전망은 밝으며, 투자 확대 가능성 역시 희망적임 - 향후 3년간 한국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38.6%) -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투자를 늘릴 것'(42.1%)이라는 의향이 높음 - 2005년 대비 한국시장에 대한 낙관율과 확대 의향률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향후 한국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견해 나타냄. -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 향후 '건강한 노사관계 정착'(34.6%), '국민의식 국제화'(31.1%), '시장 개방 확대'(25.5%) 등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 - 국민의식 국제화 및 투명한 기업거래 관행 확보에 대해서 2005년 대비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 비중이 감소한 특징을 보임.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3)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위한 시사점

□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 향후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건전한 조사관계 정착 > 국민의식 국제화 > 시장개방 확대 등이 언급됨.

○ 반면, 서울의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국민의식 국제화 > 시장개방 확대 >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을 언급하여 그 순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서울의 경우, 비제조업에서의 국민의식 국제화는 42.9%로, 제조업의 30.3%에 비해 매우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 비제조업에서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에 대한 요구는 19%로 제조업의 33.3%에 비해 매우 낮으나, '외국어 사용 보편화' 항목에서는 비제조업이 17.9%로 제조업의 3.0%에 비해 매우 높음.

〈표 4-40〉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단위 : %)

구분		국민의식 국제화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시장개방 확대	투명한 기업 거래관행 확보	조세부담 완화	외국어 사용 보편화
전체	2004년	32.3	58.3	24.2	16.6	11.7	11.2
	2005년	41.6	28.4	11.6	24.4	13.6	13.6
	2006년(전국)	31.1	34.6	22.5	12.9	13.2	13.9
	2006년(서울)	39.0	23.7	34.7	11.0	10.2	13.6
제조	2004년	28.4	65.7	16.7	17.6	13.6	13.6
	2005년	39.3	38.5	–	23.9	16.2	12.8
	2006년(전국)	26.5	48.3	18.5	13.9	13.9	10.6
	2006년(서울)	30.3	33.3	33.3	12.1	12.1	3.0
비제조	2004년	35.8	52.5	30.8	15.8	–	–
	2005년	47.8	21.7	–	27.2	9.8	9.8
	2006년(전국)	37.3	18.3	27.0	11.1	12.7	17.5
	2006년(서울)	42.9	19.0	34.5	10.7	9.5	17.9

자료: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5, 2006; Gallup Korea, 2006에서 재구성

□ 외국기업의 투자 동기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

○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동기와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투자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한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동기를 보면 시장성장 잠재력이 가장 중요한 동기이며, 다음으로 내수시장 진출이나 기술인력 확보와 R&D 환경은 그 중요성이 다소 높아지고 있어, 투자동기가 내수시장 진출에서 기술 및 연구개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

○ 서울은 R&D 환경에 대한 평가가 높으며, 서울지역의 생산효율성이나 산업인프라를 보고 투자하는 제조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우 적으므로, 전략적으로 비제조업 혹은 서비스 산업을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본부 유치 노력을 경주

○ 2005년에 비해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비제조업의 경우 서울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영업전망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한국은 지역본부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제조업 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시장개방문제와 연계되어 있음.

○ 지역본부 설치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시장 성장성과 한국이 지역본부 설치 국가로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숙련된 노동력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함.

□ 서비스 산업의 경우 단순한 투자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제반 환경 조성에 주력

○ 서비스 산업의 경우 거시 경제적 환경 및 인적 자원의 수준, 생활 환경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제반 환경 조성에 주력

○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정부의 진입규제와 이익집단의 진입규제 해소와 연계하여 상호정책 간에 순효과를 내도록 유도

–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나친 규제 및 제조업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지원 등으로 서비스 산업의 전반적 환경이 취약

○ 외국인이 살기 어려운 생활 환경상 애로는 인적 자원의 교류가 수반되는 서비스 부문 직접투자의 최대 장애 요인 중 하나

– 외국 투자기업들은 교육환경, 고질적인 도로체증, 의료 환경 및 임대차 제도 등을 한국 내 경영 애로 사항으로 지적

□ 국내기업의 학습능력 제고와 관련투자에 대한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하여 기술이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흡수능력이 있어야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못지않게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학습능력 제고와 관련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

제 V 장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

제1절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제2절　서비스산업 투자유치의 장애요인

제4절　서비스업종의 전략적 유치

제5장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

제1절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중요성[7)]

□ 서비스 산업은 차세대 新성장 동력

○ OECD의 자료에 따르면, OECD 선진국들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서비스 산업 비중이 증대(OECD, 2003)

– 경제발전에 따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제의 서비스화(Service Economy)' 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

○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실업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

– 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 현재 24.3명으로 제조업(14.4명) 및 전체산업(20.1명) 평균을 상회(산은경제연구소, 2005)

○ 경기순환에 따른 변동 폭이 작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도

–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재고누적에 따른 부담이 없고 설비투자의 변동성도 적으며, 수요자체가 매우 안정적

□ 제조업 등 타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인 영향

○ 경영컨설팅, 디자인, 광고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타 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

○ 제조업체가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캡슐화(Encapsulation)가 빠르게 진전

---

7) 산은경제연구소(2005) 「서비스업 발전의 경제적 효과」를 정리

– 서비스 캡슐화의 사례: 포드의 자동차 금융 서비스, 제록스의 복사기의 유지관리 및 리스 서비스 등

○ 제조업 경쟁력 강화노력이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져왔고, 서비스업의 발전이 다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관계로 발전

○ 반면 서비스 부문의 비효율성은 산업 및 경제성장을 심각하게 저해

– 각 산업의 중간 투입재 역할을 하는 산업특성상 서비스산업의 비효율성 및 고비용 구조는 수요산업 및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초래

□ 서비스 분야 FDI는 일석 삼조의 경제 효과

○ 특히 서비스 분야 FDI는 3대 분야에서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

– 국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구조조정 효과)

–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기술 및 지식파급효과)

– 고용 창출 효과(생산 및 고용 증대 효과)

○ 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한국의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

– OECD DB에 따르면 2005년 1/4분기 기준 우리의 서비스 산업 비중은 GDP 비중의 57.5%를 차지하여 70%를 상회하는 해외의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미국 75.6%, 영국 73.2%, 프랑스 73.2%, 독일 70.1%).

○ 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역량 및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이 중요

– 이러한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경제 효과의 크기는 국내 기업의 적응능력에 따라 결정됨.

– 외부의 선진 경영기술을 자신들의 경제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서비스 분야 FDI의 긍정적 경제 효과가

극대화

제2절 서비스시장 직접투자 유치의 장애요인

1. 일반적 장애요인

□ 경영 환경 애로, 정주 환경 애로, 과다한 규제가 핵심 장애요인

○ 경영 환경과 관련된 장애 요인 중 고급 인적 자원의 질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 사람이 매개된 서비스 산업의 특성 상 고급 인적 자원 보유 여부는 투자결정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

○ 외국인이 살기 어려운 생활 환경상 애로는 인적 자원의 교류가 수반되는 서비스 부문 직접투자의 최대 장애 요인 중 하나

– 외국 투자기업들은 교육환경, 고질적인 도로체증, 의료 환경 및 임대차 제도 등을 한국 내 경영 애로 사항으로 지적

○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나친 규제 및 제조업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지원 등으로 서비스 산업의 전반적 환경이 취약

□ 인적 자원의 질 부족 : 경영 환경 장애 요인

○ 인력의 질적 수준이 낮고 특히 고급인력의 풀(pool)이 협소

–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6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창출과 인재 양성의 핵심 기능인 대학 경쟁력이 조사대상 61개국 가운데 50위에 불과(2006년). 이는 2004년 59위, 2005년 52위에서 다소간 상승했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IMD, 2006)

– 해외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만한 글로벌 역량이 부족

– 현재 한국의 글로벌 수준은 조사대상 123개국 중 29위에 불과 : 지속적인 개방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평가하는 글로벌화 수준은 낮은 실정 (Dreher, 2006)

– * 외국기업들 대상 · 의 조사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에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30.8%를 차지(KOTRA, 2005년 6월)

〈표 5-1〉 2006년도 글로벌화 지수(Index of Globalization) 순위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미국	11	아일랜드	26	포르투갈
2	스웨덴	12	싱가폴	29	한국
3	캐나다	13	뉴질랜드	31	폴란드
4	영국	14	핀란드	32	쿠웨이트
5	룩셈부르크	15	일본	39	러시아
6	오스트리아	18	덴마크	44	중국
7	프랑스	20	독일	45	브라질
8	호주	22	이스라엘	59	인도네시아
9	스위스	24	체코	68	멕시코
10	홍콩	25	이탈리아	80	필리핀

주: 글로벌화 지수에는 경제통합, 해외접촉(personal contact), 기술, 국제사회 참여 등 4가지 요소가 반영

자료: Dreher, 2006.

□ 외국인이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 : 정주 환경 애로 요인

○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환경이 열악

–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문화생활 등 외국인 정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고급 외국 인력을 유치하는 데 애로를 겪는 중

– 선진국과 경쟁국은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와 우수인력들을 유치

- 비자발급 완화, 이중국적 허용 등의 조치 외에도, 개인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최고급 주거환경 조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

○ Mercer가 2006년 조사한 세계 각 도시의 생활환경 조사에서 200여개 도시 중 서울은 2005년의 90위보다 한등급 상승한 89위로 낮은 경쟁력을 보임(Mercer, 2006).

- 도쿄(35위), 홍콩(68위), 싱가포르(34위) 등 경쟁국 도시들이 서울에 비해 높은 순위를 기록

2.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1) FDI 제한지수 (FDI restriction index)

○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대폭 축소해 투자자유화비율이 99.8%에 달하고 있음. 즉 대부분 업종이 외국인투자에 문호가 개방된 상태

○ OECD 28개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지분 제한, 인허가 절차, 이사회 구성 제한, 인적 이동 제한 등을 조사하여 그 정도를 FDI 제한지수(FDI restriction index)[8]로 나타냄.

- OECD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에 대한 FDI 제한지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0.075로서 OECD 평균치인 0.087보다 낮음. 우리나라보다 제한지수가 낮은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멕시코, 네덜란드, 영국(이상 0.025), 체코, 미국(이상 0.050), 노르웨이, 스웨덴(0.069) 등. 따라서 제조업을 기준으로 보면 OECD국가에서도 개방도가 높은 국가에 속함.

---

8) 제한이 없을수록 0의 값, 제한이 많을수록 1의 값

– 그러나 비즈니스 서비스(법률, 회계, 건축, 공학), 통신, 건축, 도소매 유통, 금융, 호텔. 식당, 수송, 전기 등의 업종을 포괄하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규제정도가 높아 FDI 제한지수 0.3949로 OECD 평균인 0.195에 비해 월등히 높음.

– 비교대상 28개국에서 우리나라보다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심한 나라는 캐나다, 터키, 아이슬란드 등 3개국에 불과함. 한편, 영국(0.063), 네덜란드(0.089), 벨기에(0.089), 독일(0.094), 아일랜드(0.096)에 비해 서비스업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절대적인 우위

– 이와 같이 국내외기업에 대한 규제가 실재하는 상황에서 국내개혁, 즉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 정책이 먼저 실시되지 않고 대외개방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의 반경쟁효과를 통한 시장잠식과 더불어 이로 인한 고용감소효과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대외개방과 동시에 서비스부문에 잔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는 국내개혁이 수반될 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

〈표 5-2〉 서비스 업종별 FDI 제한지수

업종	비즈니스 서비스	통신	건축	유통	금융	호텔·식당	수송	전기
한국	0.131	0.525	0.075	0.325	0.452	0.075	0.399	1.000
OECD평균	0.132	0.372	0.103	0.149	0.184	0.099	0.331	0.769
순위	19	22	15	26	27	16	20	22

자료: Golub, 2003.

2)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 제조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개방을 하고 있으나, 서비스 부문은

제조업에 비해 과다한 규제로 서비스산업은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

○ 국내 서비스 산업은 다양한 형태의 규제로 자유로운 발전이 저해

– 전기 등 공공적 서비스의 공기업 독점, 각종 서비스에 대한 가격 통제, 진입 및 영업 등에서의 인허가 규제 등 다양한 규제가 존재

– 특히 IMF 체제 이후 대대적인 서비스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국내자격 기준 충족 등 각종 제한조치로 실질적인 개방효과는 크게 미흡

– 또한 제조업에 비해 세제, 자금 등 정책지원에 있어 차별이 존재

○ 서비스부문의 추가 개방 관련한 구체적인 업종 검토 필요와 더불어 취약한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강화 시급

– 2005년 5월 2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기계 설비, 보수, 기술 자문, 회계, 건축, 경영컨설팅,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시행, 데이터 운영, 데이터 시스템, 자동차 설계 등 10개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안을 확정

3) 부문별 규제

□ 교육부문

○ 유아교육기관으로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기관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분류됨. 예를 들어, 유아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상업·정보산업·공업·기타 기술 및 직업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특수학교·사회교육시설, 그 외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등

– 이는 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관 및 시설이 포함되고 있음.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시설, 학교 및 시민단체 부설 사회교육원 등도 투자제외업종으로 분류됨. 단,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가운데 속독학원, 웅변학원, 체육전문강사 교육학원, 체육입시학원은 외국인투자가 가능

○ 경제학 연구 개발업은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분류. 경제, 경영, 금융, 경제 및 사회통계 이론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대상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소관부처인 교육부) 제외업종으로 분류. 또한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도 투자제외업종으로 분류. 예를 들어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예술, 문화학, 철학, 역사학, 복지학 연구, 교육학 연구, 법학, 언어학, 군사학 등이 포함

○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외국인투자 유치방향과 상충되기에, 정부는 2001년 4월 법령 6462호에 의거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 2를 신설하여 외국인학교를 각종 학교의 하나로 인정

– 현행 법령에 규정된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은 외국인 또는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자녀로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으로 한정

– 각종학교는『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교육부령)』에 의거 학력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현재 국내 외국인학교는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보아야만 함[9].

– 현행 법 기준 외국인학교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을 사실상 제한.

9) 교육인적자원부(www.moe.go.kr)

2003년 7월에 경제자유지역법이 제정되어 경제자유지역내 외국인학교 설립이 자유화되었지만 외국인학교를 영리법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의 학교설립투자는 거의 기대할 수 없음[10].

○ 다만, 2004년 6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앞에서 논의된 문제점이 대부분 해결

– 동 법률(안)에 따르면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서는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7조·제8조 및 제 18조의 규정에 제한 받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 입학할 국내 학생의 비율은 학교장이 정하고, 한국사와 한국어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이 인정. 또한 외국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은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외국학교법인의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

□ 법률부문

○ 현재 국내 법률시장은 변호사법 제 4조·제6조 제 1항· 제 6조 제 2항에 의거 외국변호사의 개업 및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법률시장 개방에 제약

– 이는 국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국내 사법시험에 합격 하에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호사로서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외국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거나 변호사자격을 부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변호사 자격이 부여. 이 또한 외국

10) 조선일보컬럼 "태평로"(2003.7.11)

법에 관한 법률 활동으로 그 범위가 제한

□ 의료부문

○ 의료분야는 「보건 및 복지행정」 업종으로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분리되어 외국인투자가 원천적으로 제한. 또한 의료법 제 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의 국내 의료 활동이 제한

○ 그러나 의료분야에 역시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을 설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법률 제 23조에 의거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 가능. 이 경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함.

제3절 서비스업종의 전략적 유치

1. 서비스업종의 전략적 선정

□ 장기 서울시 경제 발전비전에 부합하는 선별적 투자 유치

○ 가속화되는 세계경제의 통합구도에서 탈락하지 않고 꾸준히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입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면서 이를 통해 서울지역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 촉진과 서울지역 산업경쟁력 제고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함.

○ 서울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유치가 필요한 산업중심으로 업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 외국기업의 투자 동기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

○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 요인을 분

석하고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투자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외국 기업의 투자 동기와 한국의 강점을 결합시켜 유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

○ 우리나라의 강점은 고성장성, IT경쟁력 등임을 감안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유치해야 할 필요

□ 무형자산 추구형 투자유치

○ 서울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토지제공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입장인 반면, 외국과의 접근성, 사회인프라, 기술인력, 지식자산 등은 우위

○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위에 있는 자체역량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미래 서울시의 산업구조에 걸맞은 업종을 선정하여 그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집중적으로 하여야 함.

□ 서비스 부문 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 서비스산업의 경우, 거시 경제적 환경(경제성장률), 시장규모 및 인적 자원의 수준, 생활환경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

○ 그러므로 단순한 투자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제반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5-3〉 서비스 부문 직접투자 유치의 결정 요인

구분	효과	중요성
시장규모	+	◎
경제의 개방성	+	△
경제성장률	+	◎
세율	−	△
투자국과 현지국 거리	−	△
국가투명성	+	○
국가위험도	−	○
노사분규	−	○
정주환경	+	○
인적자원 수준	+	◎
투자인센티브	+	△

주) 정의 효과는 +, 부의 효과는 −, ◎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 ○ 중요한 결정요인 ▽ 보통의 결정요인

□ 핵심 서비스업종을 전략적으로 선정

○ 산업 자체의 성장성,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국내 내부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서비스산업을 선정

– 특히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의 성장성과 국제경쟁력의 확보여부(세계시장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

○ 도소매(유통), 금융·보험,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 의료·관광, 문화·관광, 컨벤션 분야는 향후 7대 핵심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해외직접투자 유치 노력을 경주

〈표 5-4〉 핵심서비스산업 선정

	성장성	타산업에의 파급효과	국내 내부역량	최종선정
도소매(유통)	×	○	△	√
음식·운수	×	×	△	
교통·운수	△	△	△	

금융·보험	○	○	×	√
부동산	△	△	△	√
비즈니스서비스	○	○	△	√
통신·방송	○	○	○	
교육	△	○	×	
의료·관광	○	△	○	√
문화·관광	○	○	△	√
컨벤션	○	△	△	√

주: 평가가 높은 순서대로 ○ 〉 △ 〉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05)를 수정.

2. 투자유치의 전략적 접근

□ 제한된 자원 역량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투자 유치

○ 외국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핵심과제로 설정

– 외국기업 유치는 국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여 동북아 중심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과제라는 인식 필요

– 기존의 양적 성장 추구에서 벗어나 기술주도 성장으로 전환 필요

– 지역거점기업 유치와 R&D 및 비즈니스 거점의 형성으로 동북아 중심국 지향

○ 외국기업의 니즈, 국가 비전 · 전략, 한국의 강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지향형 외국기업 유치전략 구사

– 국가 비전 · 전략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강점과 부합되어야 하며, 투자한 외국기업에게 고객만족 추구

○ 투자유치 지역을 다각화하여 기존의 미국, 일본 구도의 투자유치 지역에서 벗어나 높은 투자여력을 보유한 유럽지역의 고려

– 각종 국제회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유럽투자자들에게 한국의 투자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 전략 강화 필요

□ 정책우선순위의 조정

○ 수도권 규제정책과의 상충이 있을 경우, 정책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조정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정

○ 자유무역협정(FTA)의 순차적인 체결에 의해 전체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되 국내 산업에의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의 모색

□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자본의 서비스부문 진입장벽의 해소

○ 서비스산업에 대한 직접투자 유치방안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산업정책 범주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

○ 무분별한 외자유치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비스부문으로의 자연스러운 국내자본 투자유인 제공 필요

– 서비스부문의 국내기업 투자확대는 서비스산업의 품질제고와 더불어 의료, 교육, 관광 분야에서의 해외수요를 국내로 되돌릴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수요흡수 기대

– 이를 통해 확대된 서비스시장은 또 다른 외국인투자 유인 가능

○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정부의 진입규제와 이익집단의 진입규제를 해소와 연계하여 상호정책 간에 순효과를 내도록 유도

– 예를 들어, 교육 및 의료부문 등에서 진입장벽을 높게 유지하여 국내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개방화를 통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

□ 유치실적보다는 국민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양질의 투자를 적극유치

○ 기 확립된 제도의 운용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급측면의 애로

요인을 해소

– 고급인력 양성,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안정된 노사관계의 정립 및 시장 친화적 경제제도 구축

○ 장기적 과제로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교육시설과 의료 수준 확충하고 외국어수준의 향상 및 표지판의 영어 등 표기의 국제화

□ 공식적·비공식적 투자정책협의체 운용을 통한 정책조화

○ 협의체의 운용을 통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며,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경쟁지역과도 정책협의 등을 통해 상호보완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국내의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가 주로 수도권지역에 대한 투자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에 직접투자에 대한 경쟁은 투자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지나친 인센티브 제공 및 중복된 투자 유치 노력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광역자치단체간의 불필요한 유치경쟁을 피할 수 있도록 인접광역단체 간 투자정책협의체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운용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유치경쟁의 자제

– 이는 투자자본에 대하여 엄선된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양적인 실적에 치중할 수 있음

○ 동북아의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지와도 경쟁적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 관련 업종을 투자하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

□ 홍보강화

○ 세계 기업인이 많이 구독하는 유명한 경제저널(Economist, Fortune, Business Week 등)에 서울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며 서울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과 관련되어 세계적인 산업전문지에 투자지로서의 매력, 유망 산업소개, 투자관련 연락 등을 게재할 필요

3. 투자지원체제 개선

□ 법규, 절차 간소화

○ 국가적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기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많은 규제들이 제거되었음. 그러나 아직까지도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기업 친화적 시장제도 정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과다한 공장입지 관련 및 물류사업 관련 규제의 완화, 행정조사 절차의 투명화 및 명료화 등의 노력을 통해 규제정도를 선진국의 경쟁도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완화할 필요

□ 인센티브 강화

○ 투자확대와 심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서울시장에 보다 많은 실행을 한 기업들이 초기 투자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하여 기술이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흡수능력이 있어야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못지않게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학습능력 제고와 관련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

□ 통계시스템 개선

○ 통계는 정책수립과 집행에서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기본 자료이나, 현재 외국인 투자 기업과 관련하여 정례적인 통계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보다 정치하고 현실밀착형 정책수립을 위해 통계 기반 구축이 필요

– 외국인 투자 관련 통계는 투자국, 투자기업, 투자규모, 진입비율 등에 대한 정보 포함하나 투자품목의 경우에 대분류로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세품목으로 진입했는지 파악 불가

– 진입시장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영활동 과정에서 어떠한 품목을 추가했는지, 투자입지를 어느 곳으로 전환했는지, 지분구조는 어떻게 변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파악 불가하며 심지어 투자 철수 여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발생

–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

○ 이를 위해서 투자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련기관(국세청, 관세청, 외투주무부처, 투자진흥기관 등)의 활동정보를 공유하고,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포지션 변화를 업데이트 하여야 할 것

□ 주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투자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애초 설정한 투자정책 목표가 실현되었는가를 평가하고 투자유치 활동시 잘못 추진된 부분을 수정케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투자정책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관리의 한 단계임.

–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투자성과에 대한 지표관리.

그런데 서울시 경우 주로 신고기준으로 유치금액 및 건수 등 단순화된 지표로 외국인 투자성과가 비교 평가되고 있음.

- 향후 앞에서 언급한 도착기준, RGDP대비 외국인 투자비중, 총고정자본 형성 대비 외국인 투자비중 등 다양한 양적 지표를 추가하고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 수출, 고용, 인적자원 활용정도, 창출부가가치 등의 질적 지표를 보강하여 외국인 투자효과 점검 및 유치활동 방향 평가에 정확도를 높여야 할 것

○ 나아가 이러한 지표관리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해선 보다 좋은 체계적인 성과관리 모니터링 체계의 개발이 필요

제Ⅵ장 결 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의 진전과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서울시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 장기적인 비전하에 서울시의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업종을 선정하여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동기

○ 한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동기를 보면 시장성장 잠재력이 가장 중요한 동기이며, 다음으로 내수시장 진출이나 기술인력 확보와 R&D 환경은 그 중요성이 다소 높아지고 있어, 투자동기가 내수시장 진출에서 기술 및 연구개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

○ 서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동기로서 시장 성장 잠재력과 내수 시장 진출이 가장 우선하며 전국에 비해 R&D 환경에 대한 평가는 높으나 생산효율성의 면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으며, 서울지역의 생산효율성을 보고 투자하는 제조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우 적음.

□ 서울시의 서비스업 산업에 대한 투자여건의 상대적 우위

○ 외국인투자기업의 서울시의 IT와 R&D 환경에 대한 평가가 높으며, 서울지역의 생산효율성이나 산업인프라를 보고 투자하는 제조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우 적으므로, 전략적으로 비제조업 혹

은 서비스 산업을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토지제공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입장인 반면, 외국과의 접근성, 사회인프라, 기술인력, 지식자산 등은 우위에 있으므로, 우위에 있는 자체역량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미래 서울시의 산업구조에 걸맞은 업종을 선정하여 투자 유치해야 함.

□ 서울의 경영환경에 대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 서울지역의 외투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7개 항목의 만족도와 중요도를 분석한 IPA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노무와 세무는 중점개선영역(고중요도-저만족도)에 속하고, 인력채용은 서울소재 제조업 외투기업의 경우 중점개선영역(고중요도-저만족도)에, 비제조업 기업은 노력전환영역(저중요도-고만족도)에 속한 것으로 평가함.

○ 물류와 R&D는 노력전환영역(저중요도-고만족도)에, 입지선정과 금융은 개선유보영역(저중요도-저만족도)에 포함되어 있음.

□ 경영환경의 개선도: 전국과 서울지역 비교

○ 2006년 전국 대비 서울의 경영환경 항목별 개선도 평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국의 결과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인력수급' 과 '물류비용' 에 있어서 서울이 높게 나타났고, '언어소통의 편의성' 과 '간접비용' 에 있어서 약간 높게 나타났음.

○ 반면, 'R&D 환경' 과 '기업 거래관행의 투명성' 및 '자금조달의 편의성' 은 서울이 개선도가 전국에 대한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사관계' 는 약간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경영환경의 개선도: 서울지역 제조업과 비제조업 비교

○ 서울지역의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비교하면, 비제조업이 '기업거래 관행의 투명성', 'R&D 환경', '간접비용'에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언어소통의 편의성', '행정기관의 서비스', '세무관련 환경'과 '노사관계' 및 '물류비용'에 있어서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개선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의 상존

○ 아직까지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기업친화적 시장제도 정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과다한 공장입지 관련 규제와 물류사업 관련 규제의 완화, 행정조사 절차의 투명화 및 명료화 등의 노력을 통해 규제정도를 선진국의 경쟁도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완화할 필요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본부 설치

○ 2005년 말 현재 총 21개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가 한국에 진출하였으며, 이 중 11개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음.

- 한국에 소재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본부는 기업은 14개가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3개가 프랑스국적이며,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스웨덴 국적기업이 한국에 각 1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있음.
- 서울 소재 지역본부는 볼보건설기계코리아(기계), 클레스트라하우저만(건축자재), 한국하니웰(전기전자), 모토로라코리아(통신), 한국유리공업(요업), 텍사스인스트루먼트(전기전자), 르노삼성(자동차), 푸르덴셜자산운용(투자신탁), 켈로그아시아(식품), 유

한킴벌리클라크(제지), eBay(전자상거래)의 11개 기업임.

○ 지역거점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총 21개는 거점형을 포함한 Invest Korea의 잠정추정으로서 향후 명확한 정의를 정하고 그에 따라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본부에 대한 전망으로는 한국은 전반적으로 지역본부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비제조업 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서비스 시장 개방문제와 연계되어 있음.

○ 서울의 경우에도 전국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에 위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인근 시장 접근성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비제조업에서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숙련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고려사항임.

○ 한국이 지역본부 설치 국가로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항목들로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숙련된 노동력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 항목이 선정되었으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역본부 설치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인 시장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 한국이 지역본부 설치 국가로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숙련된 숙련 노동자 육성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 전체적으로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 국민의식 국제화 > 시장 개방 확대 등이 언급되었으며,

○ 서울의 외투기업들은 국민의식 국제화 > 시장개방 확대 >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언급하여 그 순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

고 있음.

– 서울의 경우, 비제조업에서의 국민의식 국제화는 42.9%로, 제조업의 30.3%에 비해 매우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 비제조업에서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대한 요구는 19%로 제조업의 33.3%에 비해 매우 낮으나, '외국어 사용 보편화' 항목에서는 비제조업이 17.9%로 제조업의 3.0%에 비해 매우 높음.

□ 외투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기반 구축이 미비함.

○ 통계는 정책수립과 결정 및 집행에서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기본 자료이나, 현재 외국인 투자 기업과 관련하여 정례적인 통계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보다 정치하고 현실 밀착형 정책수립을 위해 통계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가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제2절 정책건의

□ 투자유치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전략적 접근에 의한 유치

○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동기와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투자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산업 자체의 성장성,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서울시의 내부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서비스업종을 전략적으로 선정

– 이러한 맥락에서 도소매(유통), 금융·보험, 부동산, 비즈니스 서

비스, 의료·관광, 문화·관광, 컨벤션 분야를 향후 7대 핵심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해외 직접투자 유치 노력을 경주

○ 외국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되, 제한된 자원 역량을 감안하여 지역거점기업과 투자지역을 다각화하여 전략적으로 투자 유치

– 기존의 양적 성장 추구에서 벗어나 기술주도 성장에 필요한 투자유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역거점기업 유치와 R&D 및 비즈니스 거점의 형성으로 동북아 중심국 지향이 필요

– 투자유치 지역을 다각화하여 기존의 미국, 일본 구도의 투자유치 지역에서 벗어나 높은 투자여력을 보유한 유럽지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 유치

□ 서비스 산업에 대한 거시 경제적 환경조성

○ 비제조업 특히 서비스 산업의 경우 거시 경제적 환경 및 인적 자원의 수준, 생활환경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제반 환경 조성에 주력하여야 함.

○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정부의 진입규제와 이익집단의 진입규제 해소와 연계하여 상호정책 간에 순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규제완화

○ 규제완화를 통하여 국내자본의 서비스부문 유입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되, 공장입지 및 물류사업 관련 규제의 완화, 행정조사 절차의 투명화 및 명료화 등을 통해 규제정도를 선진국의 경쟁도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규제정책과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이 상충할 경우 정책우선순

위 결정에 있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조정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정

○ 서비스산업에 대한 직접투자 유치방안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산업정책 범주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연계로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 자유무역협정(FTA)의 순차적인 체결에 의해 전체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되 국내 산업에의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정책협력

○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에 직접투자에 대한 경쟁은 투자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지나친 인센티브 제공 및 중복된 투자 유치 노력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공식적·비공식적 협의체의 운용을 통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

○ 또한 타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경쟁지역과도 정책협의 등을 통해 상호보완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

– 동북아의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지와도 경쟁적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 관련 업종을 투자하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

□ 기술이전을 위한 국내기업의 학습역량 제고

○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하여 기술이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흡수능력이 있어야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못지않게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학습능력 제고와 관련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통계 및 성과관리 시스템의 정비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 투자 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련기관(국세청, 관세청, 외투주무부처, 투자진흥기관 등)의 활동정보를 공유하고,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포지션 변화를 업데이트 하여야 할 것

○ 외국인투자의 성과지표관리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해선 보다 좋은 체계적인 성과관리 모니터링 체계의 개발이 필요

□ 적극적인 유치 광고

○ 세계 기업인이 많이 구독하는 유명한 경제저널(Economist, Fortune, Business Week 등)에 서울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게제하며 서울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과 관련되어 세계적인 산업전문지에 투자지로서의 매력, 유망 산업소개, 투자관련 연락 등을 게재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강성진·서상원, 2005.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전략적 유치방안」, 한국은행

경기도청, 2002.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경기도청, 2006. 「나, 세계의 장벽을 허물어 가는 이야기: Tales of Breaking the World's Barriers」

경기도청, 2006. 「나, 찍새와 딱새의 이야기: Global Investment Base Camp」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 2006. Web Source

김기국·권용수· 배영자·이명진·최영식·홍성범, 2002.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연구개발활동 및 시사점: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남광희·윤성훈, 2005. 「우리나라 FDI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2005. 「서비스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자유치 방향과 과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2006. Web Source

서울특별시, 2001. 「디지털미디어시티 기본계획서」

서울특별시, 2006. 「외국인투자」, Web Source

산업자원부, 2005. 「2005년 업무계획(2005년 대통령연두업무보고)」

산업자원부, 2005. 「산업자원백서 2004」

산업자원부, 2006. 「1분기 외국인투자동향」

산업자원부, 2006. 「성공사례집-투자유치 이렇게 했다」

산업자원부, 2006. 「외국인투자 보도자료(2005년 외국인투자 실적발표)」

산업자원부, 2006. 「2006년 업무계획(2006년 대통령연두업무보고)」

산은경제연구소, 2005. 「서비스업 발전의 경제적 효과」

삼성경제연구소, 2002.「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CEO Information 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 2006. Web Source

장윤종·한병섭, 2001.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지원제도의 운용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은행, 2005. 「외국인직접투자조사표」

한국은행, 2005. 「외국환거래법」

한국은행, 2005. 「외국환거래법시행령」

Gallup Korea, 2006.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경영환경 애로 조사: 자료편-서울」, Gallup Report.

Invest Korea, 2004.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 방향」

Invest Korea and KOTRA, 2004. 「2004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Invest Korea and KOTRA, 2005. 「2005년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Invest Korea and KOTRA, 2006.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KOTRA and Gallup Korea, 2006, “외국인 투자기업과 한국경제: 투자

환경, 경제적 효과, 정책적 제안" 설문조사 데이터, 산업자원부.

KOTRA, ITI and Gallup Korea, 2005. 「2005년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

Dunning, J. H., 2005. "Re-evaluating the Benefi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ransnational corporations, 3(1), 23-51

Dreher, Axel, 2006. "Does Globalization Affect Growth? Evidence from a new Index of Globalization", Applied Economics 38, 10: 1091-1110

Golub, S. S., 2003, "Measures Of Restrictions on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357, OECD Publishing

IDA, 2002. Ireland Annual Report 2002

IMD, 2006.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6

Mercer, 2006. World-Wide Quality of Living Survey

OECD, 2003. 「Nar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OECD, 2006. 「Trends in FDI in OECD Countries」

UNCTAD, 2005. 「World Investment Report」

UNCTAD, 2006. 「World Investment Report」

Shatz, H. J. and A. J. Venables, 2000, "The Geography of International Investment," In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ed. G. L. Clark, M. P. Feldman, and M. S. Gertl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영문요약(Abstract)

The Policy Direc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eoul

Project Number	SDI 2006-R-??
Research Staff	Gyoung-Gyu Choi (in Charge) Sung Jin

This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s), which provides a guideline for Seoul, under the new paradigm of the global economy, to regain its competence in the global economy. The research also pursues to introduce a strategy to induce FDIs by selecting businesses that fit well into Seoul's industrial structures and long-term competence.

1.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Judging from the investment motives of foreign companies in Korea, potential market growth is the primary incentive. The factors of increasing importance would be entry into the domestic market, obtaining technological human resources, and R&D environment. We find that investment motive is shifting from domestic market entry to technology or R&D environment. For Seoul, potential market growth and entry into domestic markets are the primary foreign investment motives. Though Seoul's R&D environment, compared to the rest of the country, is highly rated, its production efficiency rated quite low. Therefore, there are few manufacturing foreign companies in the survey that look to Seoul's production efficiency when investing.

IT and R&D environment of Seoul is highly rated by foreign companies, but its production efficiency or industrial infrastructure are usually obstacles when manufacturing businesses consider investment. Therefore, Seoul must strategically attract businesses of non-manufacturing or service industries. Although Seoul is at a disadvantage in providing land necessary for attracting FDI, Seoul takes the higher position in accessability with foreign countries, social

infrastructure, technological human resource, and knowledge assets. We must attract investment by actively assessing such superior core capacities and selecting businesses fit for the future Seoul's industrial structure.

The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IPA) on Seoul's business environment for foreign companies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Essential areas for improvement are labor and tax (high importance-low satisfaction). Employment is also a critical item for improvement (high importance-low satisfaction) in the case of Seoul-based foreign manufacturing companies, but it is in the effort-transfer area (low importance-high satisfaction) for non-manufacturing companies. Distribution channels and R&D are in the effort-transfer areas (low importance-high satisfaction), while location selection and finance are improvement-reservation areas (low importance-low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2006 Categorical Improvement Evaluation of Seoul's Business Environment Comparing to the Whole Nation, while the results generally show similar trends to those of the rest of the nation, 'labor supplement' and 'distribution channel cost' in Seoul are evaluated as high, and 'convenience in communication' and 'indirect cost' is above average. However, Seoul's improvement in 'R&D environment', 'transparency of company transaction processes', and 'convenience in financing' turns out to be relatively lower than the rest of the country; 'Labor relations' are evaluated as below average.

Comparing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sectors in Seoul, non-manufacturing businesses have relatively more improved in 'transparency of company transaction processes', 'R&D environment', and 'indirect cost' compared to manufacturing businesses. However, for improvement in 'convenience in communication', 'service of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axation environment', 'labor relations', and 'distribution costs', non-manufacturing businesses were rated lower than manufacturing businesses.

There are still restrictions that hinder competition, and the company-friendly market policy is yet to be completely settled. Also, there is a need for more regulation on excessive factory installment, less regulation on distribution channel businesses, and more transparency and

clarity of administrative inspection procedures. Through such efforts we must effectively reduce the degree of regulation to the level of other competing cities in advanced countries.

In the outlook of regional headquarters for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Korea has been evaluated as generally unfit for establishing regional headquarters.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non-manufacturing business field, and is related to the issue of opening the service market. Even in Seoul, similar patterns with the rest of the country is being found. However,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based in Seoul consider local market accessability more important for the manufacturing field, while foreign language speaking, experienced human resources is considered relatively more important for the non-manufacturing field.

The reasons Korea was evaluated as not good for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headquarters are lack of foreign language speaking, experienced human resources and lack of consistency in government policies. Those are the areas where immediate improvement is needed.

For expansion of foreign investment, proper labor-management relations, globalization of national awareness, market opening have been mentioned for area of improvement in that order. Meanwhil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in Seoul have pointed to globalization of national awareness, market opening, healthy labor-management relations, showing slight differences in priority.

2. Policy Recommendations

In order to realize potential of inducement of FDI, we must analyze motives and decision factors for FDI, and provide investment circumstances by priority based on Seoul's core competence.

Service businesses should be strategically selected after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actual growth of the industry, spillover effects on other industries, Seoul's core competence, and so on. In this sense, we should select distribution industry, finance-insurance, business service, medical-tourism, cultural-tourism, convention service as the 7 core sectors of focus, and strive to attract FDIs.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focus of the promotion from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to the technology-driven investment for the economic growth,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hubs, and R&D and business hubs in North-East Asia. The country origins also need to be diversified, not just from the US and Japan, but also from the European countries with potential investment power.

It is important to attract domestic capital into service areas through deregulation. In the same vein, there is a need for more deregulation on factory installment, on distribution businesses, and more transparency and clarity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Through such efforts we must effectively moderate the degree of regulation to the level of other competing cities in developed countries.

The FDI policies for service industries are to be implemented within the scope of industrial policies and the proper align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ies are needed to deregulate regulations which prohibit firms' operations.

The excessive competition among regional governments pursuing FDIs may result in excessive provision of incentives and the waste of resources due to overlapped efforts to induce FDIs. To avoid these circumstances,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official or unofficial forums to mak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Even dialogue forums with other neighbor countries may be set up to create synergy effects among complementary activities in the various country regions.

We need to reconstruct the statistic system for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to understand exactly what activities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re doing. Achievement criteria management for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should not be a one-time act, but a consistent monitering policy through development of better, more systematic achievement management monitering systems.

Table of Contents

Summary and Policy Recommendations

Chapter1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2. Research Scope and Methods

Chapter 2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1. Trend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of Home and Foreign
2. Trend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eoul
3. Best Practic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ies

Chapter 3 Policies and System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1. Overview
2. Policies and System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of Home
3. Policies and System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Seoul

Chapter 4 Survey of the Current Situ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1. Overview
2. Business Performan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3. Business Environ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Chapter 5 Policies to Induc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eoul

1. Economic Importance of Service Industry
2. Barriers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Service Sectors
3. Strategic Inducement of Businesses in Service Sectors

Chapter 6 Conclusion

1. Summary
2. Policy Recommendations

시정연
2006-R-30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방향

발 행 인 강 만 수

발 행 일 2006년 11월 30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전화 (02)2149-1000

팩스 (02)2149-1245

값 7,000원

ISBN 89-8052-468-8-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